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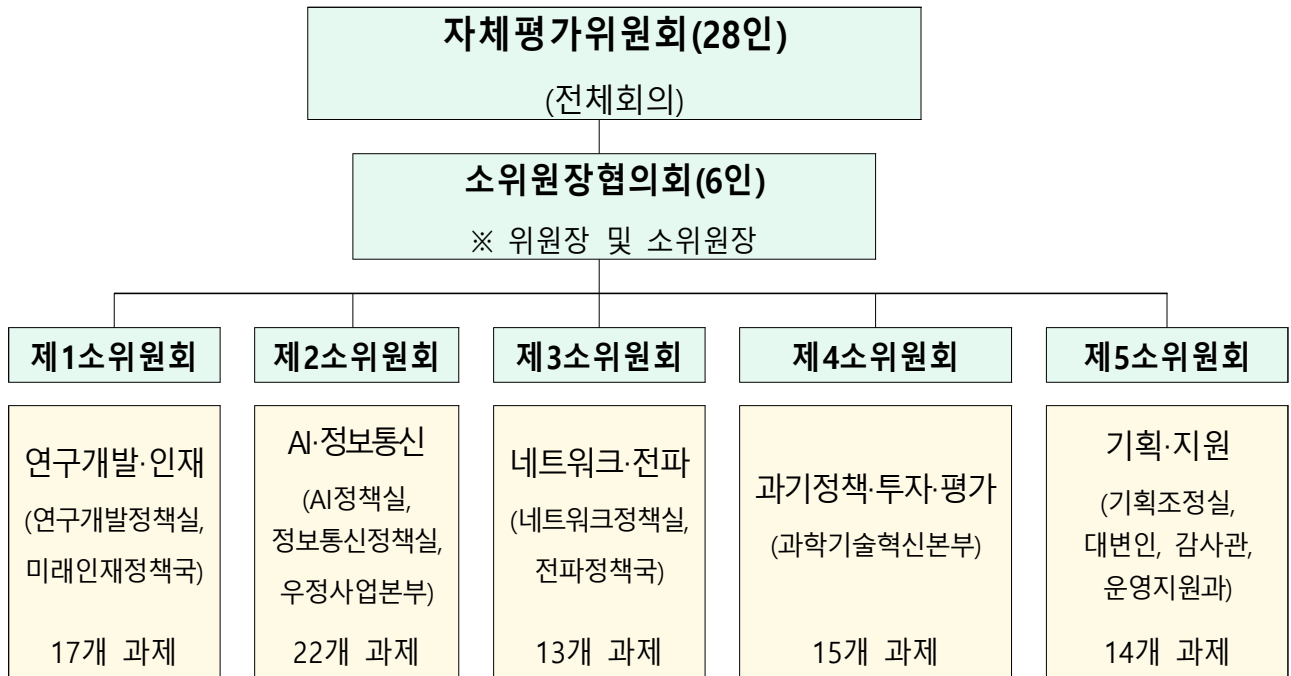
(1) 중점 평가방향

-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외 우수한 점은 가점 부여
 - 창의적, 도전적,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부서 등 평가 시 고려
 - 정책수요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별로 전문가 집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
 -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정책반영 노력, 협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정책효과의 시너지 창출 유도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회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민간위원을 위촉(27인)하고,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내부 위원(1인)을 포함하여 총 28인으로 구성
 - (소위원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주요 정책분야별로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점검 및 자문 등 실시
 - (소위원장협의회) 자체평가위원장 및 각 소위별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평가결과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
- 자체평가위원회 주요 기능
 -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
 -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평가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81개 관리과제를 7개 등급으로 상대평가
 - － 최종점검 전 평가위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전 설명회(온라인) 개최 및 예비평정(서면, 약 2주간)을 통해 등급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점검 시 최종등급 조정 및 결정
 - － 이행상황 점검(대면회의 등) 및 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최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으로 평가점수 작성
 - － 각 관리과제별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제 담당부서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제공
 - － 소위원장협의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평가등급 및 평점 등의 조정여부 결정
- ※ 부서별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이 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장 협의회에서 동 사항을 재검토
-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평가등급 최종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본부 총 77개 부서(과·담당관·팀, 비상안전기획관 포함), 소속기관(총 4실) 등 총 81개 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 ○ 추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의 반영 여부 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여부 ○ 성과지표의 국정철학 및 정부정책 반영도 ○ 성과지표의 국민체감 정도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세부일정 준수 여부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정책 추진단계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여부 ※ 정책만족도 조사,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노력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외부 자문단, 평가위원 등과의 소통 정도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적극성, 달성도, 성과의 질 등을 종합 판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국민체감 등 계획수립 시 기대한 정책효과 발생 정도 ○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협업 수행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 외부 정책고객(전문가 집단)의 만족도 조사
가점	○ 다부처 정책(협업과제)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발생한 경우(3점)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관련 탁월한 성과 사례(각 2점)	

※ 【2025년도 변경사항】전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 반영치를 기존 11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해, 우수 실적이 보다 정확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4년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달성도 산정(단, 달성도가 110% 이상인 경우에도 110%만 인정)	25/30



<'25년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달성도 산정(단, 달성도가 120% 이상인 경우에도 120%만 인정)	25/30

2. 평가결과

(1) 총 평

- 2025년도 과기정통부 본부 77개 부서(과·담당관·팀, 비상안전기획관 포함) 및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4개 실·단) 소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총 81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등급 4개(4.9%), 2등급 12개(14.81%), 3등급 13개(16.05%), 4등급 23개(28.4%), 5등급 13개(16.05%), 6등급 12개(14.81%), 7등급 4개(4.94%)로 집계
 - 우수(2등급 이상)는‘범정부 AI정책 수립·조율 및 AI 혁신문화 확산’등을 포함한 16개 과제, 미흡(6등급 이하)은‘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등을 포함한 16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81개 관리과제의 22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는 111.7%의 평균 달성율을 기록함
 - ‘혁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제도개선 건수’,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건수’,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등은 120% 이상 달성함

(2) 주요성과 (1·2등급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작성)

- ‘범정부 AI정책 수립·조율 및 AI 혁신문화 확산’등 16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새 정부 핵심목표인‘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AI 정책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주요 AI정책·전략 수립을 지원
 - R&D 투자가 국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고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을 가속화
 - 산업계·연구계 등 수요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방형 기획체제로 전환하여 R&D 사업·과제 기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이통사·알뜰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 비수도권-수도권 간 불균형 확대 속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노력
-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대책‘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발표 및 실행을 위한 4대 중점과제 도출 및 추진계획 마련
- AI의 개발·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AI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
- ‘AI 고속도로’구축과 국가 전략산업인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Hyper AI 네트워크 전략’ 수립하고, 6G 상용화기술 및 표준 주도권 확보에 매진

(3) 개선·보완 사항 (6·7등급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작성)

-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등 16개 과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반복되는 대형 사이버 침해를 막으려면 현장 중심 정보보호 대책을 실행·공급망 보안을 의무화하고, 민간 성과 포장을 피하며 화이트 해커 양성에 예산·인프라와 실무 인력·처우를 강화해야할 필요
 - 연구산업 생태계를 지역별로 차별화·통합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해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
 - 예금경영수지 목표 재설정·성과지표 측정식 보완·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과목표를 현실화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 대형 R&D 투자·관리를 혁신하려면 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편을 홍보·소통해 만족도를 높이며, 사전점검체계와 성과지표를 구체화·강화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연구개발 도전·혁신성 및 성과 체감도 강화	1등급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5등급
원천기술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3등급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지원	6등급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태계 조성	4등급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 및 공공·사회문제 해결 R&D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5등급
국가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자력·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및 원자력 국제협력, 수출기반 마련	6등급
첨단연구·산업지원을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고도화	4등급
혁신적 미래에너지·탄소중립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테크 육성	3등급
공공연구성과 활용·확산 촉진	5등급
연구산업 및 민간 기술혁신 추진	7등급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2등급
임무 중심형 연구기관으로 출연연 혁신	4등급
과학기술 인재성장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등급
우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3등급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2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및 우수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4등급
범정부 AI정책 수립·조율 및 AI혁신문화 확산	1등급
국민이 안전한 AI 안전·신뢰 기반 마련	4등급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지원 및 글로벌 전략적 협력 기반 확보	2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 지역 확산	5등급
AI 인프라 확충과 독자 AI 모델 개발 통한 국가 AI 주권 확보	2등급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3등급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클라우드 산업 기반 조성	4등급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지원	5등급
디지털 혁신 전면화·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정책 기획	2등급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확산	4등급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기반 조성	3등급
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강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통한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6등급
AI·SW 핵심인재 양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	3등급
SW산업 및 지역AX 성장기반 마련	5등급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4등급
ICT 산업성장 기반 조성 및 수출 활성화 추진	3등급
디지털 기술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ICT R&D 혁신	4등급
ICT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및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 육성	6등급
우정사업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발굴	4등급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우편·물류 역할 강화	5등급
편리하고 안전한 예금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적가치 실현	7등급
우체국보험 지속가능 경영기반 강화 및 공적역할 확대	6등급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2등급
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환경 기반 조성	6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7등급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확보	4등급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5등급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개선	5등급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1등급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통신소비자 권익증진	3등급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4등급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	4등급
방송·위성통신 기술 및 장비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2등급
국민의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관리 강화	3등급
국민이 공감하는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	6등급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조정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1등급
현장대응형 국가연구개발 혁신정책 추진	2등급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체계 정비 및 연계·협력 강화	4등급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발굴·육성 추진	4등급
정부R&D예산의 전략적·안정적 배분·조정 강화	2등급
효율적 투자전략 마련 및 출연연·국방분야 R&D투자 전략성 강화	3등급
공공에너지 분야 투자의 전략성 강화	5등급
기계소재 및 인공지능·ICT, 양자반도체분야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4등급
생명·기초 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6등급
성과관리·활용 제고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4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체계적 R&D 평가실시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제고	4등급
자율성을 기반으로 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R&D 제도 개선	3등급
연구보안 내실화, 제재처분 개선 및 연구윤리 확보	6등급
효율적인 국가R&D 정보 관리·활용 통한 데이터 기반 연구지원 체계 구축	5등급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혁신	7등급
과기정통부 정책 수립과정의 합리성, 체계성 강화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편성계획 수립·집행 등 재정 전략성 강화	2등급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관리, 성과평가, 행정혁신 지원	4등급
앞서가는 규제합리화·입법 및 대민서비스 질 제고	4등급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능 강화	6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 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 강화	5등급
정책소통활동 지원으로 대국민 정책이해도 제고	4등급
온라인 홍보채널의 활용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 제고	3등급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및 활기차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4등급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전개	6등급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구축	6등급
전략적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	2등급
미주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제고	3등급
구주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ODA 지원	4등급
과학기술·ICT 국제기구 협력강화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관 협력 과학기술 R&D 시스템 구축

- (민간 주도 R&D 기획·투자) 산업계·연구계 등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R&D 사업·과제 기획에 적극 참여하는 新 개방형 기획체계로 전환 추진
- (민·관 협업 프로젝트 기획) 국가전략기술의 미래 분야를 육성하고, 세계를 주도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K-문샷 프로젝트' 기획

우 수 사 례 과학기술 R&D 기획·투자 고도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 개방형 기획협의체 운영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R&D 기획체계로 전환
 - [분야] ('24) 8개 → ('25) 11개(37.5% ↑) / [참여 학회] ('24) 52개 → ('25) 89개(71.2% ↑)
 - [이슈페이퍼 발굴] ('24) 62개 → ('25.10말) 95개(53.2% ↑)
- ◇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기반 'K-문샷 프로젝트' 기획 추진
 - K-문샷 기획 T/F(민간위원 11명) 및 9대 분야별 민간 자문단(분야별 20명 내외) 구성(총 200여명)

○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 고도화

- (전문성 강화 및 노하우 축적) 세미나·워크숍 등 추진하여 DARPA형 기관 운영철학 학습, 한계도전 R&D 운영 매뉴얼 개정('25.9월)
- (밀착관리·점검·홍보) 책임PM 주도의 진도점검(27회)·연차점검(7회)을 통한 연구방향 전환(Pivoting)으로 연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우 수 사 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지원 우수 연구사례

- ◇ UNIST, 세계 첫 '교자성체 메모리 소자 개발로 저전력 고속 AI칩 현실화('25.7. 이데일리)
 -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메모리 소자 개발
- ◇ 에코프로HN, 국립공주대와 차세대 수처리 시스템 개발 착수('25.6. 연합뉴스)
 - 배터리 소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나트륨이 포함된 염폐수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 개발 '레독스 전기투석' 착수

○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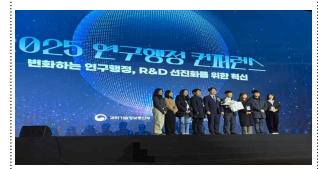
- (현장의견 정책 반영) 국내 연구행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R&D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등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기획
-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경제적 성과창출을 점검, 관련 예산확보로 R&D 소과정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세부사업 中 '기획평가비' 내역사업 : ('25) 175.23억 원 → ('26) 203.76억 원(16.3%↑)

- (연구행정 매니지먼트 개념 확장) 현장과 R&D 기획·평가·관리 선진화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 및 연구행정 전문성·효율성 방향 논의

우 수 사 례 R&D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개최 (12.17. 대전ICC)

- ◇ '변화하는 연구행정, R&D 선진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R&D 기획·평가·관리 전문화 및 선진화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대학·출연연의 연구자, 연구행정가 정부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향 논의



○ 연구현장 소통 강화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체감성과 창출

- (현장소통·성과공유) 찾아가는 현장간담회(6회), 소통사무소(3회), Project 공감 118(9회) 등 소통체계 운영 및 대국민 성과 공유행사 개최

우 수 사 례 현장소통 및 대국민 성과 공유 사례

- ◇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PROJECT 공감 118 등 장차관 릴레이 현장소통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축적되는 연속성 있는 소통체계 운영
- ※ 찾아가는 현장간담회(1·2월), 찾아가는 소통사무소(1·2분기) PROJECT 공감 118(3·4분기)
- ◇ 2025 과학기술대전 개최('25.4.16.~20,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엑스포 과학공원)
- ※ 총 관람객 수 558,269명 / 518개 기관참여 / 849개 프로그램 운영 / 언론보도 907건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K-문샷이 전주기 재설계 기반의 새로운 R&D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 첨단기술 확보 사업과의 차별점이 부족하며, 민관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방식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전략이 행정 개선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 모순 해소 의지가 부족해 보임. 설문 중심의 피상적 데이터 활용으로는 근본 병목 진단·혁파에 한계가 뚜렷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새로운 R&D 모델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며, 진도·연차 점검이 관리 중심 행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실패 용인·성과 중심 지원이라는 점검 취지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정부의 선도형 R&D 시스템 개편이라는 국정기조와 대부분 부합함.하나 혁신적인 신규 사업기획 관점에서 다소 미흡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25년 자평위 검토 결과 반영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준수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적절하나 정책반영 결과가 다소 불확실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높음	신규 사업 수, 제도 개선 건수, 성과홍보 등 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R&D 제도 개선의 정책효과가 '우수'로 보이며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인정	넥스트 전략기술 수립 시 기관 간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0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원체계 개편)** 다양한 연구자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의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창의연구)** 다양성 기반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의 신규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 지원
 - ※ 창의연구 신규과제 : (‘24년) 221개 → (‘25년) 1,304개(약 5배 확대)
 - **(도약연구)**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간소화된 평가를 통해 ‘도약(후속) 연구’ 지원
- **(혁신성·도전성 제고)** 혁신·도전적 연구 풍토 조성 과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기초연구 추진 등을 위해 신규 기초연구지원 사업 도입
 - **(개척연구)** 최초의 질문을 통한 新 학문 분야 개척을 위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 등을 지원하는 ‘개척연구’ 신설
 - ※ 1인 1과제 예외, 중간점검 폐지, 실패 용인 등 제도적 뒷받침 병행
 - **(국가이젠다연구)** 정부가 정책 분야(국가전략기술 유형, 미래 유망형)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가 자유로운 제안을 통해 연구를 수행
 - ※ (혁신전략형)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미래유망형) 신형·기초원천기술 분야
- **(젊은 연구자 지원강화)**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 등을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 **(씨앗연구)** 신입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 신진 연구 內 ‘씨앗 연구’ 신설
 - ※ 연 1억원, 최대 1년 / ‘25년 540개 과제 선정
- **(현장소통 및 제도개선)**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들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연구자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 ※ R&D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연구 환경 주요 개선사항

구 분	당 초('24)	개 선('25)
개인연구(중견) 사업유형별 공모 이원화	▶(상반기(1차))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하반기(2차)) 중견연구 유형1, 창의연구형	▶(상반기(1차))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하반기(2차)) 창의연구형 ※ 동일유형 신청제한 등 연구자 혼란 최소화 및 사업지원 효율화
세종과학펠로 우십(국내) 인건비 계상률 규정 완화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참여 필수(지급 인건비 기준)	▶연구책임자 연평균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참여 필수(지급 인건비 기준) ※ 협약 유예 등으로 인한 월별 인건비 계상률 미충족 문제 개선

우 수 사 례 기초연구 현장소통 및 연구성과 홍보

◇ 지역대학 방문 기초연구 현장 간담회

- 새정부의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및 장관이 직접 지역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IF 상위 10% 논문수와 같은 결과 중심 지표는 당해 연도 예산 투입 및 행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초연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장기, 지속 지원이라는 사업 철학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기존 성과의 의미와 지표를 재분석하여, 차기 사업기획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결실에 의존하는 지표보다 올해의 정책적 지향점이 반영된 '과정 중심 지표' 발굴이 병행되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과 성과 목표의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나 국정기조 연계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이 보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지표 중 자율 창의성 보장정도의 설정 근거가 다소 객관적이지 않아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지연 또는 미완수 일정이 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을 위한 반영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보통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지표와 ‘대학 연구 경쟁력 성장도 및 기초연구사업 연구자 자율성.창의성 보장정도’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IF 상위 10% 학술지 논문 수(건) 지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과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가 불확실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I-1-③

원천기술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반도체) 반도체 R&D 인력·인프라 등 생태계 고도화 및 한-EU 간 국제포럼,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민관협력 운영체계 강화 및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반도체 3社(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MoU 체결('25.3)
 - EU(유럽연합) Chips JU와 함께 반도체 공동연구 추진 및 성과점검,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제2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 개최

우 수 사 례 반도체 분야 생태계 고도화 및 국제협력 기반 마련

◇ 국내에 분산된 공공팹 간 연계·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모아팹(MoaFab)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社 간 협력 추진



<과기정통부-반도체 3社 MoU 체결, 장관(3.27)>

◇ 제2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과 한-EU 반도체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기반 마련



<제2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 1차원(6.16)>

- (나노·소재)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및 성과확산을 통해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사업 효과의 대국민 홍보 추진

우 수 사 례 '나노 코리아 2025' 및 '소재 R&D 연구단 성과공유회' 개최

◇ 나노기술 분야 글로벌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연구 성과와 첨단 나노기술·제품을 소개하는 교류의 장 마련



<나노 코리아 2025, 장관(7.2~7.4)>

◇ 소재 R&D 연구단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소재 분야 연구자 격려 및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한 자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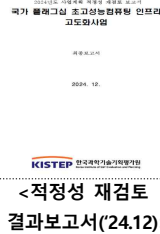
<소재 R&D 연구단 성과공유회(12.9)>

- (슈퍼컴퓨터) '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후 국가 슈퍼컴 6호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 제조사 HPE社와 구축 계약 체결(5.12)

우 수 사 례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예산 증액 및 6호기 구축 계약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 AI 확산 기반 마련

- ◇ GPU 시세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 및 기간 연장을 담은 적정성 재검토 결과 보고서
- * 2,929 → 4,483억원/‘23~’31년



<적정성 재검토 결과보고서(24.12)>

- ◇ Top500 기준 세계 10위권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터 구축 및 최적의 서비스 제공
- * 이론성능 600PF, 저장용량 205PB



<슈퍼컴 6호기 구축 계약 체결(5.12)>

- (과학기술-AI) 노벨상급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AI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을 수립(‘25.11)하고 신속히 이행 중

※ (주요 동향) AI가 과학적 발견의 핵심 엔진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25.11.), 미국(‘25.11), 영국(‘25.11)이 과학기술 x AI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쟁 본격화

우 수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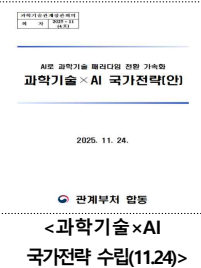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학기술 AI 국가전략」 수립

- ◇ ‘과학기술 AI TF’ 운영(‘25.8~) 및 기관장(부기관장) 주재 현장 소통(20차례)을 통해 연구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 AI 전문가 간담회, 부총리(9.4)>

- ◇ AI 기반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25.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
- *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심기술 확보, ▲핵심 인프라 구축과 같이 All-In-One 전략 마련



<과학기술×AI 국가전략 수립(11.2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정된 '과학기술 AI 전략'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동력이나, 현재 편성된 차년도 예산안은 전략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수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가 원천기술의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AI 응용 분야의 원천 확보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의 원천성과 범위를 규정하는 고민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함.
- AI 전략기술 분야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차년도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과 집중 투자가 시급함.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국정과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자원 배분이 요구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국정과제가 반영되어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지표 설정은 적절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준수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책반영도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보완 노력이 보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보통	성과지표 달성은 >100%로 보이나 우수성과 창출 및 성과 확산 목표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원천 특허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과 그 영향의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정책소통 성과 인정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거버넌스)** 국무총리 소속 양자전략위원회를 발족(3.12.)함으로써 국가 전략 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부처·민관 간 협력 및 국가적 역량 결집 체계를 구축

우 수 사 례 범부처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 ◇ [위원구성 : 20명] 위원장(총리), 부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정부위원 9명과 산·학·연 민간 전문가 11명
- ◇ [역할]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개발계획 심의·의결,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과기정통부-공군 MoU 체결(10.20.)을 통해 기술공급-수요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양자기술의 조기 시장 창출·상용화 기반을 마련
- 양자산업기술법에 따라 양자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추진(11.26.-27. 공청회, 12.4. 실무위 개최)
- **(전략적 R&D)** 양자분야에서 첫 예타사업인 플래그십*을 개시하여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슈퍼컴6호기에 IonQ 양자컴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구축**으로 퀀텀-AI 본격화

* [컴퓨팅, '25.~'29. 총사업비 1,911억원] 초전도·중성원자 컴퓨팅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통신, '25.~'32. 총사업비 2,050억원] 얽힘기반 유망 양자중계기 등 양자인터넷 원천기술 확보
[센싱, '25.~'32. 총사업비 2,150억원] 無GPS항법 고분해능 진단 이미징 기술 개발 등 조기 상용화 추진

** 양자컴퓨팅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 '25.~'28. 총사업비 496억원

- **(빅테크 협력)** 양자컴HW를 넘어 양자-AI를 통한 산업난제 해결을 추진 중인 IBM·엔비디아 등 빅테크와 협력으로 양자전환 우위 선점 기회 마련

우 수 사 례 IBM, 엔비디아 등 퀀텀컴퓨팅을 선도 중인 해외 빅테크와 협력 개시

- ◇ 대통령 UN총회 참석 계기, 과기정통부(+NRF·NST·4대과기원)-IBM 간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 협력 MoU 체결(9.23.) 및 국내 공동연구센터 설립 논의 개시
- ◇ APEC 계기 대통령-젠슨 황 면담 후속조치로서 KISTI-IonQ-엔비디아 간 하이브리드 컴퓨팅 기반의 CoE(연구자 조직) 설립 논의 추진(10.31.)



- (리더십) 국제행사 ‘퀀텀 코리아 2025*’ 개최로 국내외 산·학·연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다자협약체(MDQ·QDG) 및 표준기구 참여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추진

* '25.6.24.-27. 3일간 양재aT센터 개최, 57개 기관 전시 및 72개 강연, 5,700명 이상 참석

- (기반 구축) 국내 대학과 세계적 해외 대학 간 협력 플랫폼* 및 국내 사업단 중심의 인프라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선도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사업, '25.~'29. 2개 파트너십 선발 및 파트너십별 총 사업비 224억원]

①KAIST-MIT: 4개 공동연구그룹 운영, ②포스텍-하버드: 7개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센터 설립

** [퀀텀 플랫폼, '25.~'29. 총사업비 484억원 ①차세대 양자 연구거점(표준연), ②양자활용 연구거점(KIST)]

- 양자 전용 개방형 팹 2곳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기업 등이 소자를 직접 제작·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으로 연계를 추진

*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24.~'31. 총사업비 478억원 ①KAIST('25.12.3. 개소식), ②UNIST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양자과학기술기획은 국가 전략기술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11월 공청회 이후 최종 확정지연되며 정책의 완결성 및 적시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기술 경쟁의 가속도를 고려할 때, 기획과 실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 기반 구축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선도 그룹과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전략,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방안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양자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논문·특허 등은 과거 투자 성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로 시의성 있는 성과지표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기술 진척도·민간 참여·인력 확보 등의 지표 재설계가 요구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국가 양자기술 육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반면, 해당 과제의 계획 내용과 추진 전략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연구성과는 적절한 지표이나, '양자 분야 연구인력 양성수(명)' 지표의 목표치가 당초 360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축소된 측면 고려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일정 준수율을 양호하나, 일부 지연된 과제 존재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정책반영은 다소 미흡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보통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적극성과 성과의 질은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 보이나 인력 확보는 부족해 보임. 정량 지표는 달성했으나 지속적 인력확보 위한 인프라, 플랫폼 확산 측면은 불확실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과기정통부 '26년 바이오 국책R&D 예산안 7,935억원 편성(전년 대비 22.3% 증가)

- (AI바이오) 바이오 연구·산업 대전환의 핵심인 AI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AI바이오 국가전략(안)”(12.18) 수립 및 정부R&D 지원* 확대

* 과기정통부의 AI바이오 관련 '26년 정부예산안은 1,934억원으로 전년(93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우 수 사 례

「AI바이오 국가전략(안)」 주요내용

- ◇ (전략1) 기업과 학·연·병이 함께하는 “AI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 ◇ (전략2) 적용 가능성·파급효과가 큰 5대 분야*의 AI 모델 개발 및 적용
* ①신약개발, ②의료기기, ③바이오제조, ④역노화·노, ⑤농식품
- ◇ (전략3) 바이오·의료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지원



- AI바이오 연구 혁신거점,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모델·AI에이전트 등 주요분야 지원 확대 정부안 반영

※ 주요 신규사업('26년 정부예산안) : AI바이오 혁신거점('26년 102억원),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26년 135억원), AI바이오 기술개발('26년 504억원) 등

- (합성생물학*) 올해 세계 최초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25년이 합성생물학 선도국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제도·인프라 구축

* 합성생물학 : 유전자를 합성하여 존재하지 않던 단백질·생명물질 등을 설계·제작하는 기술 → 미래 바이오 제조·소재·에너지, 농업·환경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

우 수 사 례

세계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

- ◇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 ◇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 ◇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 책임관리

朝鮮日報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B07면 경제종합
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로 제정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에 속도

- (제도) 전문가 자문단 중심으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안) 초안 마련, 안전성·윤리 등 합성생물학 연구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 주도

* (한-OECD 워크숍) 인천 송도에서 영국·스웨덴·호주 등 8개국과 합성생물학 OECD 권고문 논의('25.9월)

- (인프라) 합성생물학 전 과정을 표준화·자동화·고속화하여 실험 및 제조공정을 지원하는 핵심인프라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사업(예타사업, 총 1,263억원('25~'29))

- (차세대바이오 및 미래의료) 뇌과학·역노화 등 新 유망기술 분야 지원 확대 및 신약개발·의료기기 등 분야 연구 안정·지속성 강화

※ 「뇌 미래산업 육성 R&D전략(안)」 마련, 역노화 기술개발('26년 75억원), 첨단신약 타겟 발굴·검증 사업('26년 정부안 36.75억원), 치매의료기술사업('26년 정부안 16.5억원) 등

우 수 사 례 (신규)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예타 통과

- ◇ 의료기기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선점과 보건안보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범부처(과기·산업·복지·식약 공동) 사업 추진

-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 목표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산업·복지·식약, '26~'32, 총 9,408억원)



- (바이오 혁신기반) 정부R&D 연구성과의 7,500억원대 기술수출('25.9월) 및 세계 3위 신약파이프라인* 보유국 도약 등 기술사업화 성과 가시화

* 국가별 신약 파이프라인 순위('24) : 미국 11,200개(1위), 중국 6,098개(2위), 한국 3,233개(3위)

우 수 사 례 정부R&D 대표 기술사업화 사례 - (주)소바젠

- ◇ KAIST 교원(이정호 교수) 창업 기업인 (주)소바젠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을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주)안젤리니파마에 '25.9월 약 7,500억원 기술 수출

- 과기정통부 등 국가신약개발 사업에서 후보물질 연구개발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바이오 안보·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며, 단순 제도 제안이 아닌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검증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K-첨단바이오 성과는 투자 규모보다 글로벌 시장 점유·기업 위상 중심으로 평가하고, 뇌과학·의료기기 등 단기 승산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규제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범부처 원팀 체계 구축이 요구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과 목표가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수립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기술진흥, 기술지원, 인력양성, 자원활용 등 지표는 대표성 있고 적절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일정 추진은 적절히 수행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과 정책반영 노력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목표를 적절한 수준으로 달성하였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적절히 나타났으나,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는 다소 불확실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바이오 재활용 기술 확보 일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정책소통 가점 인정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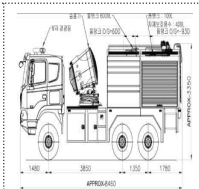
□ 주요성과

- (사회문제해결 R&D) 국민안전 이슈대응 및 행정서비스 혁신 R&D 추진
 - ▲영남권 산불(3월), 노동안전사고(6월), 강릉 가뭄(9월) 등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 산불진화차(대형), 스마트 안전장비, 수난구조장비, 해수 담수화 기술 등
 - ▲치안, 관세, 경호 등 민생밀접분야 공공서비스 고도화
 - AI 현장 감식 및 증거 탐지, 전자코 활용 마약탐지, AI X-ray 판독 보조 등
 - 성과 시연회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구성과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국민안전 긴급대응(ASAP) 챌린지」 개최를 통한 R&D 성과 민간 연계

우수사례

◇ 산불진화차(대형) 개발

- 대용량 수조(3,000L급) 탑재 및 인근 수원(하천, 계곡 등)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산악 신속 이동 진화차 개발



◇ 국민안전 긴급대응(ASAP) 챌린지

- 국민안전 대응 R&D 성과 시연·고도화 및 향후 추진전략 공유



- 융합연구 전략적 기술 확보 방안을 기반으로 R&D 성과 확보 및 확산
 - 융합연구 활성화 시행계획('25.4), 휴머노이드 전략('25.5), 미래융합 유망 전략('25.12)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융합연구 추진체계 및 생태계 조성
 - 경계없는 도전적 융합연구, 9대 미래 원천기술개발 확보, 6대 미래융합 유망기술 선정 등
 - 융합 정책 기반으로 세계 3대 과학 분야 저널(NATURE, SCIENCE, CELL 및 자매지) 게재 30건, mrnIF 99↑ 14건, 특허 14건, 기술이전 12건 등 성과 창출

- 수요 기업과의 기술 이전 및 대국민 성과 홍보 추진 : 상·하반기 융합연구 포럼('25.5,12),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5.5), 데이터사이언스 컨퍼런스('25.9), 무인이동체 워크숍('25.11)
-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운영을 통해 융합인재 석·박사 259명 양성 (156명 취업, 5명 창업, 18명 진학 등), 무인이동체 대학원** 운영을 통해 무인 이동체 인재 석·박사 50명 양성(30명 취업, 1명 창업, 12명 진학 등)
- * 고려대, KAIST, 경북대, 서울시립대, 강원대 등 10개 대학원 ** 서울대, 충남대, 부산대

우 수 사 례

◇ 범부처 융합연구 활성화 시행계획(25.4, 24개 중앙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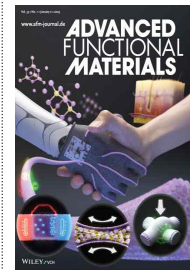
- ①경계없는 도전적 융합연구, ②융합연구 추진체계, ③융합 생태계 조성

◇ 첨단 휴머노이드로봇 미래선점기술 개발 전략(25.5)

- 휴머노이드 일상화 시대 대비를 위한 9대 미래 원천기술개발 확보

◇ 세계 3대 과학저널(NATURE, SCIENCE, CELL 및 자매지) 게재

Nature materials 2건, mrnIF 99.57	Science 1건, mrnIF 98.52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저널 표지
• 선명한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인쇄형 초소형 렌즈	• 특별한 조작 없이도 고성능을 유지하는 2D 페로브스카이트 제작법 발견
• GaN 기판 위에 AA 구조로 쌓은 대형 질화붕소 웨이퍼 제작	• 온도, 인장, 압력 동시 감지하는 고성능 신축성 섬유형 열전 소자 개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연구개발 융합성이 성과지표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3대 과학저널 게재 등 장기 성과를 2025년 성과로 간주하는 데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함. 과거 성과와 신규 기획을 분리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회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R&D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산불진화 차·해수담수화·해저재해 감시 등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 재난의 해결책이 되는 핵심기술인지 불확실함.
- 국민안전 R&D가 일회성 현안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넘어, 예방-대비-대응이 연계된 상시대응형 R&D 플랫폼과 중장기 예방 투자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 목표와 논리적 연계가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가 적절해 보이며 국민체감도도 반영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일정 추진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과 정책반영은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목표 달성은 104% 완료이나, 지표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효과가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적절히 나타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차세대SMR) '30년대 민간주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SMR 개발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및 기반 조성 노력
- i-SMR 표준설계 완료('23~'25), SFR(소듐냉각고속로) 신규사업 착수, 비경수형 SMR 노형별 대형 R&D 사업 기획 추진, SMR 특별법 법안심사 지원 등

우 수 사 례 차세대원자력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선진원자로연구조합 설립('25.2.)

- (선진원자로연구조합) 차세대 원자력 분야 민간 기술 역량 강화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산·학·연 30개 기관 참여



◇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양성센터 2개소(한양대, 울산과기원) 추가 선정('25.4.)

- (인력양성센터) '24~'29년 / 총 200억원 내외 / 국내 대학(원)에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원자력 시스템 설계 등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추진 (센터당 연 14억원, 3개 센터)



- (방사선)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협의회·간담회 등을 통한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추진
- 국가 동위원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및 산업육성 추진전략' 수립 추진,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등

우 수 사 례 국내 최초 사이클로트론 기반 Ac-225 생산시설 인허가 확보('25.5.)

◇ 희귀·난치성 암 치료제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Ac-225(악티늄)은 전량 수입 및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국내 환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허가 문제로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음

- 과기정통부 주도하에 원자력의학원 및 규제기관 간 전방위 협업체계 구축 및 인허가 관련 세부 조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Ac-225 생산시설 인허가를 확보('25.5.) 하였으며, 국내 환자들이 고비용의 해외 진료 없이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형연구시설) 혁신원자력기술개발 인프라 마련을 위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의료용 동위원소 국내공급 및 수출을 위한 수출용 신행연구로 적기 추진

-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일반시설(연구·행정환경관리) 완공 및 방폐물 시설 인허가 심사 중(~'26.6.), 수출용신형연구로 초기전원 가압행사 개최('25.7.) 등 정상 추진

우 수 사 례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 지역 주민 소통('25.1~11. 총 18회)

- ◇ 연구용원자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 건설 과정에서 공사 중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협력 필요
- 장안을 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인근지역 이장단, 기장문화원장 등 지역주민 협의체 대상 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현안 논의



- (국제협력) 양자 및 다자 간 원자력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미래 선진 원자력 기술 확보 및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IAEA 고위급(차관) 협의체 참석, 제60차 GIF 정책그룹회의 국내(부산) 개최, 제6차 한-UAE 원자력고위급협의회 참석, 국제공동연구 지속 추진 등

우 수 사 례 美미주리대 연구로 수출 초기설계 계약 체결('25.4.)

- ◇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운영 중인 연구로의 노후화 및 운영허가 기간 만료(2037년)에 따라 신규 연구로 건설 사업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MPR)이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연구로 사업(NextGen MURR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 체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정책 안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정책적 완결성이 부족하며, 처분시설 로드맵 부재는 원전 산업의 장기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 5개로 나누어져 있는 주요실적 성과지표를 재분류 하고 통합할 것을 추천함.
- 안전성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원자력의 기저부하·경제성 등 타 에너지원 대비 실질적 우위를 명확히 제시하며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국정과제와 연계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유사한 지표는 통합, 재분류할 필요 있음. 지표의 국민 체감 정도는 낮아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일정은 적절히 추진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노력이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지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와 R&D 추진 만족도는 적극성이 떨어짐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정책효과는 적절해 보이나 상위목표 달성도 기여는 다소 불확실해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제도기반

- (법·제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시행('25.9월)으로 안정적 부지확보 근거 등 마련*, 대형가속기 활용 혁신을 위한 방안 수립**('25.6월)

* (法) 가속기 부지 장기대부(최대 50년주기 갱신), 사용료·대부료 감면, 종합시책 수립·실태조사 등

** ▲핵심 과학기술 분야 발굴 및 집중지원, ▲AI-데이터 기반 활용 체계로 전환, ▲법·제도기반 등

2 가속기 구축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장치 설계를 완료 후 본격적으로 가속장치 발주 중(장치 공정률 47%)이며 기반시설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 후 지속 입찰 추진 중
- (포항방사광가속기) 빔타임 부족으로 핵심기술과제 및 산업 지원 확대에 한계, 이에 빔 증개설 예산 확보('26년 110억)하여 본격 구축 추진
- (중입자가속기) 중입자치료센터 갠트리동 증축 및 리모델링의 주요 공사를 완료('25.4월)하고, 주요장치 설치 개시('25.5월)
- (중이온가속기) 고에너지구간 전단부(SSR1) 가속모듈 시제품의 부품 제작완료('25.7) 및 후단부(SSR2) 가속모듈 공학설계 완료('25.7)

3 가속기 운영

- (포항 방사광가속기)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으로 이용자 빔 제공률 유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우수한 연구 성과(논문) 창출에 기여
 - (이용자지원)이용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사광가속기이용자 협회와 함께 교육 강좌(Tutorial),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육성 및 확산
 - (연구성과) '25년 SCIE급 논문 308편 게재(10월말 기준), mrnIF 평균 88.0점으로 지속적인 질적 향상 중
- (양성자가속기) 지속적인 유지 보수, 안정적인 이용자 빔 제공과 빔 제공시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논문) 창출에 기여

- (이용자 지원) 평일 24시간 본격운영(`25.9월~)에 따라 빔제공시간 확대*
 - * 2024년 1,216시간 → 2025년 1,976시간으로 예년대비 약 63% 증가
- (연구성과) `25년 SCI급 논문 22편 게재(11월 기준), IF 평균은 4.8점으로 질적 유지 추이를 보임
- (중이온가속기) 안정화를 목표로 초기운영 단계 및 이용자 빔 실험 지원
 - 저에너지 구간 실험제안서 30건(LoI 8건 포함) 접수, 11개 과제 대상 빔실험 지원 중(`25.9월~12월)

4 인프라기반 강화

- (대형연구장비데이터활용기반) 기획연구 등을 통해 대형연구장비데이터 활용기반을 위한 ISP를 추진하여 대용량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마련
-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연구지원) 국내 24개 기관연구진 193명에게 첨단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을 지원
- (인력양성) 대형가속기 분야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26명 배출하고, 포닥 인원 14명에게 대형가속기 채용을 통한 현장 실무연수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형가속기는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의 수월성을 대변하는 핵심 시설이나, 현재 국제협력 정책은 국내 연구진의 해외 인프라 파견 및 활용에 치중되어 있음.
- 글로벌 연구 거점과의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연구진이 국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속기 구축 공정률 보다는 가속기 운용율(비슷한 해외 가속기와 비교)이 당 과의 성과지표로 적당하며, 논문 게재 수 또는 사용시간 등을 넘어선 경제적 효과 수치를 성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보고 방식이 개별 실적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효율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음. 향후 평가 시에는 투자 규모 대비 성과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성 지표 제시가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공공 인프라 확보의 성과목표와 연계성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가속기 구축 공정률은 해당 과의 성과지표로는 부족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일정은 적절히 준수되어 추진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가속기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 노력이 우수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지표 적극성이 다소 미흡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효과가 가속기 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 적절히 나타났으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구축

-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30년대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 신규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
- KSTAR 운용을 통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과 해외 선도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핵융합 핵심기술 및 가상모형 기술 확보
- 한·중·한·일 협의회 및 ITER 관련 다자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역대 최대규모 핵융합 분야 수주 견인('25년 2,734억원 수주)

우 수 사 례

핵융합에너지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소통 실적

◇ 핵융합 연구현장 방문

- 대통령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장관, 정책실장, AI 수석 등이 KSTAR 시설을 방문(11.7.)하여 연구성과 점검 및 연구현장 관계자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 핵융합 산업 상생 한마당 개최

- 2025 핵융합 산업 상생 한마당 개최(2.13.)를 통해 핵융합 산업체 대상 공공-민간 협력 방안 및 지원프로그램 등 논의(130여개 기업 참여)
- * 지자체(대전시 등) 및 해외기관(美 GA) 참여 통해 민간 핵융합 참여 활성화 논의



○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개발 가속화

- '26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2035 NDC(CCU부문) 목표 설정을 통한 범부처 기후변화 공동대응 추진
- CO₂ 포집·전환 기술개발과 기업 연계 실증사업 추진으로 CCU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규모 CCU 민관협력 실증사업(총 3,806억원) 예타 통과
- 수소기술 민관협약체인 '청정수소 R&D 혁신연합' 출범과 국가 수소 중점 연구실 지속 운영을 통해 청정수소 기술의 국산화와 산업 연계 강화
- 차세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광발전성능(26.3%) 달성으로 태양전지 기술의 주도권 확보에 기여

- 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예측·대응 기술개발과 세계 최초 100% 수소 플라즈마를 통한 폐플라스틱 분해 및 화학원료 생산 기술 확보

우 수 사 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소통 실적

◇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령’에 따른 CCU 기술제품 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 고시안과 CCU 산업육성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산·학·연 의견 수렴(11.14.)



◇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출범식 개최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수소기술 연구자·기업 의견청취 및 과기정통부-중점연구실-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9.9.)



○ 기후테크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 탄소중립 핵심기술(CCU·수소) 난제 극복을 위한 미국·유럽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사업 및 전문가 교류 행사 수행
- 국제기구 회의(COP30·SB62·CTCN) 참석을 통해 글로벌 기후테크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 수요맞춤형 기후기술 실증 추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및 국가 전략기술 측면에서 핵심 과제이나, 2026년 예산 편성은 그 시급성과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의 예산 증액과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로드맵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ITER 사업의 역대 최대 수주는 국내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핵융합 상용화와 한국형핵융합로 개발을 앞당길 핵심 자산임. 이에 상용화 단계로의 연결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있으나 추진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국제협력 활동 건수는 사업기획 및 추진 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대부분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추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개선 보완도 충실히 이행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보통	목표는 초과 달성함 (달성도 111%). 국제협력 활동 건수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인지도 등 질적 향상이 요구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된 정책 수립에 대한 효과와 상위목표 달성 효과의 연계성이 다소 불확실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학·출연(연)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 대상 국내·외 창업탐색 교육·보육 등을 지원하여 공공연구성과 확산 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촉진
 - 실험실창업탐색팀(TeX-Corps) 863개 팀 중 352개(40.8%) 실험실창업으로 2,820명 신규고용 창출 및 6,897억원 투자 유치('15~'25.9월 기준, 누적)
 - 딥사이언스 분야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25년 32개팀) 지원, 대학 연구소-스타트업 개방형 협력 지원('25년 신규 5개) 등 지원 다각화

우 수 사 례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개방형 협력 지원 사례

◇ 고려대학교 Human-inspired AI 연구원 - 에이아이투오

- (내용) 스타트업과 기업계약연구센터 설립* 및 공동 R&D 추진
 - * 계약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교수급·박사급 전문인력 배치
- (주요성과) AI 협상 솔루션 개발로 대기업 납품 계약 체결, IPO 주관 계약 체결



- 연구자, 공공·민간TLO, 기술지주회사 등 혁신주체 간 협력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기술 스케일업을 통한 사업화 활성화
 - 연구자-민간TLO(기존 50건, '25년 신규 25건), 공공TLO-기술지주회사(기존 5건, '25년 신규 5건) 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437건, 창업 7건 달성('25.10월 기준, 누적)
 -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24년 114건 → '25.6월 131건)하여 공공조달과 연계한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

우 수 사 례 공공TLO 역량강화 지원 대표 사례

◇ (기관) 경희대학교

- (내용) 특화기술분야에 대해 연구실·TLO·기술지주회사의 협력 프로젝트(5개 내외) 수행
- (주요성과) 글로벌 기술사업화 통합센터 신설('25년), 우수 연구실 보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자회사 창업(2건), 우수연구실 기술마케팅 실시로 중대형 기술이전 체결(총 5억원 등)



- 지속적 지원 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 등 대학·출연연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추진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25년 532억원 → '26년 930억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25년 202억원 → '26년 569억원) 등 주요사업 예산 확대
-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으로 측정하는 대학원생 창업 실적 지표 신설('25.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단순 창업지원보다 제도·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원 창업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 및 패키지형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로 설정된 '누적 창업 기업수'는 과거의 수치가 산입되어 2025년 당해 연도의 정책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딥테크 창업기업 수 이외의 '연구성과혁신정책'에 정책적 기여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연간 신규 창업 수' 또는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단기 성과를 반영한 지표 발굴이 시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지표 선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계획 자체 수립은 충실히 보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창업 기업 수 만으로는 공공연구성과의 지표로 대표성이 부족하고 정책 반영이 충분하지 않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일정 준수는 보통이며 내용이 해당 과의 성과지표 완성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은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지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지표 자체의 충실성이 떨어짐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가 보이긴 하나 공공연구 성과 혁신 정책과의 연계성은 불확실히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소미흡”임
4. 가점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 역량별 맞춤형 지원 및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
 - (법률 제정) 기업부설연구소 바탕의 기업 혁신지원 근거법으로서 「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월)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 달라진 점 : 독립법 제정, 규제 완화(다수 부소재지 허용 등),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
 - (맞춤형 지원) 글로벌 선도연구소(K-HERO) 육성 신규사업 착수 및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 매출 26억원, 컨설팅지원 3,831건)

우 수 사 례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대표 사례

- ◇ (기관) (주관) 주식회사 스마트지오텍- (참여) 한밭대학교(기술이전기관)
- (내용) 지반붕괴를 사전감지하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센서 및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해당시장의 높은 해외의존도(100%) 감소 및 대국민 안전망 강화에 기여
 - (주요성과) 특허출원 2건, 기술인증 2건, CES2023 혁신상을 포함한 포상·수상 5건 등의 사업성과 창출



- (사기진작) 우수기업연구소 지정('25년 54개 기업) 및 기업 연구 유공자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국가기념일 격상
- (연구산업 진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R&D 수행의 성과 제고
 - (수요기반 서비스 개발) 수요자 기반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R&D 매치업 챌린지 신설(11월)
 - ※ ('25년 성과) 기술이전(84건), 국내·외 특허출원/등록(36건), 시작품 제작(10건)
 - ※ (매치업 챌린지) R&D 서비스 수요 발굴·선발하여 최적의 공급 매칭 → '26년 후속 연구지원
 - (지역 연구산업 활성화) 연구산업진흥단지의 특화분야(대전/장비, 부산/주문연구) 지원을 고도화하여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 ※ (연구산업진흥단지 성과) 산학연협력 R&D 9건, 성능평가 및 실증지원 11건, 기술컨설팅 17건, 기업 네트워크 활동 지원 7건, 기업 홍보 5건 등

- (학연 협력) 4개 권역별 사업단을 중심으로 공동대학원(부산대-생기연, '25.2)과 공동연구실(경북대-ETRI, '25.4)을 설립하여 기술이전, 공동기획

우 수 사 례 학연협력 거점 마련 대표 사례

- ◇ (기관)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등 4개 플랫폼
- (내용)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대학-출연연의 인력 교류 제도화 및 지원, 공동대학원 설립 및 공동연구실 개소
- (주요성과) 인력교류지원 사업 신규 착수('25.6, NST), 4개 권역 내 학연의 학연교수제 제도화('25.6), 부산대·생기연 공동대학원 설립('25.2, 경북대-ETRI 공동연구실 개소('25.4)



- (혁신 장비) 기업수요 기반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장비 로드맵 마련 및 연구장비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R&D 지원 등 사업 추진
- (첨단혁신장비 국산화)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 개소(3월),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출범(7월) 등을 통해 후보장비 도출 및 연구 장비 로드맵 마련
 - * 시급성·파급효과를 고려한 15종 후보장비 도출(11.20, 총괄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안 마련 추진('26년 상반기)
- (맞춤형 지원) 연구장비 R&D 지원으로 연구장비 국산화 성과 창출 및 취업 연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장비 기반조성
 - * 오가노이드 기반 약물 스크리닝 연구장비 국산화('25년 매출액 9억), 기술이전 9건, 전문인력양성(70명)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역 단위로 분절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적 필연성 및 차별성이 다소 미흡해 보임. 전국 단위 생태계 조성과의 비교하여 지역별 추진이 갖는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순한 수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역선택 방지와 우수 기업 발굴을 통한 성과 창출 사이의 최적 균형점에 대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 내용이 충실하며 국정과제 반영이 되어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지표는 대표성이 있고 적절하며 체감도 반영이 되어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을 준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반영이 적절한 수준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은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지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설정 적극성은 낮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은 적절해 보이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기여한 정도가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소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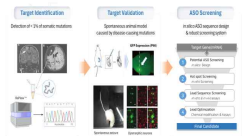
- (총평) 비수도권-수도권 간 불균형 확대 속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노력이 우수
 - 특히, 주요 국정과제* 관련 지역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재정 지원 외에도 관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정책 등 종합적인 개선 성과가 탁월
- * (26-5) 지역자율 R&D지원으로 지역혁신역량 제고
- (특구 사업화 지원) 특구를 통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재정(R&BD, 펀드), 규제혁신, 인프라, 제도운영 등 전방위적인 지원 강화
 - (사업화 전주기 지원) 특구 내 우수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R&BD-기업성장 등 사업화를 전주기 지원하여 공공 연구성과를 지역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
 - (AI·글로벌 사업화 지원) 특구 AI기업 지원 추경 예산(100억원) 확보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신설(50억원) 등 급변하는 산업·시장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노력 우수
 - (규제혁신)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우주 발사체 규제를 정비하여 우주 산업의 규제 애로를 혁신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 추진
 - (사업화 기반 조성) 1,546억원 규모의 펀드 운용, 500억원 규모 펀드 신규 조성, 강원특구 신규 지정 및 전북·대구특구 확장 등 기반 조성 노력 우수
 - (연구소기업 제도 개선) 우수 딥테크 연구소기업 육성, 이해충돌방지법 특례, 기술지주회사 참여 강화 등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성과 우수

우 수 사 례 누리호 4차 발사 지원 및 규제 법령(우주개발진흥법) 개선

- ◇ 특구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 시설에서 제조한 화약류를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막혀, 누리호 발사 지연 위기
 - 규제부처인 우주항공청, 경찰청,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누리호 발사를 지원하고, 이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규제 자체를 개선



- (지역 자율 R&D 추진) 5극3특 지방정부, 연구자, 정책전문가 등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자율 R&D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
- (특구 경제적 성과 창출) 특구에 대한 지원 노력만이 아니라 대형 기술 이전, 대규모 투자유치 등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
 - (대형 성과 창출) 특구 내 축적된 우수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7,500억 규모의 기술이전(소바젠)을 달성하는 등 대형 성과 창출
 - (글로벌 성과 창출) 나스닥 상장(한다랩),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 공식 파트너 선정(SOS랩), 40억원 규모 납품계약 체결(다이내믹인더스트리) 등 성과 창출

우 수 사 례	연구개발특구 기업 대형 성과 창출
◇ (소바젠) 글로벌 제약사 대상 7,500억원 규모의 신약 후보 기술이전('25.9) - (특구 / 기업 개요) 대덕특구 /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개발 기업 - (지원 내용) 특구펀드 지원('20년), IPO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25년~)	
◇ (인투셀) 시총 8,686억원 달성('25.11월 기준) - (특구 / 기업개요) 대덕특구 / ADC플랫폼 기술 개발 기업 - (지원 내용)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14년), R&BD('15년), 특구펀드('16, '18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SCIE 논문, 고용성과가 있으나 지역 문제 해결과의 직접 연결 설명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특구 또는 혁신클러스터 확산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하나 과기부의 관점에서는 지역적 균형성장 보다는 실질적 기술역량의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 진행을 해야 할 것임.
- 부처별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진입 병목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개발-상용화를 아우르는 통합 규제 혁신과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와 논리적 연계성 있고 정책개선 의견 반영이 되어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지표는 적절해 보이며 국민 체감도 반영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을 준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과 정책반영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보통	목표는 10% 초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의 적극성도 적절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연구개발 특구 내 성과가 가시적이며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도 적절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소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규제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규제합리화를 도출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중장기·임무 중심 출연연 재정구조 전환
 - PBS의 단계적 폐지 등 출연연 재정구조 혁신을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26-3)에 반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새정부 출연연 정책방향(안)’ 마련

우 수 사 례 출연연 재정구조 혁신을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

◇ (국정과제 26-3) 자율·전문·성과 기반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재정구조 혁신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 국가 임무 중심 연구를 지원하는 ‘전략연구사업’ 신설('26년 3,666억원) 및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규모 확대·신진연구자 지원체계 신설 등 융합연구 지원 강화

우 수 사 례 중장기·임무중심 연구 전환을 위한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 규모 확대

◇ (신규 선정규모) '24년 5개 연구단 연 1,000억원 → '25년 10개 연구단 연 1,250억원

- '25년 선정 연구단 : ①양자컴퓨팅(표준연 등 4개 출연연), ②CCU(화학연 등 7개 출연연), ③핵융합(핵융합연 등 3개 출연연), ④AI휴머노이드(기계연 등 3개 출연연), ⑤우주항공반도체(ETRI 등 4개 출연연), ⑥암유전자분석(재려연 등 3개 출연연), ⑦뇌(한의학연 등 2개 출연연), ⑧수소연료전지(에기연 등 4개 출연연), ⑨이차전지(KBSI 등 3개 출연연), ⑩질소자원화(기계연 등 3개 출연연)

○ 성과중심 평가·환류체계 개선 및 연구자 처우개선

- 기존 계획 대비 달성도 평가에서 벗어나 대표성과 중심의 통합 평가체제로 개편하고 연구성과와 직접 연동되는 인센티브(우수연구자 성과상여금, '26년 51.2억원) 신설
- 우수 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 수혜대상 확대(매년 기관별 연구직의 1% 내외 선정 → 2%)
 - *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실적이 우수한 고경력 연구자를 정년(61세)이후 65세까지 고용
- 석학급 연구자 대상 특별채용 및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한 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운영하여 우수 연구자의 출연연 유치 활성화('25년 기준 4건)

○ 출연연 자율적 책임운영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규정 공백을 방지하고 출연연 기관 운영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는 출연연 운영규정(훈령) 제정('25.3월)

우 수 사 례 출연연 운영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정을 통한 기관 자율성 확대

◇ 출연연 운영규정 주요내용

- (조직) ①자체재원 활용 자체 정원 운영 자율화, ②결원보충 범위 확대로 고용 및 파견 휴직 부담 완화
- (인사) ①석학급 연구자 대상 별도 보수체계 적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한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운영, ②우수연구원 운영 규모의 실질적 확대
- (예산) ①인건비 이중관리(총인건비인상률, 실행인건비) 방식을 개선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한 출연연 처우개선을 관리, ②실행인건비·경상비 조정, 사업비의 과제간 조정 등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③기술료 수입의 정규직 인건비 활용 허용

- 출연연 산·연 협력 지원, 지역조직 운영 내실화, 출연연 해외조직 공동활용 등 산학연 협력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간 협업 문화 조성

우 수 사 례 출연연 교류·문화행사(연구이음마당) 개최

- ◇ 출연연 구성원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전 출연연이 참여하는 교류의 날을 지정·운영(연구 교류회, 연구-행정 네트워킹, 오픈 세미나 등)하여 출연연간 소통의 장 마련('25년~, 분기 1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략연구사업 신설은 강점이나 기관간 배분 기준이나, 선정평가 방식 등 운영원리가 불명확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출연연의 자율적 관리 운영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출연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하는 책임을 갖도록 출연연 특화 임무 재정립을 통해 중복 연구개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는 연구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결단이 지만, 추진 속도·범위·재원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부재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 및 국정기조와 연계성 있으며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 의견 반영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가 대표성은 보이나 “자율성 보장”은 객관성이 부족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준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보이나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정책반영은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등 소통에 충실하였으며 개선 보완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목표치 추가 달성 하였으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출연연 구조 전환에 나타났으며, 자율성 확대에도 나타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소미흡”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대책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 발표 및 실행을 위한 4대 중점 과제도출 및 추진계획 마련
 - ①국가과학자 제도 도입, ②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 ③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 ④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

우 수 사 례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 수립·발표

-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9개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공동 TF를 운영하며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통하여, 정책의 실행력 및 실효성을 담보
- ◇ 정책 수요자 의견 청취를 위해 대상별(연구계, 학계, 지자체 등) 실무회의 및 토론회 등 현장 소통 지속 추진(10회 이상)
 -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발표(11.7) 및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안건 상정(11.24)



-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5.6)하여 이공계 인력조사 대상을 확대 개편하고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
 - 대학(원)생,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04~'24) 대부분 선언적, 최소 개정 → ('25)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을 대폭 보완하고 시책마련 지원근거 신설

우 수 사 례 이공계 전주기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 ◇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24.12.20)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
 - 이공계 인력조사의 대상 및 범위를 추가하고 방법 구체화
 -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콘텐츠 및 문화활동 지원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의 교육,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신설
 - 연구생활장려금 관련 규정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대상 구체화,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 국내·외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사업) 정부 유일의 연구자 유치사업인 브레인풀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의 전략적인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활용 지원
- (교류) 제3회 세계한인과학자대회를 개최해 19개 재외한인과학자협회 등 해외 우수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자산화하고 한인 과학자 성취 공유
- (제도) 국가 전략분야에 필요한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법무부 협의 완료), 정주환경 개선 등 유연한 유입환경 마련

* ① 영주귀화패스트트랙을 기존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지방거점국립대학을 포함 20여개 이상의 우수 일반대학까지 확대하고, ② 탭티어 비자에 연구분야 신설 등

우 수 사 례 인재유치 홍보 로드쇼(한미 연구 교류·협력 간담회) 개최

- ◇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해 10월~12월까지 美 현장에서 국내 R&D 정책 및 유치 사업을 설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실리콘벨리, 뉴욕 등 美 주요 도시 현장 홍보
- ◇ 채용 정보 제공뿐 아니라, 선배 과학자의 ‘멘토링’ 등 현장에서 깊숙이 소통하며 네트워킹 강화 및 국내 복귀를 유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외 인재 유치 성과에 대해 기대 수준 대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년 대비 실적 등 비교가능한 지표를 통해 성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재외 과학자 유치를 균형 있게 강화해 국내 인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 및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고 추진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지표 설정이 대표성 있고 적절하며 정부정책 반영도 높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 실적은 100% 준수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목표에 부합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높고, 정책반영 노력도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목표는 모두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목표 설정의 적극성이 미흡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인재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며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가 높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우수”임
4. 가점	협업	인정	인재유출 방지 TF, K-STAR 비자트랙 신설 등 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과학영재] 미래 인재발굴 및 육성

- (영재학교) 과기원 부설 AI 특화 영재학교(충북/광주) 설립 지원 및 과학영재정책 선진화 정책연구를 통해 영재학교 확대 방향 설정
- (과학영재) 영재교육원 온라인 先교육 등을 통한 잠재 과학영재 발굴 확대, 과학고·영재학교 R&E 활동의 질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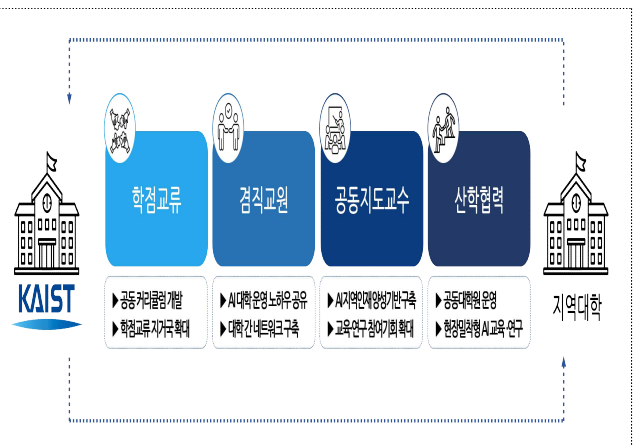
* 4차 계획('23.~'25) 만료에 따른 제5차「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기획

○ [과기특성화 대학·대학원] 핵심 고급인재 성장지원

- (4대 과기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등 우수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AX전략을 통한 지역·산업 기여 확대
- (UST) 국가전략기술 융합전공 확대 및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
- (고등과학원) 세미나·학술행사 등 국제 연구교류 허브 역할 수행 및 해외석학 초빙·지원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 창출

우 수 사 례 4대 과학기술원 기능·역량 강화

- ◇ 우수인재의 해외이탈을 막고, 산학연 협력·융합연구 등을 통해 경력개발을 집중지원하는 사업 신설
- ◇ 과기원에 AI 단과대를 신설하고 지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유·확산, 교원 겸직, 학생 공동지도 등 지역인재 양성 협력
- ◇ 지역AX 실증과 연계해 AX 산학협력·교육·창업 등 지역 구심점 역할 강화 및 과기원 학사·연구·행정 전반의 AI 혁신 추진



○ [청년연구자] 안정적 학업·연구 환경조성 및 성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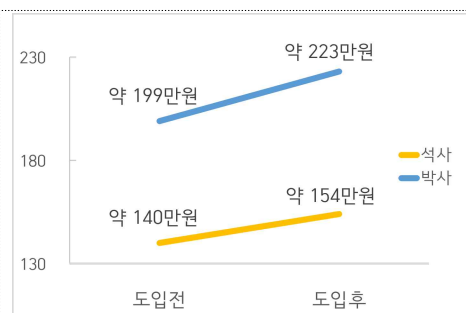
- (장학금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 지원 목표 국정과제 반영('30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생 약10%인 1만명 지원)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35개 대학(대학원생 약 5만명)에 지원 착수 및 학생지원정보 통합관리 촉진('26년 예산 대폭 확대, 정부안 830억원)
- (병역제도 개선) 청년연구자의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 (재직자 역량 강화) 산학매칭 공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석박사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석박사」 신규 착수

우 수 사 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강화

◇ 국정과제 내 청년 과기인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서 연구생활장려금 및 이공계 장학금 확대 내용 반영

◇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후 이공계 대학원생에 학생인건비 최저기준* 보장을 통해 월평균 지급액 향상

* 매월 석사과정생 80만원, 박사과정생 110만원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후 월평균 지급액 변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학부 단계에서 의대 선호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이공계 인재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학영재 관련 성과가 학술 성과(KCI 8건) 외에도 있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여 성과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 및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고 추진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지표 설정이 대표성 있고 적절하며 정책 반영도 높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우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높고 정책반영 노력도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목표는 초과 달성(107%) 하였으나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다소 미흡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대부분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큼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우수”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과학문화)** 다양한 체험·소통·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콘텐츠·서비스 지원을 통한 과학 소통 확산 및 국민-과기계 간 접점 확대
 - (다양한 주체 참여)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및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통합 개최로 역대 최대 프로그램 제공 및 방문객 참여
 - (뉴미디어 활용) 대중 참여·접근성 높은 유튜브 및 방송·OTT 활용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국민-과기계 간 소통·참여의 장 마련
 - (지역확산/생활밀접) 지역 특성 반영 거점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운영, 생활주변 시설 활용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 제공

우수 사례

◇ 대한민국과학축제

- ‘지역-민간-과기계-공공’ 협력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성과 전시 등 역대 최대 프로그램 운영(849개), 최대 관람객 방문(55.8만명) / '25.4.16.~4.20./ 대전



- **(과학관)** 국공립과학관 건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전국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과학문화 확산 기반 구축·확대
 - (과학전시·체험 활성화) 국립과학관 특별기획전, 과학체험 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문화 소통·공감대 형성
 - (지역인프라 확대) 국립 전문과학관 개관¹⁾ 및 신규 건립²⁾, 지역과학관 인프라 확충³⁾ 등 지역 과학문화 확산 기반 구축·확대

우수 사례

- 1) 개관(11.7) : 생명·의료 특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21~'25, 총사업비 392억원, 연면적 7,006㎡)
- 2) 건립현황 : 탄소중립 특화 국립 울산 전문과학관, 지구해양 특화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 3) 지역과학관지원 : 소재분야 공립 광양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항공우주 공립 진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 신규 선정(밀양 1개소) 등

- **(여성과기인)** 생애주기(진학→취.창업→경력성장) 맞춤형 지원 및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체계 구축
- **(이공계 유입)** 자기주도형 공학연구팀¹⁾ 지원을 통해 차세대 여성과학 기술인을 발굴하고, STEM 분야 진로멘토링²⁾ 확대

우 수 사 례

- 1) 여학생 이공계분야 진출성과 : ('23) 61.7% → ('24) 66.9%
- 2) 진로·진학 멘토링 참여자 수 : ('24) 357명 → ('25.10) 593명

		
재직자 네트워킹 포럼	공학연구팀제 결과발표대회	이화여대 전공 체험 활동

- **(경력유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유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및 경력복귀 지원, 육아기 과학기술인 긴급돌봄 지원** 시범 도입

* 대체인력 지원 ('22) 111명 → ('23) 115명 → ('24) 232명 → ('25.10) 293명

** 긴급돌봄 지원: 36건 ※ 주말·심야 실험 등 긴급 돌봄상황에 대한 바우처 지원

- **(W브릿지 고도화)** AI기반 커리어지원 도입, 역량진단 도구 신규 개발 등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플랫폼 서비스 확대

※ AI 기반 일자리 추천 및 인재 추천 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 ('25) 4.2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여성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인재 양성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 분석과 중장기적 기획 보완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올해 청소년과학활동지원의 참여 규모가 국내 102명, 국외 17명 수준인데, 청소년과학활동지원의 과학문화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 대상 및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와 계획의 논리적 연계성 보이며 전년도 정책개선 제언 반영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노력이 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체감도 반영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우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협의회, 대국민 행사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관람객 재방문을 등 새로운 지표도 의미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과학문화 조성과 국민 소통 측면에서 의미있게 나타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우수”임
4. 가점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강화
 - 연구실 예산 및 인력 확대, 안전의식 고취, 책임체계 정립 등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실안전 강화 대책 방향 마련
 - 여러 관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노력
 - 배터리 화재 등 최근 사회 이슈에 따른 연구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및 기준 개발
 - 연구실 재난 사회재난유형 신설('24.7)에 따라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 임무·역할 규정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 사회재난 유형에 '연구실 재난' 유형 신설('24년) 이후 최초 범정부 훈련을 실시하여 부처간 협업체계 및 연구실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연구실 현장검사 및 컨설팅, 주요 안전사고 분야 현장점검 등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지속 노력
 - 연구실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교육 영상 제작, 캠페인, 연구실안전주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실 안전 의욕 고취 노력
 - 우수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강화
 - 다양한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포상하는 등 사기진작 기반 마련
 -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마련 및 예산 확대 반영 노력
- ※ 설문조사 실시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는 등 타부처와 협업으로 사업 활성화 추진 노력
-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안) 마련 노력

우 수 사 례 연구실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 ◇ (내용)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연구실 리튬배터리 화재 재난 상황에서 부총리 주재하에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 점검
- ◇ (성과) “연구실 재난” 유형 신설 이후 최초의 범정부 합동 훈련으로, 현장 훈련과 유관부처가 참여한 중수본 훈련을 연계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정책은 신규사업을 통한 고용 촉진을 넘어 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스템 차원의 종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해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990개 과정, 43만 명 이수, 341개 콘텐츠 개발 등 양적 성과는 매우 크나, 형식적 교육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될 수 있어 교육의 질 제고 및 현장 변화로의 연계 성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와 계획의 논리적 연계성 보이며 전년도 정책개선 제안 반영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노력과 국민체감도 반영 노력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이 다양하고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우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연구실 안전강화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높고 정책반영은 적절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목표치 적극성은 보통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해당 과제의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에 사고의 횟수가 감소한 정도의 반영이 필요함. 정책 영향이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도 좀 더 가시적일 필요 있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는 “우수”임
4. 가점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새 정부 핵심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AI 정책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주요 AI정책·전략 수립 지원
 -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전략으로, AI분야 국정과제 수립 지원
 - 새 정부 AI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과제를 담은 ‘AI액션플랜 추진방향’ 수립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격상 및 실질적 범부처 협력·조정 플랫폼인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지원
-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기업들과 AI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AI허브 기반 조성
 -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과의 MoU 체결로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 내며 세계적 수준의 AI인프라 확충 추진
 - (블랙록 MoU(9.22)) 국내 AI·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아시아 태평양 AI허브 구축 등
 - (오픈AI MoU(10.1)) 한국 AI 생태계의 지역균형 발전 협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국제 AI데이터센터 구축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등
 - (엔비디아 MoU(10.31)) 최신 고성능 GPU 공급 및 투자, 피지컬 AI 역량 강화 등
 - (한-UAE 전략적 AI 협력 MoU(11.18)) AI분야 연구자·전문가 교류 지원, UAE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AX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촉진 등

우수사례

APEC 정상회의 계기 엔비디아 업무협약(MoU) 체결

- ◇ APEC 정상회의 계기, 우리부-엔비디아-현대차그룹 3자 간 전략적 MoU 체결로 피지컬 AI 분야 글로벌 혁신 선도를 위한 발판 마련
 -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장 공급 합의



-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토론회 등을 통해 AI 기술, 일자리 변화, 딥페이크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공론의 장 마련
- 특히, 미래세대(청소년·청년층)의 생각과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

우 수 사 례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 ◇ 과기정통부 - 문체부 협력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 ‘한국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창작자를 대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 공모 및 우수 콘텐츠 시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시된 3가지 주요 내용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3가지가 필요함
- 주요 내용에 제시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중 ‘정책전략 수립 건수’보다는 결과 지표 위주의 지표 발굴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국정지표에 부합되게 적정한 계획이 수립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제시된 성과지표와 주요 내용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답페이크 등 사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정책반영에 적극적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새 정부의 AI정책 방향과 대규모 투자계획 등 AI대전환 추진 방안 등을 주요 언론사, 홍보매체 대상 AI 전문가 참여 AI 타운홀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제시된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향후 주요 추진 내용에 부합한 지표 발굴을 권고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글로벌 AI협력 강화부분에서 우수하게 나타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총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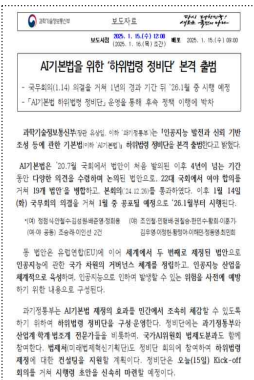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학·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을 통해 총 70여차례 의견수렴을 토대로 법률 규정을 구체화·명확화
- AI기본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5.11~'26.1) 및 관련 고시 행정예고 추진
- * 해외기업(9.18, 10.21), 학계(9.23-25, 10.22), 콘텐츠기업(9.24), 국가AI전략위(운영위(9.24), 글로벌분과(9.26), 사회분과(10.2)), 대한변협(9.29) 등 설명회 진행

우 수 사 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외부 의견수렴 진행 현황

의견 수렴	일자	
■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 회의	1월~5월	총 74회 의견 수렴·검토 진행 정비단 전문가회의(46회), 산업계 의견수렴(20회), 관계부처 협의(6회), 시민단체 의견수렴 (2회) 등
■ 하위법령 정비단 워킹그룹별 회의	수시	
①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안전성 확보 의무 ③ 고영향AI 판단·확인 ④ 고영향AI 사업자책무 ⑤ AI기본권 영향평가		
■ 대기업(플랫폼, 통신사 포함) 대상 의견 수렴	4.11	
■ 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의견 수렴	4.17	
■ 관계 부처 대상 AI기본법 설명 및 의견수렴	5.15, 8.29	
■ 하위법령 제정 현황 국회 설명	7.11~18	



- 카카오의 AI모델(카나나)에 대한 안전성 기본평가(유해성·편향·보안 등) 추진('25. 6월) 및 발표('25.12월)하고, AI안전성 공동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상호 반영
- 국내·외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AI안전성 평가 데이터셋(평가를 위한 프롬프트 시나리오) 마련 및 공개('25.11월)
- AI 안전 기술 표준화 및 안전 규범 공동 수립 등을 위한 '국제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회의 개최(1월, 7월, 12월)

※ 미국, 영국, 일본, EU, 싱가포르, 캐나다, 대한민국, 프랑스, 호주, 케냐 10개국

우 수 사 례 AI 안전성 평가체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

- ◇ '국제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한국, 미국, 영국 등 AI안전연구소간 오픈소스 AI모델(딥시크 등) 공동테스트(2회) 및 양자회의(5회) 추진



- 고성능·다양성·자율성을 갖춘 첨단 AI의 실존·잠재 위험을 완화·제거하기 위한 AI Safety 핵심기술 개발('25~'28)
 - ①딥페이크 탐지·대응기술, ②AI모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성 기술('25.2월~)
 - ①AI 편향성 식별·제거, ②AI정렬(윤리원칙에 부합하게 조정) 기술개발('25.4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2026년 연초에 AI기본법 시행을 앞둔 일정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게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마무리하지는 못함
- AI안전성과 신뢰성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한 가시적인 성과와 불확실성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기본법이나 AI 활용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높으나 AI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기업들은 규제로 인식하는 등 인식에 대한 간극이 줄어들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3강 도약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 AI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AI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균형적으로 더욱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거버넌스 확보하고 AI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체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이를 위하여 AI 모델 및 시스템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도와 임팩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일정에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AI 안정성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의 안전성 평가결과가 해외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국정과제 23-2, 23-3 등과 부합되며 관련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법령 제정 대국민 의견수렴, 안전성 평가 건수 등은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되나 대국민 의견수렴과 관련 결과지표 등 적극적으로 반영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추진 일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하위법령 제정 등은 국회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조기에 추진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산학연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채널도 가동 기대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외부자문단, 평가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 보다 적극적인 환류체계 구축하여 상시 소통체계 보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기본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산출지표보다 결과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 실제 AI안전성과 신뢰에 대한 국민인식이나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 등도 반영한 지표 고려. 안전성 평가건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요 모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안전성 평가 노력 필요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AI신뢰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로 존재
	3-3. 정책성공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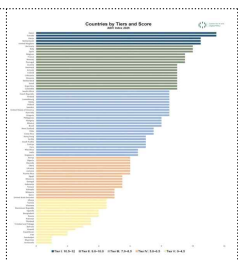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의 개발·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AI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함
 - 투명성 확보·AI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후 지속적인 의견수렴(기업과의 간담회,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 관계기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AI기본법 이행점검 제도(사실 조사, 국내대리인 제도 등)를 마련하여 AI기본법 실효성 확보
 - ‘AI윤리기준(‘20)’에 따른 AI윤리 실천·확산을 지속 지원하고 AI기본법 시행(‘26.1)에 따른 AI윤리원칙,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 마련 추진
 - 민간의 AI 검·인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중심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발족(9.30.)을 통해 민간 중심의 AI 신뢰·안전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AI윤리영향평가(채용서비스 분야) 및 AI사회적 영향평가(일자리와 에너지 분야)를 통해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우 수 사 례 AI와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상위 선도국’ 그룹에 포함

- ◇ AI 디지털정책센터*가 발표하는 AI와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올해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상위 선도국’ 그룹에 포함
- * '21년 설립된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단체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 AI 정책 자문 제공
- 민주적·참여적 AI 정책 추진 구조, 책임성 있는 AI사용을 위한 제도화, 국제 AI 윤리 기준 준수 등이 높은 평가 요소로 작용



- AI정상회의 등 다자협력체 내 아젠다 주도,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국내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AI 협력 기반 마련하여 AI분야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
 - ‘AI 강국 도약’을 위한 프랑스 AI행동 정상회의, 남아공 G20 AI TF 참여 등의 글로벌 다자협력체 활동 및 오픈AI, 뮌헨 그룹 등과 같은 글로벌 AI기업과의 협력방안 논의
 - 한-아세안 디지털 플러그십(KADIF)의 일환으로 데이터컴퓨팅 자원 등 AI 기반 조성, 인적 역량 강화, AI 활용 확산 등 아세안 AI·디지털 발전을 종합 지원(~’30, 3천만불)

- AI를 의료 영역에 접목하여 국민·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공·지역 등 의료현장에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임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AI융합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명	클라우드병원 정보 시스템	의료AI클리닉	AI응급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디지털 전환	의료AI교육
주요 성과	■ 총 18개 의료기관(3차 12개, 2차 4개, 1차 2개)* 클라우드 기반 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진 업무보조 서비스 제공(협진 문서 자동 생성 등)	■ 총 18개 의료기관**에 총 14개의 의료AI 솔루션*** 도입 및 사용 효과성 검증 지원(3,4백만명 대상 실증(활용))	■ 지자체(전남 여수순천·광양 구급차 24대, 의료기관 12개) 대상 AI응급의료서비스 확산 ■ 의료기관 평균 응급시간 단축(약24분→2분대)	■ 공공의료기관 23개**** 대상 질환진단 보조 AI 등 도입 지원 ■ 지역기관 45개소(약 9만명) 추가 확산	■ 의대 AI 교육 정규과정 개설 및 교육(8개 대학 40개 과정),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의료진기발사 대상현장 교육(누적 이수자 3,120명)

우 수 사 례 (위스메디컬) 2026 CES 혁신상 수상

- ◇ 생체 전기신호의 정밀 해석과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AI기반 연구개발
 - 연하곤란(삼킴장애) 및 멀티모달 생체전기신호 측정을 통한 수면 장애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2026 CES 혁신상 수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AI 안전성 확보 및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계획수립 시 기대 효과가 ‘산업성장 및 국민안전 편의 제고’ 등 선언적 문구에 그쳐, 정책 실행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 수준과 정량적 목표치가 구체화가 부족함
- 신설된 성과지표들이 인증 건수 등 단순 산출물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고위험 AI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요소 감소나 국민의 금융·의료 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같은 정책의 질적 결과와의 논리적 연계가 다소 약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의료 AI 확산 과제의 경우 보급 건수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율, 응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시간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량적 편익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계획 단계의 기대효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제 AI 앰블런스 및 클라우드 병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음에도 보고서상 협업 성과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향후 범부처 협업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환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AI기본법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은 우수하나, 추진 계획별 정량적 기대효과 작성이 미흡하여 저액의 구체성이 낮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민간자율 인증건수는 대표성을 가지는 산출지표 성격이 강하며, 국제협력 지표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배점방식을 개선한 노력은 긍정적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계획된 13개 과제에 대해 지연없이 100% 일정 준수율을 달성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AI신뢰성 얼라이어스 발족 및 의료 협의체 운영 등 총11회 이상의 현장 소통을 수행하였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차년도 R&D 예산 등에 적극 반영하였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AI사회적 영향평가 자문단 및 윤리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외부전문가에게 설명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세미나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AI신뢰성 인증건수 목표를 전년 대비 50% 상향하는 등 도전적이나, 국제협력 지표의 목표치는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AI와 민주적 가치 지수 선도국 그룹 포함 및 AI애크셀 전 국 확산 등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규범 주도 성과가 가시적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해당없음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차세대 AI R&D 추진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역량’ 확보
 - (인간지향적AI) 연구자가 주도하는 혁신·도전적인 범용인공지능(AGI)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공모하여, 사람처럼 적응·성장하는 차세대 AI R&D 본격 착수
 - (AI원천기술)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람중심AI사업 등 혁신도전형 R&D지원을 통해 다양한 AI원천기술 확보 추진
 - (글로벌AI) 글로벌AI프론티어랩 및 AI연구거점 프로젝트 내 연구과제별 글로벌 AI 연구자 간 AI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소통, 기술교류 활성화 및 논문·특허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우 수 사 례 글로벌 AI 프론티어 심포지엄 개최(10.27.)

- ◇ 「글로벌AI프론티어랩」 및 「AI연구거점프로젝트」 내 각 3개 연구분야의 AI석학·연구진이 참여하여 글로벌 AI 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AI 협력 중심국 도약
- AI 석학 기조연설(안 르쿤, 최예진), AI 석학 좌담회(배경훈 부총리, AI석학 4명), AI 연구자별 AI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발표 및 토론, AI R&D성과 전시 등
 - ※ 국내 AI연구자 및 NYU 연구팀 현장 참석 700여명, IITP 정통방통 유튜브 온 라인 생중계 참석 900여명, 연합뉴스 및 YTN 등 언론보도 70여건



기조강연(안 르쿤)



AI석학 좌담(좌장·부총리)

○ 인공지능 지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의료AI) ^(강원)의료·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의료 솔루션(진단보조), 의료기기 개발·실증·사업화 추진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AI기반 암환자 치유 실증 센터의 민간서비스 시범 적용 추진
- (농업AI) ^(호남)농업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실증을 통해 확보한 실데이터 기반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11) 및 농업 AX 지원을 위한 리빙랩 구축·운영
- (제조AI) ^(영남)지역별 중점 제조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AI 기술 개발·실증 지원 및 지역별 AI 전환(AX) 인프라 운영
 - 경남(자동차부품), 부산(기계부품), 대구(지능형기계), 울산(화학), 포항(철강)

↳ “제조업 AI융합기반조성 사업” 지방시대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25.9.17.)

- (5극3특 중심 대규모 AX R&D) 대구지역거점 AX혁신기술 개발사업 ('26~'30, 0.5조) 및 광주AX실증밸리조성사업('26~'30, 0.6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확정('25.8), 적정성 검토 대응('25.10~)

우 수 사 례 대통령 대구 타운홀 미팅('대구의 마음을 듣다') 추진(10.24.)

- ◇ 세계 수준의 완전자율로봇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도전형 R&D 등 'K-AI로봇 수도' 대구 조성계획 발표
- 일시/장소 : '25.10.24. 14:00~17:00/대구 EXCO
 - 참석자 : 대통령,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구시 로봇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시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항목 부적절
 - ☞ 주요 내용과 부합하는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 ☞ 성과지표 하나만으로 사업 전반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 지역 생태계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지표 제시가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성과지표가 단순 Top-tier 학술 대회만으로 제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 인공지능 지역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적합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발굴이 필요함
- 일부 사업에 대해 타 부서와의 유사 중복성 배제를 위한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은 충실히 제시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과제명인 '국가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 지역확산'에 대한 성과지표가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표로 대표하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모든 계획이 일정에 맞추어 정상추진 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대통령 대구 타운홀 미팅 등을 수행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설명회나 의견수렴 결과 제시는 마소 미흡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외부 자문단 등의 의견수렴이 활발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적극성은 전년도 6.01보다 현저하게 낮은 4.77로 제시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글로벌 AI 협력연구 부분에서는 국제공동연구 부분에서 우수하나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기반 활성화 부분은 다소 미흡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 산업부 등과의 협업 노력은 일부 인정되나, 성과는 미흡해 보임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AI 3대 강국 위한 민·관 협력 국가 AI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 (대규모 첨단 GPU 확보) 1.46조원 규모 추경 예산으로 1.3만장의 첨단 GPU 확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지원 기반 신속 마련

➢ GPU 확보 사업 참여 희망사, 벤더사 등 간의 경쟁 유도, 적극적 협상 등을 거쳐 당초 예산 계획(1만장)보다 크게 상회한 첨단 GPU 1.3만장 확보

-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국가 AI컴퓨팅 센터(2조원 이상 규모) 구축을 위해 설립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SPC의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 착수

· SPC 민간 참여자 공모(1차 1.23~5.30, 2차 6.2~6.13) 결과 민간사업자 **미응찰로 유찰**
 ➢ 민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주요 공모 요건*을 조정하여 재공모 결과, 입찰한 삼성SDS컨소시엄 선정 절차 추진(1단계 기술·정책 평가(11.12) 後 2단계 금융심사(산은기은) 진행)
 * ▲지분구조(민간 49%→70%↑), ▲매수청구권(공공출자 원리금 보장→삭제), ▲국산 AI반도체 도입의무(30년까지 50%→민간 제안)

- (민간 AIDC 생태계 지원) 민간의 AI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관련 규제 합리화* 및 DC 장비·SW 기술 자립화 지원** 등 AIDC 산업 기반 활성화 추진

* (문체부/국토부 협력) 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DC 內 시설(송강기·미술품)에 대한 규제 적용 최소화

** DC 장비 SW 개발 실증 지원 10건, 테스트베드 조성 등 '25년 132억원 지원

➢ 관계부처 합동 '국가 AI역량강화방안(제3차 국가 AI위원회, 2.20.)' 및 '국가 AI 역량강화 방안 후속조치(경제관계장관회의, 4.15.)' 마련으로 AI데이터센터 규제 부담 완화 추진

➡ 「국가 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심의·의결(12.18)하고, 정부 확보 GPU 배분·자원을 통한 국내 산·학·연 AI혁신에 기여

② 독자 AI 모델 개발·확보를 통해 국가 AI 역량 강화 추진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력있는 국내 우수의 AI 기업·기관이 참여한 정예팀* 선정('25.8.4),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확보

*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T, ▲NC AI, ▲LG AI연구원

→ “K-AI” 엠블럼 수여(9.9.) 등 정예팀의 글로벌 공신력 확보 및 사명감 고취
하고 연말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오픈소스로 공개) 1차 개발·확보 목표

➤ 모든 정예팀은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모델 개발에 전력 중으로, 정부 등 공공 부문에서의 적극 활용을 통해 **소분야 AX 혁신 및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 뒷받침**

- (특화 AI 모델 확보) 루닛(의과학), KAIST(바이오) 컨소시엄 선정('25.10)*, 의과학·바이오 특화 AI파운데이션 모델(오픈소스로 공개 계획) 개발 착수

* ① (루닛) 세계 최초로, 전주기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공개 목표

② (KAIST) 차세대 단백질 복합체 구조 예측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공개 목표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의과학·바이오 시장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독자적 AI 기술력 확보는 물론,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AI + 도메인 동반성장 전략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1차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1차 발표회 개최(12.30)로 국가 AI 주권 확보 기반 계기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관리 과제 목표에 따른 주요 성과 등에 대해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해 연구 필요

☞ 정책 추진 효과에 대해 매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보완이 필요

○ 주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필요

☞ 성과지표 중 ‘국가적 투자로 첨단 GPU1만장 이상 달성여부’의 경우 지속적이고 매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라 보기 어려움

☞ 과제의 주요 내용에 적합한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국민 수혜 성과지표 및 ROI성과관리 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노력필요

☞ Output 관점(추진 실적)이 아닌 OutCome 관점(대국민 편익)에서 성과 관리 체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와 추진계획 내용이 연계되어 충실하게 작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 지표 전반의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연구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추진계획 대비 추진 완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각 사업별 사업설명회 추진(4회), AI인프라 산업 활성화 위한 기관장 주재 현장 간담회(2회) 수행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추진 관련 외부 자문단과 소통 및 설명회 개최 수행 노력에 기울임. 분기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핵심적 정책 현안과 자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두 가지 지표의 성과목표치 도전성은 다소 낮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민관 협력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 AI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혁신을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산업 활성화 파급효과가 뚜렷하지 않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책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으로 부처 특화 분야 협업을 통해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는 의문 - 적극행정 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 수상 - 민간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견인 추진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데이터 산업진흥을 위한 기능 강화 및 新데이터 정책 수립

- AX·DX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정책 수립·조정, 유통·거래 제도 정비 등 데이터 산업진흥 기능 강화 및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조직 확대·정비
※ (기존) 데이터진흥과 1개 과 → (개편) AI데이터정책과 및 AI데이터진흥과 등 2개 과
- 데이터산업법 시행 성과 점검 및 데이터산업계 대상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제2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향」 마련 및 국가AI전략위 상정(예정)

* 데이터기업 및 유관 협·단체 375개 대상으로 '25.1.24.~2.23(약 1개월) 간 설문조사 실시

Data 1.0,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

데이터 산업의 기초체력 마련

-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으로 AI학습용 데이터 등 구축
-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국내 산업 내 AI 도입·활용 기반 마련

Data 2.0, 본격적인 AI시대 진입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통한 AI G3 도약

- ▶ 민간·공공의 AI학습용 데이터를 통합관리 및 상호 연계하는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 안전하게 고수요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 잠재된 데이터 역량으로 AI G3 도약 지원, 데이터 법·제도 정비

-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2차관 주재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7.25.)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이행 중
- 문체부와 협력하여 ▲공공저작물(1,180만건)을 독자AI 개발에 활용하는 규제실증 특례 부여(9.11) 및 ▲공공누리 AI유형 신설 등 공공저작물 활용 개선 추진 등
- AI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11.24. 상임위 의결), 유통·거래 지원을 위해 가치평가품질인증 고시 제정 추진

○ 양질의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으로 AI·데이터 산업 전방위 지원

- 생성형 AI 파급효과가 큰 전략 분야*별 특화·심층 데이터(37종) 및 피지컬AI·추론AI 등 AI기술 트렌드에 맞춘 자유과제 데이터(5종) 등 총 42종 신규구축
- * 뷰티·헬스, 미디어·콘텐츠, 산업·제조, 재난·안전, 금융·회계
- '24년 구축·'25년 품질검증한 데이터 70종 신규 개방(누적 903종) 및 분야별 데이터 통합 패키지* 제공 등으로 전년대비 AI허브 데이터 활용률 156% 증가

* 생성형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능

AI-Hub 실적 학습용 데이터 누적 903종 개방, 활용 건수 누적 112.6만건 달성('25.11월말 기준)		
학습용 데이터 신규 구축·개방	데이터 업사이클링	데이터 패키지
▶ 특화·심층 데이터 등 42종 구축 ▶ '24년 구축 데이터 70종 개방	▶ 라벨링 데이터셋 20종을 선별, 생성형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전환하여 활용도 제고	▶ 생성형AI 모델에 동시 사용한 55개 데이터를 분야별 패키지로 하여 통합 제공

-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독자 AI정예팀 수요 기반으로 민간·공공 간 협업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

* AI학습 수요가 높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육부 국정교과서, ▲국사편찬위 한국사DB, ▲EBS 문제, ▲국회도서관 발간자료 등

○ ‘한국형 Git-Hub’ AI학습용 통합제공체계 구축으로 AI생태계 활성화

- 국정과제 20-3번 등에 따라 AI학습용 데이터 집적부터 이용자 맞춤형 AI 활용 지원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 구축 추진
 - ※ (국정 20-3번) AI고속도로 구축 - 생성형AI 학습데이터 확보 및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 ※ (AI기본법 15조) 민간·공공의 AI학습용데이터를 단일창구에서 통합제공
- 「AI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2월)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안내서」 배포(11월)로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AI학습데이터 표준 정립을 위한 기반 마련
- AI 성능·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와 리더보드를 구축하여 국내 AI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경쟁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도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미흡한 점

- ☞ 성과지표 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지표 계산 시, AI허브 서비스 만족도 50%, AI허브 데이터 만족도 50%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AI허브 서비스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해당 과의 특성 상 AI허브 데이터의 만족도가 더 중요

○ 데이터 세분화

- ☞ 현재의 정책에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카테고리에 넣고 동일한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음. 그러나 AGI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버티컬 AI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며, 새로 만들어야하는 데이터이나, 아직 데이터화되지 못한 데이터이나에 따라 정부의 정책 전략은 달라져야 함.

- 규제개선 및 현장수요 반영 프로세스의 체계화

- ☞ 현장 간담회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의견 통합·정책 반영의 구조적 어려움 존재

- 신규 플랫폼의 기술·운영 안정성 확보

- ☞ 초기 운영 과정에서 신뢰성·성능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개선

- ☞ AI허브 서비스 만족도의 비중을 좀 더 낮추고, AI허브 데이터 만족도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형태로 비중의 조정이 필요

- ☞ 서비스 만족도나 데이터 만족도도 좋지만, 실제 사용 건수나 이를 통한 서비스 개발 건수와 같은 실질적 성과지표 추가 필요

- 데이터 세분화

- ☞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AGI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버티컬 AI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며, 새로 만들어야 하는 데이터이냐, 아직 데이터화되지 못한 데이터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규제개선 관련 AI업계의 현장수요 수렴 체계를 체계화

- ☞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계 및 유관 협단체와 주기적으로 적극 소통·협의를

- 신규 플랫폼의 기술·운영 안정성 확보

- ☞ 시범운영 기간 확장 또는 단계적 오픈(Closed Beta → Public Beta → 정규오픈) 적용

- ☞ 리더보드 평가데이터의 버전관리 체계 및 기록관리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신규 플랫폼의 신뢰성·성능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시범운영 기간 확장 또는 단계적 오픈과 같은 계획 수립이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비중 조정 및 실질적 성과지표의 신규 추가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충실하게 일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의견 통합·정책 반영을 위해 우선순위 매트릭스 구축이나 성과지표(KPI) 기반 관리 도입을 추천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소통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성과지표상의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는 아직 초기의 단계이며,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협업 및 사회적 가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 정부혁신 및 규제합리화의 경우 타 부서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인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일부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데이터 공유·연계 기반 마련 및 유통·활용 활성화

- (데이터 공유·연계) One-윈도우* 운영(3월~) 및 고도화, '데이터 카탈로그 가이드'** 배포(10.31), 신뢰 기반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참조모델 설계

*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안내·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25년 DPG허브,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OCEAN+, KAMP 추가 연계)

** 기관별 데이터를 공통 구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의한 통합 메타데이터 작성·연계 기준

- (데이터 유통·활용)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4개소 추가 지정('25.5월), 정부 과제 산출 데이터에 품질인증 연계('25년 54건),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발굴('25년 5건)

One-윈도우 포털 시범 오픈(2.10)	과기정통부-산업부 업무협약(4.8)	마이데이터 사업 주요 선정과제
	 ○ 산업부 구축 마켓팅 소재데이터 300만 건 데이터안심구역 통해 개방	○ 만성질환 관리 - 라이프로그 데이터 활용 건강 코칭 지원 ○ 청소년 진로·진학 - 역량진단, 체험봉사 등 맞춤형 활동 추천 ○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 구매패턴, 회전을 분석 등 경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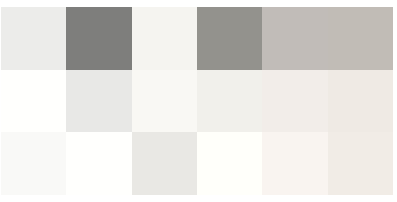
②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확산 지원

- (공공 부문)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SaaS 개발 지원('25년 신규 8건) 및 공공 기관의 디지털서비스 도입·확산 지원(16개 기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정부·공공기관 등의 민간 AI·클라우드 확산 지원

* 디지털서비스 수 654개, 누적 계약 실적 6,500억원 돌파('25.11.)

- (민간 부문) SaaS 기업의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SaaS 개발·사업화*('25년 47건) 및 스타트업 등 대상 인프라^{laaS}·개발도구('25년 30건)·컨설팅('25년 20건) 제공

* ①SaaS 스타트업, ②SW→SaaS 전환, ③초거대 AI 모델 활용, ④글로벌 진출 등

공공부문 SaaS 도입 지원(모두싸인)	글로벌SaaS육성프로젝트(스튜디오랩)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25.10. 기준)
 (기능사례) 비대면 전자서명 ○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자 문서전자서명 기반 비대면 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한 민간 SaaS 도입·활용 지원 ⇒ 민원 신청시간 67% 감소 및 대면 처리비용 100% 절감 등 행정 혁신	○ 패션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서비스 'GENCY' 개발·사업화 지원 ⇒ CES2026 최고혁신상 수상 < '25.11.06. IT조선 보도 > 스튜디오랩, CES 2026 '최고 혁신상' 수상	

③ 바우처를 통한 AI 서비스 및 개발·활용 기반 제공

- (AI바우처) 자사 제품·서비스에 필요한 AI솔루션을 AI기업에게서 구매·활용 하도록 바우처를 지원('25년 130건)하여 AI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 (데이터바우처) 데이터 공급기업(1,025개社) 및 상품(971개) 발굴,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상품 및 활용 서비스(460건, 경쟁률 10.2:1) 제공, 문제해결은행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맞춤지원(367社)을 통한 데이터 활용지원
- (클라우드바우처) 국내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비용·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25년 430건↑)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AI 전환 촉진

AI바우처 주요 성과사례	데이터바우처 주요 성과사례	클라우드바우처 주요 성과사례
 ○ 스마트폰을 활용한 3D스캐닝 기술 개발 ⇒ (공급기업) 리빌더아이 45억원 투자 유치, CES 혁신상 2개 부문 수상  ⇒ (수요기업) 이한모에프비 매출 30% 향상	 ○ (웨스텍글로벌)페플라스틱 특화 분류데이터 활용 AI모델 개발 ⇒ 플라스틱 1톤당 재활용 공정 탄소 발생 2.99톤 감소, '26년 CES 수상 제품 선정	 ○ (텐씨엘)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고객문의 자동화, 통합 RFD 데이터 기반 대고객 서비스 체계 마련 ⇒ 업무효율성 20% 향상, 비용 15% 절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주요 성과지표로 제시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과 데이터 지원 만족도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평가되나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시장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보다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하며 데이터지원 만족도는 지난 2년동안 매우 88.3 점 그리고 87.7점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 목표치인 84점은 도전성이 낮음
- AX시대에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AI3강 도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One-윈도우를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 검색하고 파악하는 이상으로 기업 등 다양한 잠재적 데이터 활용자가 실제 활용할 때 개별 데이터별로 여전히 사일로 형식을 넘어서 활용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및 거래 체계 혁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기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 주요 성과지표는 적정하나 본 과제의 핵심사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성은 다소 미흡하여 다양한 데이터관련 바우처 사업 등을 포함하여 본 과제 성과지표를 다양한 사업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복합지표로 설계 고려 필요
- 지난 2년간의 성과치와 추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도전성을 제고하고 AX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공유, 거래, 활용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데이터 스페이스를 능가하는 한국형 차세대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데이터로 인한 부가 창출과 AI생태계 활력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데이터 유통 활용 지원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 20번 등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노력 인정되며 AX시대에 기존의 다양한 정책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실천과제는 다소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전체 과제의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과지표 설계 노력 필요. 클라우드 시장 규모 지표나 데이터 활용지원 만족도는 성과지표로 적정하나 클라우드 시장 성장속도를 고려하거나 지난 2년 실적치를 고려할 때 도전성이 미흡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기본적인 15개 과제의 추진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형식적인 추진일정의 형식적 추진 완결성보다는 실질적인 추진 결과 담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기대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국가데이터얼라이언스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현장 간담회 등 추진 사업별 현장의견 수렴 노력은 높으나 향후 보다 의견수렴 위한 채널 수와 빈도수를 제고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추가 노력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외부 자문단 및 평가위원 등에게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향후 보다 광의의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넓게 정책소통 창구 마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기본적인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목표치 적극성은 과거 추세치보다 낮은 등 도전성 제고 필요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One-윈도우를 통하여 국가데이터 통합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한 점은 인정되나 실제 데이터 유통과 거래 그리고 활용이 AX시대에 부합하게 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플랫폼 재평가 후 혁신적 방안 수립 고려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 핵심 인프라 구축 - 정부최초,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촉진
 - 행정망에서 보안 걱정 없이 민간의 최신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전용 AI 인프라(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으로 공공부문의 AI 도입·활용 촉진
 - AI 분야의 전문성(과기정통부)과 행정분야 전문성(행안부)을 고려한 부처 간 협업 사례 창출



- AI 혁신 서비스 창출 - AI·디지털 기반 공공 혁신 선도사례 창출
 - 공공분야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초거대 AI 도입·활용을 위한 컨설팅, PoC 등 종합지원으로 공공분야 AI 선도 적용 사례 창출
 - 사용자·국민의 요구를 파악,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이 AI·디지털을 통한 개선 효과 등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우 수 사 례 2025년 AI·디지털 기반 공공 혁신서비스

- ◇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국민권익위 협업)
 - 민원 분석·답변추천, 빈발·유사 민원 식별처리 등 AI 기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소통시스템 효율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
- ◇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서비스(교육부 협업)
 - 대입 특별전형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 편의 제고



-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 민·관 데이터 공유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 융합·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과 기업·시민 등 누구나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 등으로 AI 혁신 저변 확대

- AI 혁신서비스 창출 유망 기업(GovTech 창업기업 등)을 발굴·육성하여 민간의 우수기술이 공공부문에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우 수 사 례 GovTech 창업 지원 및 통합플랫폼 활용 경진대회 개최

◇ GovTech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 (국제대회수상) 덴마크 Creative Business Cup 2위(생태계 시뮬레이션, 인베랩)
- (해외MoU) 누수탐지기술(플로워크연구소, 베트남), 수질관리(워터아이즈, 일본)

◇ 「인공지능(AI) 챌린지 2025」, 「인공지능(AI) 노코드 해커톤 2025」 개최를 통한 혁신서비스 창출

- (챌린지) AI기반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점역 솔루션
- (해커톤) 공공데이터·AI·MCP를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 사전탐지 안전계약 서비스

○ 국내 AI 기업 성과 공유 및 국내·외 확산

- 「AI 페스타 2025」에서 과기부총리 주재 AI 타운홀 미팅, 주한외국대사 초청 전시투어 등 국내 AI 기업 성과를 확산하고 국제 협력방안 모색

【 AI 페스타 2025('25.9.30.) 】



【 주한 외국대사 초청('25.10.1.)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업무 효율성, 생산성 향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또는 기업들의 체감 성과 부족

☞ AI 혁신 사례 발굴, 경진대회, PoC 및 실증 Test 등 에서 부처별 확산을 통한 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 창출 필요

☞ 민·관 협력 데이터 공유 및 융합과 통합 플랫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실증 지원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요구

- 일부사업 유사 중복성

☞ 타 부서와의 유사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성과지표 개선 및 발굴 필요

☞ 주요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선 및 발굴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만족도 외 대국민 서비스 체감, 행정업무 효과를 고려한 신규 지표 및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등 지표 개발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세계 최고 AI 민주 정부 실현, AI 잘쓰는 나라 등 국정 과제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국가 AI경쟁력 강화 기여를 위한 성과지표 연계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AI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체감과 행정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선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일정을 관리하여 추진 완료 또는 예정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공모사업의 추진 방향성 공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및 개선 이행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요청을 위한 다양한 채널, 현장 점검을 통한 개선 피드백 등 적극적인 소통 기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에 대한 질적 수준,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은 낮아 보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AI 핵심 인프라 구축은 정부 최초 시대와 공공부문에서 예상한 정책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확산이 시급히 요구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주관부처가 주도하여 부처, 공공 영역 종사자와 대국민 체감을 위한 혁신 서비스 발굴은 충실히하였으나, 질적 성과측면에서 다소 부족 - 국가 보훈 대상자 주택우선 공급 지원 외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 사례는 미흡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생성형 AI기반 국민 소통 민원 분석 체계 구축 사례 우수
	사회적 가치	일부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일부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수립)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AI 3대 강국 도약' 달성을 위한 4개 국정과제 수립 지원 총괄('25.8.)

우 수 사 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과기정통부 주관) (20~23번) 발굴

- ① (AI 고속도로 구축) AI인프라·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 구축
- ②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기여
- ③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와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등 초격차AI 선도기술 확보
- ④ (AI 기본사회 실현) AI 기술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 (국가AI전략위 설치)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AI전략·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9.2) 상정 및 시행(9.4)

우 수 사 례 『국가AI전략위원회』 주요 역할 및 차별점

- 국가AI전략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 구성 등을 대폭 개편*
 - * ①범부처 AI 전략·정책·사업 조율기능 확대, ②위원수 확대(45명→50명) ③부위원장 확대(1명→3명이내), ④정부위원 재구성(10개 →13개 부처), ⑤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 신정부 출범 계기, 공약에 따라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강화하여 새롭게 출범한다는 취지로 대통령령을 새로 제정('25.9)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국가AI위 → 국가AI전략위)

- (국가AI역량강화)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 및 AX 가속화를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수립·발표(2.20., 국가AI위)

우 수 사 례 『국가AI역량강화방안』 3대 추진전략 주요내용

- 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 플랜 가동, 민간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 국산 AI반도체 성장 지원 등
- ② (차세대 AI 모델개발) 혁신적인 AI 알고리즘 개발 지원, 고급 AI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 ③ (AI전환 가속화) 분야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총 1조 9천억 규모의 AI 분야 추경(4.15.,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후속 조치 추진

- (AI핵심프로젝트 추진) AI 3대 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 즉시 실행이 필요한 6개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총리 직속 TF 구성·추진(9.30.)

* ① 국민 효능감 AI 서비스, ② 과학기술 AI 혁신, ③ 공공 AI 혁신, ④ AI 산업·연구·스타트업 허브, ⑤ AI 인재, ⑥ 국가 AI 기반시설

- AI를 활용하여 가시적인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기획 및 과기관계장관회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11.24)

- (ICT 정책연구) AI·디지털 전환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선정·수행('25.5.13./8.13.) 및 '24년도 결과 정책 반영

※ '25년 정책연구 47건 지원(3,780백만원)

< 주요 정책연구 결과 반영 실적 예시 >

'24 과제	정책반영실적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AI 기본법」 AI영향평가 가이드라인('25.4.) 반영 - 국내외 AI 영향평가 제도 사례분석 및 쟁점 검토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단 운영, 우리나라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안) 제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거버넌스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	○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25.2.) 반영 - 딥시크 출현 등으로 인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 및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로드맵 및 정책 기초자료 제안

- AI·디지털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업계·전문가·기업인 현장 소통 및 글로벌 국가·기업 교류 강화
 - (기업) AI·디지털 기업 간담회(7.8.)를 통해 규제개선 등 현장의견 청취
 - (기관·연구원) 과학·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1.21.),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4.21.) 정부포상(157명) 수여 등을 통해 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 고양
 - (글로벌) AI 글로벌 컨퍼런스(3.25.), 사회과학협의회 글로벌 컨퍼런스(5.27.), 한-OECD 디지털사회 이니셔티브 서울 세미나(5.27.)를 통해 글로벌 주요 이슈와 모범 사례 공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AI·디지털 정책 총괄 부서로서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 계획상 기대효과가 '국민 효능감 제고' 등 선언적 문구에 그쳐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 편익과의 연계가 부족함
- 핵심 성과지표인 정책연구 결과 반영률의 목표치(93.5%)가 최근 5개년 평균 실적(93.7%)과 유사하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질적 적극성과 정책적 도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반영률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법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 영향력이 큰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전략별 대응과제 및 성과지표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CAIO 협의회 등 구축된 거버넌스의 운영 성과가 범부처 정책환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소통의 성과를 구체화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AI·디지털 전환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세부 일정을 수립하였으나, 계획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정성적으로 기술되어 구체적인 편익 산출 근거가 부족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정책연구 반영률 지표는 총괄 기능을 대표하나, 목표치가 과거 실적 추세에 머물러 있어 AI 대전환기 정책 난이도를 고려한 도전적 노력이 부족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발표 및 AI·디지털 국정과제 마련 등 계획된 13개 주요 일정을 지연 없이 100% 준수하여 집행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기업 간담회 및 OECD 이니셔티브 세미나 등 다각적 소통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등에 적극 반영하였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ICT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정책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여 정책 투명성을 제고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정책연구 반영률 93.8% 달성 및 신규 지표인 주요 정책 기획 지수에서 목표 대비 120%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인 목표 달성 수준이 매우 우수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 및 1.9조 원 추경 추진 등 상위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민생 현안 해결 성과가 가시적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해당없음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 지원) AI, IoT 등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기획 및 구축·확산
 - * (예) 24시간 365일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시스템 구축(성평등가족부) ⇒ 온라인 성착취 삭제지원 건수 10% 증가(37,041건→ 약 40,800건)
 - (민관협력 위기대응)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
 - (스마트빌리지) 지역사회에 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적용 확대
 - 지역사회 전반의 AX·DX 지원,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 (예) AI 딥러닝 분석을 통한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 구축(대전 서구) ⇒ (기존) 최대 7일 소요 → (개선) 1~2일로 처리기간 단축

우 수 사 례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서비스를 통한 홍수·침수 대응 고도화

- ◇ (현황) 기존 홍수경보는 하천 위험수위 80%에 도달한 상태로, 범람과 직결되지 않아 빠른 길을 우선시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 민간기업은 상용서비스의 품질 우려
- ◇ (개선) 과기정통부·환경부 협업을 통해 하천범람 직전의 상황인 홍수 심각단계(100%)의 정보를 전국으로 확대 홍수 침수 위험정보의 정확도 및 품질 제고하여 여름철 홍수기에 제공
- * (기존) 223개 지점, 홍수경보 정보 제공 → (개선) 전국 933개 지점, 홍수경보 및 심각단계 정보 제공



- (AI기본사회 구현) 의료, 복지 등 사회 필수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이 보편적인 기본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AI 기본사회’ 구현 추진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 AI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발표(‘25.11월)
 - ※ ①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②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③AI 국세 정보 상담사, ④보이스피싱 원스톱 대응 플랫폼 등 3대 분야 10개 프로젝트
 - (공공AX 프로젝트) 쏠 부처 대상 공공 분야 AI 전환 선도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로 대국민 편익·편의성 제고 및 AI 산업 육성 추진(‘25년 20개 과제)

* (예) 온실 형태 및 설비에 맞춘 스마트팜 재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 기존농가 대비 생산량 증가(기존 대비 최대 90% 향상)

○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확산 및 기업 성장·해외지출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 (혁신로드맵) 블록체인이 AI와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출현·성장을 지원하는 산업 전략 수립('25.12월)

- (혁신서비스)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 집중 발굴

* (예) 분산된 항만물류 정보를 연결하여 이해관계자(항만 선박 운송사 등)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가능한 플랫폼 구축(부산항만공사) ⇒ 약 1,130억원(환적) 930억원 + (비용 절감) 200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 (해외진출 활성화) IR데모데이 7회 개최 등 블록체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총 895건(약 794억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및 업무협약 141건 체결

* 중동 최대 IT 전시회(GITEX), 현지 IR 등 현지 전시 참여 및 수출·투자상담 지원 등
(※'24년 대비 수출·투자 상담 건수 약 2배 증가(448→895건) 및 업무협약 건수 약 3배 증가(37→141건))

- (기술개발 및 표준화) 블록체인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민간 확산 기반 확보하고, 블록체인 보안·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성 강화: 동적 취약점 탐지율 95.1%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성능 확보

- (지역거점 확대) 지역특화산업 연계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및 지역 기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약 609억원 매출 성과 및 144명 일자리 창출

우 수 사 례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동상 수상)

◇ (개요) 복잡한 정산절차, 부정수급 등 기존 바우처의 문제 개선을 위해 예금토큰 활용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일반 국민 대상 실증 테스트 추진(프로젝트 '한강', '25년 4~6월)

- (적용 대상) 청년문화패스(서울), 보육(대구), 청년생활지원금(부산) 등 민생 바우처에 적용 (지역주민 972명, 거래규모 약 65백만원)

- (주요 성과) 바우처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QR 인증 등)를 활용해 손쉽게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하고, 사용자·발행처는 부정수급 사전방지, 가맹점 수수료 절감 및 정산기간 단축 가능

* 수수료율 절감(1~3% → 1% 이내), 정산기간 단축(5일 내외 → 실시간), 부정수급 방지(사후 검증 → 사전 예방)

→ 기재부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에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활용 예정('26.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본 과제의 주요 세부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문제 해결재원, AI 기본사회 구현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연계되어 있으나 과제명인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확산”과의 연계성 그리고 세 개의 세부 사업 요소가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있어 향후 본 과제의 목표와 핵심 요소를 재고하고 보다 연계성이 높은 업무로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도가 블록체인 사업 만족도, 블록체인 해외진출 기업수,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으로 구성된 복합 지표가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만족도, 기업수 그리고 방안수립 여부의 지표의 성격과 척도가 달라서 복합지표로 구성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를 세부 사업 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융합서비스의 정의와 확산 전략을 재정의하고 각 세부사업을 그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위사업으로 구성 필요. 세부사업 간 공통 산출물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 고려.
-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도를 ‘사업 만족도(인식지표)-해외진출 기업수(성과지표)-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여부(산출/이행지표)’로 단일 복합지표로 구성할 경우, 각 하위지표의 측정척도와 성격이 상이하여 산식 통합 시 타당성과 해석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육성도 평가를 단일 점수화에 앞서 하위지표를 동일 척도로 표준화하고, 방안수립 여부는 단순 0/1이 아닌 실행가능성을 반영한 성숙도(단계) 지표 전환을 고려하고, 필요 시 성과·체감·제도기반으로 지표 재설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국정과제 23번과 48번 등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평가결과 일부 반영노력하였으나 과제 내 세부 업무의 정합성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신규 성과지표로 제시된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도에 포함된 다양한 세부지표의 성격과 척도가 달라 복합지표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 지표 재설계 고려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17개의 과제가 일정에 따라서 추진된 점이 인정되나 과제를 일 년동안 세밀하게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 필요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부처협업, 사업설명회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과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중요성 고려할 때 정책반영 노력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외부자문단 및 평가위원에게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제공 노력 인정되며 향후 보다 넓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의 소통 채널 확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AI 디지털기술 활용 사회문제해결 사업 활용과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도를 신규지표로 제시한 근거가 인정되나 본 과제의 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 그리고 향후 본 과제의 제목에 부합된 목표에 대한 도전적 목표치 제시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제시한 사례를 통하여 본 과제의 정책효과 인정되나 본 과제와 다른 부처의 성과에 대한 본 과제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기여도 부분은 다소 불명확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CT 규제샌드박스

- (규제특례지정) 5차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9건(실증특례 39건(적극해석 1건))의 규제특례 지정('25.10월 기준)
- ※ (제도 누적성과)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290건, ▲시장 출시 171건, ▲규제 개선 완료 147건, ▲매출액 2,872억, ▲고용 12,234명, ▲투자유치 9,851억 등('25.3분기 기준)
-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 총 17개 과제의 시장출시 지원, 모바일 전자 고지,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등 총 55건(4개 규제)의 규제 개선 완료
- (부처협업) 실증특례 지정 논의 과정에 규제부처·이해관계자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갈등 해소 및 실증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

구분	구분	과제명	소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소요기간
1	특례지정 (‘25.9)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베택코리아)	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수의사회	47개월*
2	특례지정 (‘25.3)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활용지원 서비스(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개보위, 부천시	2개월 (사업개시 '25.7)
3	특례지정 (‘25.9)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체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1개월 (사업개시 '25.10)

* 사전검토위원회 2회('23.3월 '24.5월), 국조실 주관 회의('22.7월 '23.6월 '25.3월), 규제부처 주관 회의('25.5월~9월)

- (제도개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및 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실증특례 지정을 신속 처리함으로써 기업 애로 해소
- ※ 1차 전문위원회('25.8월) 개최(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등 4개 과제 지정)

○ AI 분야 집중 규제개선

- (전략적 추진) 전략적 정책 추진·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과제기획 → 발굴 → 부처 협의 → 규제특례 지정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신속 추진

우 수 사 례 CCTV 영상 원본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시스템 고도화

- ◇ 지자체 CCTV 원본영상을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정보 주체별 동의必
- 개보위와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 기준* 준수 조건 下 특례 지정('25.3)
- * 관리책임자 지정, 분리된 공간에서 처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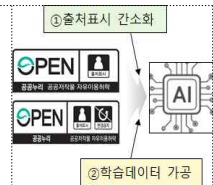
우 수 사 례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 ◇ 보이스피싱 해결 목적의 AI 학습 정확도 향상을 위해 범인과 통화 데이터 활용 시에도 범인 음성 원본 활용에 제한*
- * 개별 정보주체 동의 없는 민감정보(목소리) 처리 불가
- 통신사·국과수·정부가 합동으로 중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우수 성과* 창출
- *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국조실) 온라인 국민투표(11.6~13, 5,461명 참여) 1위 선정(11.19 보도)
- ※ (KT) '24.10월 지정→'25.7월 상용화, (LGU+) '25.9월 지정→'25.12월 상용화 예정, (SKT) '25년 말 예정



우 수 사 례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데이터 구축

-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1·3유형)을 AI 학습에 활용 시 출처 표시 및 변경 금지 의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로 인해 제한 발생
- 공공저작물의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25.9) 및 신속한 사업 개시 지원('25.10)



○ 전자문서·전자거래

- (전자문서) '원본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처 및 법률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전부처 **법령(46개) 일괄 정비 추진***
- * 법령 전수조사·협의('24.3~) → 1차(27개 법령) 정비('24.12) → 2차(19개 법령) 정비('25.6)
- (전자거래) 급증하는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통해 공정위와 함께 중고거래 분쟁 현실에 맞는 「개인간거래 해결기준」 마련
- * (참여) 과기정통부·공정위, KISA·한국소비자원, C2C거래 플랫폼 3사(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 인터넷 기반 관리

- (신규 도메인) AI·IT 등 신기술·산업과 관련된 도메인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 만에 ai.kr 등 4개 신규 kr도메인* 생성, 총 12,462개 등록(10월 기준)
- (보안강화) 인터넷 장비 간 길찾기 정보인 '인터넷 경로'의 잘못된 전파로 인한 인터넷 장애 방지 위해 국제표준 라우팅 인증체계(RPKI) 국내 도입 추진(2차 추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 ☞ 지표 중 가중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가 AI 분야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지정 건수인데 실제 업무는 AI 뿐만 아니라 ICT 전체를 커버하고 있음

○ 현장 의견수렴의 정책 반영 연계 구조 부족

- ☞ 연중 다수의 설명회·간담회(규제샌드박스 11회, 설명회·상담회 20여회)와 전문가 정책 연구회(웹3.0 연구회 총 5회) 등이 운영되었으나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 프로세스(우선순위 결정·추진 로드맵)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신산업 제도 기반 강화 사업의정책 효과 측정

- ☞ 인터넷 경로보안 고도화(RPKI 구축 등), 신규 도메인(ai.kr 등) 확산, 전자문서 원본 인정제도 개편 등은 단기 성과 측정이 어려운 분야
- ☞ 이로 인해 일부 정책의 성과는 정성적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량지표 부재로 실효성 검증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개선

- ☞ 따라서 성과제표에서부터 AI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에 대해서도 지표로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의견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Issue-to-Policy 체계' 구축

- ☞ 연중 수집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선순위 매트릭스(영향도·시급성 분석) 운영.

○ 중·장기 효과 중심 제도 개선사업에 대한 계량적 성과관리체계 강화

- ☞ RPKI·도메인 확산·원본요구법령 정비 등은 성과를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중간성과(KPI) 모델 도입
- ☞ 정책성과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스토리라인(가시화 자료)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두 지표 간 난이도 및 산업확산 속도 차이가 존재함에도 동등한 구조로 목표가 설정되어 지표 난이도 조정의 정합성 부족이 드러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충실하게 일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 프로세스(우선순위 결정·추진 로드맵)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소통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완료 낮음	AI 분야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지정 건수는 목표 대비 150%를 달성했으며, 전자문서 유통량은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규제개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직 AI 분야의 경우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의 개선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협업 및 사회적 가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 정부혁신 및 규제합리화의 경우 타 부서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인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일부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일부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인 「디지털포용법」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 키오스크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조사, 설치·운영자, 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
 -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편의 조치로 기존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뿐만아니라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안내 등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테이블오더 등 다양한 유형의 키오스크를 포함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제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 개선

우 수 사 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25년 1차 추경 / 92억) >

◇ 접근성이 검증된 키오스크가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지원 컨설팅, 무인매장·ATM UI/UX 개발, 신속 검증 지원 등 제조사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작을 위한 기술력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26.3월) 전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제조사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추경 편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AI·디지털 포용기술·서비스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서 고령층의 언어(자연어)를 이해하고 말 한마디로 다양한 앱(KTX앱·카카오T 등)을 실행하는 AI에이전트 개발 등 신규 과제 선정 및 지원
- AI·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 대상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까지 기초 AI·디지털 교육 제공하고 신규 거점센터 확대 추진
 - 전국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통해 상시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고,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 제공

우 수 사 례

AI디지털배움터 구축 등('25년 2차 추경 / 66억)

◇ 기존 디지털 교육을 AI·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

- AI·디지털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AI디지털배움터 32개소를 신규 구축하여 '26년부터 총 69개소 운영 예정
- 표준화된 AI 교육 제공을 위해 기초 AI 교육 콘텐츠 5종 개발·보급



<G20 정상회의('25.11.23)>

-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등), 디지털 역량 수준 등 개인 상황에 맞는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집합·방문 정보화교육 추진
 -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ICT 보조기기 활용교육 등 장애인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통한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맞춤형 1:1 방문 정보화교육 제공
- 전국 스마트침센터(18개소)를 중심으로 학교·기업 등에 찾아가는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취약계층 방문상담 등 전문상담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6차('25~'27)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 청소년 과의존 위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기' 사용량 중심 관리에서 '콘텐츠' 선별 관리 중심 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민관협력 강화 및 디지털 생활문화 캠페인을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 지표의 미흡성

- ☞ 25년도 과업 중 AI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향후 AI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성과지표에는 AI에 대한 지표가 전무한 상황임
- ☞ 또한 디지털 정보접근성 수준·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등 주요 지표는 사회·기술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 즉, 정책 효과와 환경 요인 간 분리 측정이 미흡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짐.

○ 일정 지연 요인의 반복 구조 및 외생변수 대응체계 미흡

- ☞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고시」 개정 과정에서 테이블오더 등 다양한 키오스크 유형 반영, 중소 제조사의 기술·비용 부담 검토 등으

로 행정예고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일정이 지연됨

- ☞ 즉, 법·제도 개정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조율이 필수적임에도 사전 영향 분석 및 일정 버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일정압박을 초래

○ 정책 반영의 ‘정합적 연결 구조’ 부족

- ☞ 디지털포용법 공청회(3회), 제조사 간담회(여러 차수), 교육현장 점검(17개 시도), 스마트쉼센터 등 의견수렴 채널이 다양함에도 이러한 의견이 정책·성과지표·추진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 현장 의견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우선순위 설정(What to act first)의 기준 부재가 정책반영 속도 및 효율성을 저해

○ 민·관 협업 구조 확대에 따른 관리 복잡도 증가

- ☞ 디지털배움터는 삼성·LG·이마트 등 다양한 민간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또한 통신사·전문가 그룹과 협업이 이루어짐
- ☞ 그러나 협업 구조가 확대될수록 협업기관 간 역할 조정·성과관리·품질 통제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부담이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 관련 성과 지표의 추가

- ☞ 2025년도 과업 중 AI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향후 AI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AI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 외부환경 변동성 높은 지표에 대한 ‘보정된 목표 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처럼 사회적 위험 요인이 큰 지표는 정책효과지수(Policy Effect Index)를 도입해 외부환경 영향과 정책추진 효과를 분리해 평가.

○ 법·제도 개정 추진 시 사전 영향분석 및 일정 버퍼 반영

☞ 키오스크 검증기준 개정과 같이 이해관계자 영향이 큰 과제는 사전 영향분석(Pre-impact review), 일정 완충구간(buffer period)을 적용하여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

☞ 제정·개정 절차별 표준 일정 모델을 수립하여 정책진행의 예측성을 향상

○ 의견수렴 → 정책반영 간 체계적 연계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간담회·설명회·조사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Issue-to-Policy 매핑 체계 도입

☞ 우선순위 기준(정책효과·대상규모·긴급성)을 명확히 하여 수집된 의견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반영 속도를 개선

○ 민·관 협업 구조의 통합관리체계 강화

☞ 협업기관별 역할·성과지표·품질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협업성과관리 매뉴얼(Standard KPI)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성과지표에는 AI에 대한 지표가 전무하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과지표의 경우 정책의 효과만이 반영되도록 수정이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 디지털배움터 현장점검에서 지연 발생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현장의 의견이 정책·성과지표·추진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보통	외부 자문단, 정책-이슈설명회 등을 수행하였으나 타 부서와 비교하였을 경우, 충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5	100% 완료 높음	'25 실적에 전부 100%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목표치 자체가 '24와 비교하였을 때 소극적으로 설정된 경향이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30	보통	디지털 정보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측면에서 '24 대비 향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향상의 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외 AI 기초역량 강화나 AI 기반 포용기술 개발 등은 아직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10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협업 및 사회적 가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 정부혁신 및 규제합리화의 경우 타 부서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인정 혹은 불인정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일부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혁신을 이끌 AI·SW 핵심 인재 양성
 - (AI 특화대학원) AI기술 혁신과 융합 확산을 선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10개), AI융합혁신대학원(9개) 지원
 - (SW중심대학) SW전공 입학정원 확대, 교과과정 개편 등 대학 SW교육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SW중심대학 지원 강화('25 신규 10개교 선정)

우 수 사 례

- ◇ AI 챔피언 대회를 개최하여 민간 자유경쟁 방식으로 AI혁신 인재의 도전적인 AI R&D를 지원하고, 도전 과정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여 대국민 AI관심 고취
 - ※ 산·학·연 등 자유롭게 구성된 AI 연구팀 630개팀(3,410명) 지원 → 최종 5팀 선정(총 57억 지원)
 - ※ 방송(SBS 다큐멘터리), 박람회(AI Festa 2025),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



[2025 AI 챔피언 대회 결선(11.5)]

- 민간 주도형 AI·SW교육 확대로 혁신형 전문인재 양성
 - (SW마에스트로) 최고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을 통해 창의도전형 SW·AI 인재 양성, 수료생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업주도형 교육) 기업 주도형 교육과정 설계·운영, 수료생 취업 연계로 산업계에 실전형 SW전문인재의 적시 공급 및 활용 촉진 강화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지역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
- 디지털 네이티브 체계적 융성을 위한 전국민 AI·SW교육 저변 확대
 - (SW미래채움) 전국 13개 지역 SW미래채움센터를 통해 지역 초·중등 대상 AI·SW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국내 ICT기업(네이버커넥트재단)과 MoU('25.3)를 통해 SW미래채움 강사 양성 및 지역 초등학생 대상 AI·SW교육 확산 노력

우 수 사 례

- ◇ 누구나 쉽게 AI·SW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코딩 파티*, 대한민국 AI 교육 페스티벌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AI·SW교육 문화 확산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엘리스그룹, 네이버 커넥트재단 등 10개 기관, 37개 프로그램 운영, 시즌1(6.16~7.17) 204만명 참가



[온라인 코딩파티]

- 미래 SW기술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마켓플레이스 등록) 지원기업(24社) 대상 원스톱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하여 글로벌 CSP 마켓플레이스(Azure, AWS 등) 등재 추진 (기술 멘토링 등 48회)
 - (해외 현지 홍보) 글로벌 CSP 마켓플레이스 등재 기업 대상 제품 역량 고도화*(5社) 및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17社)를 통해 현지 인지도 제고

우 수 사 례

- ◇ 국내 SaaS 기업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미국·일본 공공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판로 개척·홍보 지원 강화
 - * 미국(6월), 일본(IT Week, 추계(10월) 행사 內) ‘GSMP(Global SaaS MarketPlace) 2025’ 개최
 - 이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수출계약 2건(314,493달러), 양해각서(MOU)체결 4건, 321건 수출 상담 및 174,470,915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성과 달성



[GMPU2025 미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경우 25년 목표를 24년의 실적보다 낮게 제시하여 AI 혁신 및 인재 양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미흡
 - ☞ 향후 성과 지향적인 목표치 설정 또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성과 지표 도출 필요
 - ☞ AI분야 핵심 인재 양성의 핵심 성과는 SCI급 논문 수 보다는 공신력 있는 Conference 발표가 의미 있는 것 만큼 AI 성과에 대한 현실성 있는 평가 척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교육과 관련하여 학부 교육, 석박사 교육, 기업 연계형 교육, 전국민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정방향성과 맞춘 정책 조정과 연계하여 집중 필요
- 기업 연계 프로젝트 및 현장 실습 경험을 고려한 대학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형 인재 양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전년도 실적치 보다 낮은 보수적 목표치 접근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국정과제 AI 인재양성, 초격차 AI선도기술 인재확보와 연계하여 SW 중 AI기반 집중 다소 미흡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표의 목적에 맞는 대표성 있는 신규 지표 제언 개선 미흡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 과제 추진계획 대비 추진 실적 완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정책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정책 반영은 다소 미흡해 보임(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 제한적)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3가지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은 3년간 추세치보다 낮은 등 적극성은 낮아 보임 -> AI 기반의 신규 성과지표 제언 및 선정 시급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AI 인재 양성부분에서 나타났으며, 전 국민을 위한 AI-SW 교육 저변 확대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인재의 체계적 양성 지원 - 소외계층 청년 AI SW 맞춤형 교육(430명) 확대 필요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의 위한 관심도 제고, 향후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필요 - AX인재 양성 간담회, SW중심대학 간담회 등 시행
	사회적 가치	부분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부분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SW기업 및 산업 성장 지원

- SW산업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한 쏠 주기 맞춤 SW기업 지원 및 국내 SW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 활성화

우 수 사 례

- ◇ SW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신산업 분야 사업화 지원(4건), 개발자 양성 과정 운영(약 2,000명), 라이선스 검증(400건) 등 추진
- ◇ 「SW고성장클럽」을 통한 국내 우수 SW성장 기업 72개사 발굴 및 지원
 - 25년 기준 총 3,156억의 매출, 4,786만불의 수출 성과 및 신규고용 1,234명 창출
- ◇ 「XaaS 선도 프로젝트」를 통한 전 사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
 - 기획(6개) → 개발(6개) → 실증·확산(3개)의 XaaS 모델을 단계별로 지원
 - RaaS 기반 스마트 병원 로봇 운영 선도 모델, AIoT 기반 시설물 관리용 SIMaaS 등 구축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발대식]

○ 공공SW시장 선진화 및 환경 개선

- 공공SW 사업에 상용SW 및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 활성화,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여건 개선

우 수 사 례

-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조정안* 도출 및 SW진흥법 개정 추진
 - AI시대 공공전산망 안전성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 *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 경쟁구간 확대(20억원→40억원) 등
- ◇ 공공SW 시장의 신기술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SW사업 대가체계」 개정
 - AI 도입 대가체계 개정 및 개발·운영 일괄발주 대가체계 신설('25.8.)
- ◇ SW영향평가 강화, 공공부문 현장 컨설팅, 수요예보 항목 개선으로 「상용SW 도입」 지원
- ◇ 공공-민간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형 SW사업」 2건 발굴
 - 김포시(농촌관광 통합SW 구축 사업),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AI·대본업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 조정 가이드' 개정

○ 지역의 AI·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의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디지털+他산업 융합 지원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우 수 사 례

- ◇ 권역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AX R&D」 추진
 - 전북('26~'30년, 1조원), 경남('26~'30년, 1조원), 대구('26~'30년, 5,510억원) 등
예타면제 추진 및 국무회의('25.8) 의결
- ◇ 지역산업경쟁력 확보, AX전환 등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기술실증 지원
 - '지역 디지털 기업 스케일업 챌린지', VC 매칭 상담회,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개화운영
 -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 특화산업과 SW융합 촉진, 디지털 신서비스 실증 등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민간투자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량적 성과지표 설정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제시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수·성과와의 연계 근거가 부족
하여 측정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설명회와 자료 제공은 이루어졌으나, 정책 개선으로까지 이어져 성과가
도출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 유형별 핵심성과지표를 재정의하고, 실적 기반 지표 및 중장기
성과 연계 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자문단·평가위원을 활용한 상시적 피드백 수렴 등을 통한 정책 추진
전·중·후 단계별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의견 반영 결과를 체계
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환류 체계 보완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국정지표에 부합되나, 지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AX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과 이를 위한 추진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민간투자형 사업 검토 건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발굴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근거가 부족해 보이며, 개시한 실제 사업 수 등이 성과지표에 반영되길 바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일정의 지연 및 계획에 앞서 추진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보임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SW기업 및 지원기업 간담회와 실증 확산을 위한 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임. 단, 지역 디지털 워크,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 등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이 뚜렷하지 않으며, 정책반영을 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설명회 등을 통한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이 충실히 이행되었음. 자문단 또는 평가위원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좀 더 보완되길 바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잠정)달성하였음. 단, 신규 목표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과거 성과지표 달성도 대비 도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마련되길 바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발생한 정책효과와 국민의 체감 상관도가 보통으로 보이며, 상위목표 달성과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도가 다소 제한적으로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민간투자형 SW사업 가능성 검토만으로 협업 결과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개발한 디지털 재난안전 선제대응 플랫폼은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은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으로 보기에 미흡해 보이나, SW진흥법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은 그 성과로 인정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혁신적인 가상융합서비스 선도사례 창출

- 산업현장, 일상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가상융합 플랫폼 신서비스 확산 촉진('25년 11개 과제*)

* (산업융합) 운영·물류·에너지·안전 관리, 산업단지 고도화, 친환경 선박 실증 등 (기술선도) 보건의료, 가상인간, 전시관광, 장애인 지원 등 공공·사회분야 AI 융합 서비스

- 지역별(대전·세종·충북·충남) AI·가상융합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실증 완료 및 행안부와 협업해 확산을 위한 홍보·수요 매칭 지원

○ 핵심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 AI융합 기술 활용 가상융합공간 및 콘텐츠의 몰입도·실감성 고도화를 위한 현장 수요 기반 핵심기술 R&D 지원('25년 42개 과제)

※ (주요성과) 실제 영상을 이용해 다양한 시점에서 3D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영화 제작보조기술로 활용 →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적용

- 청년(만 39세 이하) 및 석·박사 과정생, 재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특화 인력 양성('25년 총 1,152명 양성)

우 수 사 례

가상융합서비스 경진대회 우수사례(로블록스내 한국사 관련 XR게임 구현 창작물)

- ◇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사업 내 가상융합서비스 경진대회(5~9월) 실시, 메타, 로블록스, 넥슨 등 17개 국내외 글로벌 기업 멘토링 지원, 36개 팀 선발·시상, 한국사를 로블록스내 XR 게임으로 구현한 창작물(Korea Odysseys Ride)에 18만명 방문 등



○ 가상융합산업 전문기업 육성

- 가상융합산업 등 신산업 특성과 연계한 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및 아세안·중동 등 주요 新시장 판로 확대 등 집중 지원

※ 수출역량 사전 진단·컨설팅 및 현지 비즈니스 지원 3회(일본, 유럽, 아세안), 서비스 분야별 특화 마켓 참가 4회(미국, 태국, 중동, 일본), 프로젝트 수요발굴(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13개소) 등

※ (주요사례①) 광주(헬스케어)-경계선 지능 청년 맞춤형 AI·가상융합기술 직무교육 서비스 개발 및 실증(주요사례②) 부산(해양)-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운반선 안전 3D 콘텐츠 제작 등

- AI 기술 접목 등 M&A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우수 가상융합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펀드를 조기 결성*·운영('25.9월, 410억원 규모)

* 투자운용사 선정 이후(6월), 정부 투자금에 매칭하는 민간 투자자 모집을 3개월만에 완료

○ 가상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25.2월), 지역별 센터 지정 세부기준(인력, 시설 등) 고시 제정('25.9월), 협회 인가('25.9월) 등 추진 완료

우 수 사 례

AI 기반 자연재난 대응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25.8월) 및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 수립('25.10월)

◇ 재난 대응 현장방문 및 간담회(장관주재, 강남구 도시관제센터, 8.19)를 통해 AI·가상융합기술 기반 재난 대응 사례 공유, 기술 고도화 및 현장 도입 활성화 방안 등 의견 수렴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 수립 AI 기반 재난 예측대응 분과 총괄**

* (V 지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25.7.22, 국무회의)

** AI 기반 재난대응 관계기관(행안·환경·국토·농식품부, 기상·산림·소방·농진청 등) 협력 및 전략 수립 총괄

※ TF 킥오프(7.29)→AI분과 회의(8.5)·간담회(8.19) 및 전략 수립(8~9월)→대책 발표(중앙안전관리위, 10.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장기 목표는 명확하나, 연도별 추진계획이 단절적으로 제시되어 24년 실적과 25년 추진계획 간 연계성과 단계적 발전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융합기술 선도 및 전문인력 양성 성과는 인정되나,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와 타 기관과의 협업 및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차별 목표·과제 간 연계 논리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처·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실증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정책 확산 및 파급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수립 계획이 국정지표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24년에 제정 및 시행된 것으로 25년 추진계획과의 유기성이 다소 미흡해 보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지원기업 매출 증가율과 신규근로자 고용 지수는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의 정량적 지표로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단, 기업 또는 (피)고용인의 현장에서의 정성적 체감 및 공감도도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적합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추진일정은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보임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반영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도 적절히 수행되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잠정 달성하였으나, 3년 평균 실적을 기반으로한 지원기업 매출 증가율 목표에 도전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과거 3년 동안에 상승추세를 고려하여, 직전년도 대비 또는 직전년도 실적에 가중치를 두어 목표 설정이 되길 바람. 마찬가지로 신규 근로자 고용 지수 목표 역시 전년도 상승추세와 동인한 증가폭으로 설정되어 도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융합기술 선도사례 창출, 가상융합산업에 특화된 인력 및 전문기업 양성 등 정책효과 발생은 일부 인정됨. 단, 정책영향에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행안부뿐만아닌 타기관과의 협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좀 더 많은 정책실증 성공 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행안부과의 협업이 있었으나, 이 외 관련 민간 기관과의 협업이 부족해 보임 - 시민 안전성과 재단 대응력 향상을 위한 4개지역 위험요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은 사회적가치 성과로 인정됨 -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 수립은 정책소통으로 다소 인정되나 성과로는 미흡해 보임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추경 1차·2차 예산 확보 및 민관 원팀화 등 ICT 산업 성장기반 확충
 - (추경 반영)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1.6조, 차세대 AI모델 개발 500억 등을 반영하여 ICT 기업의 혁신 투자 여력·시장 진입 속도 향상
 - (AX 정책협력) AI 총괄부처로서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MoU를 체결(10.15)하여 부처간 AX 지원정책 연결 추진, 후속 활동
 - (피지컬 AI 협력) 과기정통부-현대차-엔비디아 협력 MoU 체결(10.31.)을 통해 국내 인재, 중소·중견까지 글로벌 AI 전환 생태계 접근성 확대 마련
 - (민관 원팀화) 피지컬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하여 R&D, 연구성과 확산 등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우 수 사 례 피지컬 AI 글로벌 혁신을 위한 과기정통부-엔비디아-현대차 MoU 체결

- ◇ 과기정통부+국내 대표기업+글로벌 기술기업 간 협력을 통해 AI 자율제조·로보틱스·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글로벌 허브로 도약 추진
- 엔비디아 및 현대차 그룹은 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피지컬AI 기술 공동 개발, 최신 고성능 GPU 공급 및 투자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는 국내 피지컬AI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우 수 사 례 피지컬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원팀화

- ◇ 피지컬AI 관련 산·학·연·관 핵심 주체들이 참여하는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성·운영(9.29~)
- 피지컬AI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 도출, 우리나라 산업 특성에 맞는 현장 활용 촉진 방안 논의 및 피지컬AI 기업 간 소통 등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
(장관, 9.29)

○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AX 전환 시동

- (피지컬 AI 사전실증) 제조 AX사업('26년~) 추진을 위해, 사전실증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여 기술검증 및 기반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
- (전북·경남 대규모 AX 사업 기획)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X 모델, 미래형 제조혁신 SW 플랫폼 개발·실증 사업으로, 지역 기업이 참여하면서 바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구조 기획

- 불확실한 ICT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진출을 직접 지원을 통한 ICT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통상 위기대응) 수출간담회(6회), K-ICT 버추얼 상황실(8.29~, 매주) 등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도록 기업에 현지정보 제공(포털, 메일링)
 - (수출활동 지원) 2025 월드IT쇼 개최, 수출 유망국 수출개척 활동 추진, 해외실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 ICT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ICT 수출통계 발표) 기업이 예측가능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美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공급망 등을 고려한 ICT 수출입 동향(매월) 및 ICT 서비스 무역 통계(반기) 발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조 AX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
 -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생산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독일과 일본 생산 기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 스마트팩토리에서도 실패한 경험 있음
- 신규 성과지표의 검증·안정성 확보가 제한됨
 - ☞ 디지털 수출 참가기업 만족도, ICT 수출활성화 지원 건수, ICT 수출액 등 모든 지표가 전년 대비 신규 지표로 설정됨
 - ☞ 신규 지표의 경우 목표 산식·측정 방식·가중치의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고, 단년도 성과 중심이라 정책성과의 지속성 판단에 한계가 존재
- 의견 청취와 정책 간의 연계 간극 존재
 - ☞ 기업 현장 방문(5.20), 수출동향 간담회(2.28, 5.20), 해외기업 간담회(6.11, 10.14)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러한 의견들이 정책 조정·제도 설계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제한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조 AX 활성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 ☞ 제조 AX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I에 들어갈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는 제조 AX 활성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수급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함

○ 현장 의견수렴의 정책 반영률 제고

☞ 기업 의견을 단순 수렴에서 나아가, 정책조정·지원사업 설계에 자동 연계되는 Issue-to-Policy 체계 도입.

○ 신규 지표의 측정 타당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표 고도화

☞ 신규 지표(만족도·지원 건수·ICT 수출액)에 대해, 지표 안정성 검증, 측정 산식 개선, 장기 추세관리 체계 도입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신규 성과지표의 검증·안정성 확보가 제한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충실하게 일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기업 현장 방문, 수출 동향 간담회, 해외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러한 의견들이 정책 조정·제도 설계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제한적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모든 지표에서 10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제조AX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해당 부분의 경우 아직 데이터가 없는 부분인 관계로 정책 영향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협업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 사회적 가치, 정부혁신 및 규제합리화의 경우 타 부서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인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 가치	일부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일부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일부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CT R&D 혁신) AI·디지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및 유망기업 참여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 ICT R&D 추진체계 개편
 - (투자확대) AI G3 도약을 위한 AI핵심기술·AI반도체·피지컬AI·지역AX 등 AI R&D(7,117억, 95%↑) 및 AI·AX대학원 등 인재양성(3,190억, 27%↑) 대폭 확대
 - (제도 개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에 ICT R&D 참여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5월)
 - (국제협력 강화) 유형별 중점 협력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우수성과 홍보,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 교류의 장 마련
- (ICT 성과 활용·확산) 산업계 및 국민생활에 활용되어 부가가치 창출 및 공공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강화
 - (기술사업화) 'AI·디지털 기술사업화 전략대화' 개최(5.28), 'ICT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전략 수립'(5월) 및 기술사업화 전용사업 신설('26, 69억원)
 - (ICT표준) 우리 ICT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표준개발(29개) 지원, 민간 표준화 포럼(31개) 운영(3월~) 및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총회 한국 개최(11월)
 - (성과 활용·확산) ICT R&D 성과를 대통령 선거(6월), APEC 정상회의(10~11월) 지원 및 '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ICT 분야 16개 선정(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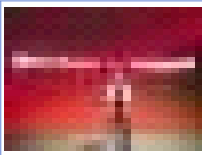
우수 사례

국가 및 국제 외교행사의 성공적 활용 및 세계 최초 기술개발 확보

- ①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불법 선거 활동 방지를 위한 딥페이크 탐지기술 활용(선관위, 국과수)
- ②APEC 정상회의 경호에 AI기반 실시간 3D지형 생성기술 활용(경호처), ③APEC 회의장 일대 자율주행차(로이(ROii)) 시범운영 및 ④APEC CEO 서밋 K-Tech Showcase AI반도체 관련 성과 전시 등
- ⑤APEC 아스파이어상* 수상(서울대 백민경 교수, '25.7월)
* APEC 역내 국제협력으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기여)를 낸 만 40세 미만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 10년 만의 한국인 수상
- ⑥파네시아* 세계 최초 CXL 3.0 기반 AI 가속기·GPU 메모리 확장 솔루션 개발 및 ISC 2025 공개**
* 2년 연속('24, '25) CES 혁신상 수상, ** 유럽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HPC 전시회(40주년) 3,000명 참여('25년 기준)



- (AI반도체 산업 육성)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기 확립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산 NPU 기술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 중점 지원
- (AI반도체 기술 확보) LLM 특화 2세대 NPU ‘리벨쿼드’ 시제품 개발 (8월) 및 ‘레니게이드’ 상용화 계획 발표 등 상용 수준 NPU 기술 확보

우수 사례		AI반도체 기술개발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 등 지원 확대		
	리벨리온, 칩렛 기반 차세대 AI반도체 '리벨쿼드' 공개 (8.27)		엑사원에 퓨리오사AI '레니게이드' 적용, SW·HW 합친 '턴키솔루션' 출시 (7.27)	

- (실증·사업화)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제1·2회 추경(794억원) 지원
- (민·관 협력)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PIM-HUB, 국산 NPU 성능평가 지표(K-Perf) 발굴·고도화 협의체 등을 통해 성과 확산, 기술 교류·협력
- (도입·확산) 공공 AX 관련 국산 NPU 활성화 방안(7월)을 마련하고 NPU 도입·활용 선도사업 신설 및 공공조달 체계 편입 지원(8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은 국정지표에 부합하나, 주요 정책과제 간 연계 구조와 상호 보완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중장기 전략의 일관성과 유기성이 다소 약하게 나타남
- 정책효과가 일부 성과창출로 이어졌으나, 국민 체감도와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 간 목표·성과 연계도를 제시하고, 과제 사이에 시너지 창출 구조를 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성과확산이 가능한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체감 중심의 정책효과 지표와 실증 사례를 확대·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수립한 계획은 국정지표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 정책 과제 사이 유기성이 다소 미흡해 보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전년도 평가 의견을 반영한 국제표준지수 성과지표는 적절하지만, 국제표준 승인건수에 대한 가중치를 좀 더 높이거나 명시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ICT R&D 혁신 연구 현장 고객 만족도 성과는 정성 평가에 치우칠 수 있어, 전체 성과지표 중 40%인 가중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충실히 수행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간담회, 설명회, 발표회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임. 단, 이를 통한 정책반영과의 연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도 성실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신규 목표치(현장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도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후 마련되길 바람. 또한, 전반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추세치 수준 대비 좀 상향된 목표치로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ICT R&D 혁신, 표준화 활동,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상위목표와의 정합성이 보통으로 보이며, 타기관과의 협업수행을 통한 정책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 딥페이크 탐지 주요성과는 사회적가치 향상 성과로 인정되나, 일반 국민의 체감 효과가 큰 적용 사례가 좀 더 폭넓게 확보되길 바람 - 원활한 R&D를 위한 나라장터 등록 및 혁신제품 신청에 대한 보완은 적극행정의 사례로 인정됨 - ICT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한 것은 규제합리화로 인정되며, 이러한 지원 증대로 인한 실제 도출 성과 사례 충분히 확보되길 바람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CT혁신기업 성장 지원) AI·디지털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창업→성장→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 (창업단계) 예비·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멘토링·엑셀러레이팅 지원 (120개사), 민관합동 창업경진대회 개최, 민관 공동 AI 특화펀드 3천억원 조성, 모험적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발굴 프로젝트 신설
 - (성장단계) R&D-스케일업-사업화(8개사) 및 솔루션·개발인력 활용 바우처 지원(15개사), AI·디지털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보증 지원(15개사), KIF 활용 3천억원 규모 자펀드 결성, 정책금융 10.8조원 이상 공급
 - (해외진출단계) 해외수요 매칭·전시회 참가 지원 통해 합작법인 5건 설립, AX·AI반도체 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위한 해외 실증 지원 착수(16건) 및 뉴욕에 美 동부 스타트업 진출 지원거점 신설

우 수 사 례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국내 유망 AI·디지털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

- ◇ 베트남(6월) 및 미실리콘밸리(9월)에서 국내 AI·디지털 기업 중심의 K-Global@ 수출·투자 전시회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정부가 함께 레퍼런스 확보 지원
- (베트남) 수출상담회 248건(4,905만\$), 현장 계약 3건(87만\$), 업무협약 21건
 - (미국) 투자계약 3건(75만\$) 및 투자 논의 2건(275만\$) 및 미국특허 3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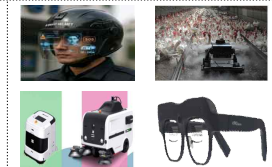


- (ICT 고급인재 양성) 산업 현장에 필요한 R&D 역량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기업 등이 연계한 연구·교육과정** 등 지원
 - (석·박사 인재양성) AI반도체 설계 및 SW 역량 배양 지원(136명), AI반도체혁신연구소 2개교 선정, AI융합연구 423명 양성. 해외 우수 대학기업 공동연구(68명) 및 해외석학 국내 유치 통해 국내 학생 연구 역량 제고
 - (인재양성 기반 강화) 학부생 국내외 기업 인턴십 지원(국내 242명, 해외 19명), 학·석사연계 교육 통해 78개 교과목 운영(787명 양성),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및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AI·디지털 분야 진출 지원(181명)

- (디바이스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피지컬AI, 온디바이스AI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 및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AX 확산을 통해 디바이스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추진
 - (피지컬AI) 로봇, 조선,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피지컬AI 생태계 확산 지원* 및 월드모델(시뮬레이터) 등 피지컬AI 핵심기술 예산 확보 추진
 - * ▲조선·해양 산업 MOU('25.11.2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성과공유회('25.4.3~4.6) 등
 - (디바이스AX) 온디바이스AI를 통한 공공분야 사회 문제 해결* 및 제조, 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디바이스 AX 확산 지원**
 - * (공공) ①해양도시 부산특화형 온디바이스AI, ②산불 조기경보 및 안전관제, ③온디바이스로 여는 안전하고 개선된 도시
 - ** (민간) 가전AI바리스타정수기, 제조스마트글라스, 치안스마트헬멧, 안전양계관리로봇 등

우 수 사 례 국내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기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AX 확산 추진

- ◇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성장 및 AI 전환을 위한 산·학 MOU 체결('25.11.20)
 - 피지컬AI 기반 조선 산업의 AI 전환 및 지역 산·학 협력, AX 확산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조선·해양 산업 MOU' 체결
- ◇ AX 디바이스의 사회경제적 분야 확산 지원 등을 위한 실증 추진('25)
 - 피지컬AI 시대 구현을 위해 치안, 제조, 안전, 교통·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AX 디바이스 확산 지원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SCI 논문 등 정성 중심 지표는 성과지표로 의미가 있으나, 기업 성장·산업 확산·인재 양성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정책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ICT 혁신기업의 다양한 분야와 수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정책소통의 범위와 깊이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정책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정성·정량 지표 간 균형 있는 성과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ICT 혁신기술분야의 균형적 성장 및 다양한 ICT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소프트웨어정책과와 과제 유사성 검토 및 협력 등을 통하여, 향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SCI 논문지표는 정성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기업성장 및 산업육성 인재 양성 결과지표로는 대표성이 약한 것으로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신규 과제 공고 및 자율주행 인공지능 챌린지 시상식 등 2건의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보임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충실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단, 정책에 유기성을 갖고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예시 및 정량적 근거가 다소 미흡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보임. 단,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한 정책소통은 다소 소극적 방식으로 보이며, ICT 혁신기업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신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잠정 달성하였음. 단, 신규 목표치가 낮은 것으로 보여, 향후 도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발생한 정책효과에 있어 국민 체감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상위목표 달성 기여는 일부 인정되나, 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파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다부처 사업을 통한 협업은 인정됨 - 사회적가치 증대 활동은 인정되나, 이를 통한 성공적 자립 사례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적극행정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및 의견수렴 활동이 정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폐의약품 회수사업 전국 확대)** 우체국과 기초지자체 간 협업, 우편제도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로 분리배출 시민인식 제고 및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목표: '24년 50개 → '25년 64개 지자체로 확대, 14개 ↑

우 수 사 례 우편제도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확대

◇ 폐의약품 회수사업 전국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하여 지자체·보건소·약사회·교육청 등 다양한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매년 참여 지자체의 지속적 증가(27→50→64)로 회수 건수 역시 증가 추세

'23년	'24년	'25.8월 누계	'25년 누계(e)<전년대비>
18,977건	57,493건	56,558건	84,837건(4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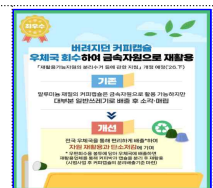
- (다양한 홍보 활동) 약의 날(11.18.)을 맞이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세종청사 공무원 대상 폐의약품 집중 회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우체국 창구TV 송출 등 홍보도 진행

- **(커피캡슐 회수사업 확대)** 일회용 커피캡슐의 분리배출·재활용 촉진을 위한 우체통·우체국 창구를 통한 우편회수 확대
 - 목표: '24년 1개 기업 동서식품 → '25년 2개 기업으로 확대, 1개 ↑

우 수 사 례 일회용 커피캡슐 우편회수 참여기업 확대

◇ 커피캡슐 우편회수 참여기업 1개 동서식품 → 2개 동서식품+네스프레소로 확대

- ※ ('24.7.17.) 우분·기후부·동서식품 협약 ** ('25.4.22.) 우분·기후부·네스프레소 협약
- (규제혁신 등 우수정책 선정) '25년 상반기 기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수상, '24년 하반기 기후부 적극행정 우수상



- **(공공사업 신규 발굴)** 우체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전·행정 지원·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사업 발굴
 - 목표: '24년 4건 → '25년 신규사업 8건 발굴, 4개 ↑

우 수 사 례 우체국 인프라 활용, 공공사업 신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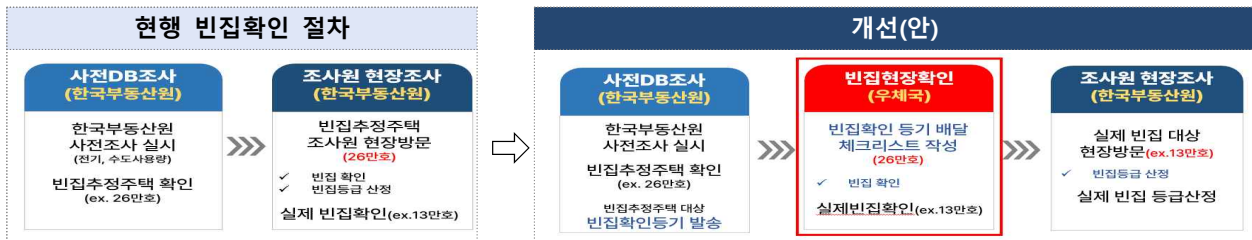
◇ (안전) 우편물류망 활용, 불량식품 신고체계 효율화 추진(식품안전정보원 협업)

- 신고자가 불량식품을 식품안전정보원(1399번) 신고 시, 기존 신고자가 택배사 선택하여 조사기관인 지방식약청·지자체로 착불소포 접수 → 시행 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우체국소포로 일원화하여 접수 연계
- ※ '25년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3위)」로 선정



◇ (행정지원) 빈집 확인 등기우편 서비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부동산원 협업)

- 한국부동산원 빈집 실태 조사에 집배원을 활용하여 빈집 사전 확인(에너지 사용량으로 추정된 빈집 의심 주택 대상 등기 발송), 11월 4주 관계기관 협약 체결 후 '25. 12월 시범 시행



◇ (복지) 지자체 복지 지원금 현금배달 시범 시행(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희망할 경우 계좌이체 되던 복지 지원금(노인일자리수당, 냉·난방비지원금 등)을 집배원이 현금으로 배달하는 사업 시범 시행

※ (시범운영) 경남 4개 군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시범사업 중으로,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금, 노인일자리수당, 지역봉사 지도원활동비 현금배달



◇ (환경)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회수(기후부·환경재단·필립모리스코리아 협약)

-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우체국 창구·우체통으로 회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고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창출, '25. 12. 16. 관계기관*협약 체결, '26. 1월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 대비 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과제 확대 추진 미흡
 - ☞ 국민 체감도(예: 취약계층 관련성 등)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 도출을 위한 공청회 등 필요
- 공공, 안전, 환경 공공서비스 발굴과 연계된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발굴 미흡
 - ☞ 24년도 지표 가스안정 복지등기 삭제 후, 25년도 커피캡슐 회수 사업 확대 지표 선정 (대표성에 대한 관련 근거 부재)
 - ☞ 공공사업 신규 발굴 과제(8건) 중 안전, 복지 등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도출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공서비스 발굴 및 추진 필요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청회 등 추진)
- 공공성, 파급성, 경제성, 고유성을 고려하여 현재 지엽적인 내용과 제한적인 목표치보다는 대표적 성과지표 도출 필요 (현재 도출된 공공사업 신규 발굴 8개 과제를 고려하여 설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전년도 성과지표 관련 지적사항으로 우정사업 중점과제 중 공익성 수익사업과 연계된 공공 서비스 발굴과 도전적 성과지표 설정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공공, 안전, 환경 공공서비스 발굴과 연계된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발굴 미흡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많은 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실적 완료, 지연 없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공유회의, 아이디어 검토회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반영은 다소 미흡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커피 캡슐 회수사업 확대, 공공사업 신규발굴 지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환경, 복지, 안전 등의 대표성 있는 신규 지표 발굴과 이에 따른 목표치 설정 적극성은 다소 미흡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사업이 의도한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제시된 효과의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로 판단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과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부족) 향후 진행 시에는 타 기관과의 협업과 확대 추진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 스타벅스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 성과는 대국민 체감적인 효과로는 인정 불가 - 타 기관 등과의 협업 노력은 충실하나, 대국민 편익 성과로는 다소 미흡해 보임 - 향후 지자체 복지 지원금 현금 배달,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확인 등기 시범운영 서비스는 확대 필요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업 역량 강화) 통상물량 감소, 택배 서비스 경쟁 심화 등 시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우편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신사업 발굴 및 서비스 개선, 우편제도 정비 등 우편 매출 확대를 위한 사업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형포장품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준등기 선납봉투 및 0호 상자 출시 등 고객 맞춤형 신사업 발굴로 신규고객 유입 유도
 - 계약소포 주말접수 확대(토→토·일), 다량고객 수집 마감시간 연장 등을 통한 소포사업 경쟁력 강화로 연간 약 300만 통 물량 증가 기대
 - 인건비 등 비용증가에 따라 원가보상률에 부합하는 등기수수료 인상, 감액제도 정비 등으로 약 800억 원 세입 증대 예상

우 수 사 례 우편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 ◇ 민간 택배사와의 소포요금 우위분석을 통해 전략적 요금구간(700g~20kg)을 선정하고, 편의점 택배 미취급 중량구간(20kg 초과)에 대해 소포요금 인상(1,000원↑) 6.7억 원 ↑
- ◇ 통상물량 감소에 따른 집배원 유희시간을 활용, 당일 12시 이전 개별방문소포 신청건에 대해 집배원이 당일 픽업 실시(시범운영 중) 배송서비스 경쟁력 강화

- (물류·집배 효율화) 고객의 배송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지속적인 운영 비용 증가 및 현장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프로세스 및 체계 개선, 운송망 최적화 및 집배 인력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 국제우편물 AI 주소판독 시스템 구축, 우편기계 유지보수 챗봇 시스템 도입 등 AX 기반 스마트물류 구축
 - 집배원을 활용한 관내국 수집망 우편물 수집 및 운송용기(파렛트) 관리 강화 시범운영 실시, 전 관서 확대 시 약 40억 원 비용 절감 예상

우 수 사 례 물류·집배 효율화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 국제우편물의 AI기반 주소판독(OCR) 시스템 시범 도입을 통해 영문 주소기표지에서 집배코드를 수집하고 기계구분 처리에 활용 물류(구분)업무 생산성 향상
- ◇ 물량감소 추세에 따라 관내국 접수우편물을 총괄국 집배원이 직접 수집(2호편)하여 운송망 감축 효과 창출
 - 현재 시범운영(73국) 중으로, 전체 확대 시 연간 약 40억 원 비용절감 효과



- (고객접근성 제고) 우편서비스의 운영 시간 및 제공 장소의 제한을 보완하고, 우편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접수채널 확대 추진, 우표문화올림픽 및 우체국 쇼핑 활성화 등 우정사업 행사·홍보를 활용한 실질적 추진계획을 작성
- 365일·24시간 소포와 친환경 우편접수가 가능한 Eco우체통 확대 추진(90 → 1,000개, 진행 중)
- 아파트 관리사무소·상가 등을 활용한 소포접수거점 확대 및 CU 편의점과 업무제휴를 통한 접수채널 확대로 고객 접근성 강화
- 안부살핌 소포우편 등 복지우편서비스 확대로 복지행정 접근성 제고, 세계우표 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 개최로 한국우정 홍보 및 약 11억 원 세입 증대

우 수 사 례 고객접근성 제고

- ◇ CU편의점 업무제휴, 아파트 관리사무소·상가 등과 연계하여 소포 접수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고객 접근성 제고 및 고객편의성 향상에 기여
- ◇ 언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와의 협조를 통한 중계상담 서비스 시행 → 한국어 취약 외국인의 고객편의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물류 프로세스 및 집배 효율화 과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우편서비스 기반 마련’ 등 정성적 서술에 치우쳐 구체적인 비용 절감액이나 시간 단축분 등 정량적 목표 제시가 미흡함
- 우편사업 매출액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수익원 발굴 성과와 매출 기여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여 급격한 통상물량 감소라는 외생 변수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가 불분명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등기우편 배달 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투입 자원 대비 산출되는 정량적 편익(인건비·유류비 절감액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와 같은 성공적 공익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표준화된 협력 매뉴얼을 구축하고, 수혜자 발굴 성과를 사회적 가치 기여 금액으로 환산하는 고도화된 지표 도입이 요구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보편적 서비스 강화라는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은 높으나, 추진 계획상 정량적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계획의 완결성이 다소 떨어짐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매출액 및 소포 배달 성공률 지표는 주요 과제를 대표할 수 있으나, 변화하는 배달 환경에 대응하는 비대면 서비스 품질 지표 등의 반영은 부족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등기 배달 방법 개선 및 안부살핌 서비스 확대 등 계획된 18개 과제에 대해 지연 없이 100% 일정 준수율을 달성하며 충실히 이행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집배원 의견을 반영하여 등기 배달 시도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노력이 돋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 업무량 산정 기준을 합의하고 고객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내부 현장과 외부 고객 모두를 아우르는 소통 체계가 우수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소포 배달 성공률 등 품질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우편 물량 감소 추세에 따른 매출액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적극성은 다소 낮아 보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안부살핌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국정 성과에 직접 기여하였으며, 집배원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이 높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예금경영수지 3,334억원^e 달성

- (안정적 자금확보) 예금유치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자산운용을 통해 안정적 이윤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고 대국민 포용 금융정책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전략적 자산운용) 글로벌 AI 투자 및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KOSPI 지수 급등 상황에서, 시장 상승 전망에 따라 **국내 주식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운용***하여 **최대 수익**** 확보

* '25년 국내주식 연간 목표비중: 4.0% → '25.10월 국내주식 비중: 5.6%

** '25.10월말 기준 국내주식 수익률(연환산): 70%

우 수 사 례 예금경영수지 목표 달성을 위한 예금유치 및 전략적 자산운용

- ◇ (적극적 예금유치)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 금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으로서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부각한 마케팅으로 수신고 증대**
 - * 정기예금 1년물 조달금리: 25.9월말 기준 2.54%(시중은행), 2.35%(우체국)
 - ** 총수신고 실적(유지잔고) : '24.12월말 87.9조원 → '25.10월말 90.0조원(2.4% ↑)
- ◇ (수익성 중심 마케팅) 이자 비용이 적은 요구불예금 확대를 위해 급여계좌 유치, 매일이자파킹 통장(단기여유자금 유치) 출시
 - * 요구불예금 유치 실적(유지잔고) : '24.12월말 18.2조원 → '25.10월말 19.3조원
- ◇ (자산운용 수익률)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위주의 시가자산 비중 확대 전략으로 운용수익률 목표(3.08%)를 초과 달성(6.00%^e, 2.92%p ↑)

○ 예금서비스 고객만족도 92.4점^e 달성

- (맞춤형 상품 제공) 우체국과 다른 업종 간의 제휴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활 등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출시
- (안전한 금융환경 구현) 보이스피싱·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3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11월)」 도입·시행

우 수 사 례

맞춤형 상품 제공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 (맞춤형 상품 제공) 친환경 소비를 위한 '어디로든 그린카드', 1020세대 타깃 'Luck-Key 체크카드' 등 고객 맞춤형 상품 출시로 체크카드 세입액 391억원 달성(목표 390억원 대비 100.3% 달성)
- ◇ (디지털 서비스 개선) 금융 생활 밀착 10대 콘텐츠* 도입 등 세대별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잇다뱅크 월 활성 이용자(MAU) 95만명 달성(전년 대비 8.6%↑)
 - * 자산관리 강좌, 관광명소 소개, 병원·약국 찾기, 우편물 배송조회, 건강정보 안내 등
- ◇ (우수고객 우대) 여행상품 할인 등 우수고객 대상 우대서비스 제휴·확대 등 우수고객 편익 증대로 전년 대비 우수고객 8.9% 증가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 목표 대비 100% 달성

- (특화 서비스 제공) 디지털금융에 능숙하지 못한 고령층을 위해 KT환급금 현금 지급 업무 대행(4월), 시니어 고객을 위한 큰 글씨 간편모드 도입(7월) 등
- (은행대리업 참여) 은행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참여 추진
 - * 은행의 예금·대출상품 판매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제도

우 수 사 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 디지털 교육' 실시

- ◇ 농어촌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실생활 금융교육 지원
 - ATM·키오스크 사용 방법, 금융 범죄예방 교육 등
 - ※ (교육실적) 우체국 집합교육과 경로당·복지관 등 방문교육을 통하여 총 84회/2,859명 교육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실적의 소수점 일치

- ☞ 성과지표 중 예금서비스 고객만족도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의 경우 목표치 92.4 이상과 16.3%에 대한 실적일치에 대한 제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측정산식 수정/보완 필요

-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의 경우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60세 이상 어르신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성과목표치 개선 필요

- ☞ 성과지표 중 하나인 ‘예금경영수지’의 경우 전년도 실적인 2,399 대비 낮은 목표치 설정을 제시하여 달성함
- ☞ 이에 대해 차년도 성과지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적절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제시된 일부지표는 주용내용과의 적합성이 낮아 해당과제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을 60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국자원 화재에 의한 지연 2건을 제외하고 월별 계획 대비 정상 추진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정책반영은 다소 미흡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다양한 계층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정책소통을 위한 추진내용이 다소 부족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제시된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적극성은 낮아 보임 - 예금경영 수지의 경우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 설정 -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서비스 품질제고' 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을 대표성이 매우 낮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서비스 품질 제고부분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며, 포용정책 추진을 위해 고령층 이외의 취약계층 발굴로 정책영향 대상 및 내용 적합성제고가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총 점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및 가계부채 누증 등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에 대응한 보험사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 (중장기전략 수립) 장기적 재정추계를 통해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등 정밀한 중장기 전망을 통한 영업·상품개발·자금운용 등 **보험전략 마련**
 - (보험영업 강화) 신상품 출시와 연계한 마케팅 강화 및 보장성보험 중심 성과평가 개선 등을 통해 **신규 영업실적 1,380억 원^{(100%) 달성}**
 - (고객맞춤 상품 출시) 고령화·의료비 증가 등에 대응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 6종* 출시 및 ^{보험료 현실화 등} 전상품 개선을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

* 보장 강화(치매요양간병, 든든한건강종신, 뇌심케어, 암뇌심주요치료비, 건강클리닉), 수익 환원(보너스팡팡연금)

우 수 사 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추계 기반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

- ◇ (사업전략 수립·추진) 보험·금융시장 전망을 반영하여 재정흐름을 산출하고 보험사업, 자금운용, 경영관리 3개 분야 10대 대응 전략 추진
- 가정 한계 보완·정교화 등 재정추계 정례화, 수입보험료·보험수지 개선을 통한 경영수지 회복 노력 및 안정적 운용수익 확보를 위한 운용체계 마련
 - 이를 통해 **영업목표 달성(100%),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초과 달성(2.95%p↑)** 등 지속 가능한 우체국보험 사업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



- 우체국의 차별성을 살린 생활 밀착형 공익사업 신설·확대 및 ESG 투자 증대를 통한 국영보험으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강화**
 - (공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미래 대비를 위한 공익보험^{5종} 무료 가입 확대 및 우체국 네트워크 기반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등으로 **공적역할 제고**
- * 농어촌 어르신 디지털 교육(4월~), 인구소멸 지역 어르신 복지지원금 현금배달(6월~), 자원순환수거 인프라 구축 사업(7월~), 소외계층 지역 아동 대상 우체국 음악회 개최(9월)
- 사업의 효과성과 혜택 수준 등을 평가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으로 **체감도·만족도 향상**

* (공익사업 만족도) '22년 90.1점, '23년 88.4점 '24년 89.8점, '25년 90.0점

우 수 사 례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엄마보험 활성화

- ◇ (대한민국 엄마보험 활성화) 태아등재 제도 개선, 임신부 맞춤형 이벤트 및 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홍보 강화로 가입자 확대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등에 기여
 - 느린편지 첫마음 배송, 슬기로운 엄마생활 등 수혜자 참여형 이벤트 및 복지부 홍보물·행안부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등 맞춤형 홍보 강화
 - '24.70천명에서 '25.128천명(82.9%↑)으로 큰폭으로 증가(동기간 전체 출생아의 약 1/2↑)



- (ESG투자 확대) 책임투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연기금 현황 분석 등 책임투자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ESG 투자규모 7.8조원(106.6%) 달성

* 유관 기관 동향, 우체국 금융의 사회책임 투자 현황 및 사회책임 투자기준 등 방향성 설정 등

우 수 사 례

미래성장 기반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 ◇ (AI산업 투자 확대) 정부 국정과제 'AI 3대 강국 도약'과 연계하여 창업 초기의 AI 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 확대로 AI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 AI벤처캐피털·사모펀드에 기존600억원에서 '25.1,000억원(66.7%↑)으로 투자 확대
 - 약정을 통한 약 2,000억 원(투자액의 200%) 규모의 AI 산업 투자효과 창출
- ※ (투자한도) 보험적립금 총액의 1%. 단, 연간 투자금액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초과 불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항목 중 '공익사업 만족도'의 경우 3년 연속 실적이 평균 대비 낮은 보수적인 설정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재설계가 필요함
- 사회안전망으로서 책임활동 강화 등을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을 제고 하기 위하여 치료비, 생계비 등과 같은 생활밀착적인 항목의 큰 폭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적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범부처 협업 성과를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부처 간 공동 과제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기여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추진 과제별로 투입 예산 대비 산출되는 정량적 기대효과(공익보험 수혜자 증가율, 민원 감소율 등)를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보험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 소외계층 보험 가입 지원 등 공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실적을 정례적으로 보고서에 반영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입증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추진계획의 기대효과가 추상적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누락되어 계획의 완결성이 미흡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경영수지와 만족도 등 균형 잡힌 지표를 선정했으나, 공익보험 가입률 등 우체국보험만의 독자적인 공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 비중이 낮아 보완이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계획된 18개 과제에 대해 지연 사유 없이 100% 일정 준수율을 달성하며 충실하게 집행 프로세스를 관리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우체국장 회의 및 FC 간담회 등 3회 이상의 현장 소통을 통해 '엄마보험' 태아 등재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이 우수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보통	보험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적절히 활용하고 고객 패널 제도를 운영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시에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공익사업 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대비 104.3%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3년 연속 실적보다 매우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향후 지표 변경 또는 성과목표 설정의 재설계가 필요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엄마보험 등 공익형 상품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는 우수하나, 실손 청구 간소화 등 부처 간 협업 성과가 보고서상 누락되어 상위목표 기여도 평가가 제한적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우수"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IV-1-①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 수립 >

- 'AI고속도로'의 완성과 국가 전략산업인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Hyper AI 네트워크* 전략' 수립(12.18)

우 수 사 례 Hyper AI 네트워크 전략 수립

- ◇ 향후 「AI에이전트」·「피지컬AI」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네트워크 요구 ⇒ 세계 최고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추진
- ◇ 동시에, 격화되는 기술패권경쟁 下 글로벌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거대 시장(약 1,200조)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산업 전략도 병행 추진



< 6G 상용화기술 및 표준 주도권 확보 >

- (R&D) 203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6G 유·무선 시스템 및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연구하는 에타사업* 계속 지원 중

*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 '24~'28년, 총사업비 4,407.3억원('25년 869억원)

- (표준화 리더십 확보) 6G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U, 3GPP 등 국제 표준기구의 리더십 확보 활동 등 지원
- (ITU) 이동통신(IMT)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ITU-R WP5D 회의에 대표단(24명) 참가('25.10월), 국가기고서(12건) 제출 및 국내입장 반영

< AI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쏠주기 지원체계 마련 >

- (R&D) 차세대 '지능형 기지국(AI-RAN)' 선두주자인 美 엔비디아와 국내 산·학·연 간 MoU 체결(10.23)을 통해 기술협력 확대 기반 마련

※ (체결주체) 韓 통신3사(SK·KT·LGU+)·삼성전자·ETRI·연세대, 美 Nvidia*

* Nvidia는 AI시대 네트워크 중요성을 고려, 이례적으로 젠슨황 CEO 명의 서명

- (실증·기반조성) 오픈랜 실증사업('25년 39억원)을 통해 국내 기업 오픈랜 장비 레퍼런스 창출, AI-RAN으로의 진화에 대비한 선제적 실증*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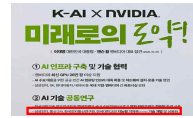
우 수 사 례

美(엔비디아) - 韓(통신3사 등) MoU 체결을 통한 기술협력 확대 기반 마련

◇ 차세대 오픈랜 기반 '지능형 기지국(AI-RAN)' 선두주자인 美 엔비디아*와 국내 산·학·연 간 MoU 체결(10.23)을 통해 기술협력 확대 기반 마련

※ (체결주체) 韓 통신3사(SKT·KT·LGU+)·삼성전자·ETRI·연세대, 美 Nvidia

* Nvidia는 AI시대 네트워크 중요성을 고려, 이례적으로 CEO 명의 서명



< 국제협력 기반 마련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

○ (MWC 2025) 모바일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 ‘MWC 2025’(‘25.3월) 계기, 대한
민국 디지털 정책·네트워크 산업 홍보 및 세계 주요 정부·기업과의 협력 강화

- (Mobile Korea 2025) 글로벌 6G 리더십을 대표하는 EU(6G-IA)와 MoU
체결 등 국가 간 협력을 위한 ‘Mobile Korea 2025’* 개최(‘25.10월)

* 16개국 60개 기관 300명 참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동향 공유 및 6G 비전·기술 논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시행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 상세 점검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면서 유지보수제도* 본격 시행(‘25.7월)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화(‘23~‘24년, 법령개정)

※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부여(~‘26.1.18.)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현장 안착 지연: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26.1.)을 부여했으나, 제도 인식 부족
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 이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됨. 본 과제는 정상추진 중으로, 성과지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제도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에 어
려움이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6G·오픈랜 등 차
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경쟁국
(미·중)의 기술 블록화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지보수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주체 대상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설명회 및 인정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안전 기반을 확보해야 함.
-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연내 수립되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바탕으로 AI-RAN, 6G 등 핵심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Mobile Korea 2025' 등 국제 행사를 활용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을 강화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Hyper AI 네트워크 전략」 수립 및 6G 상용화 기술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 로드맵이 충실히 제시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특허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등급지수(SMART) 도입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이용량을 지표로 설정하여 목표의 도전성과 적절성이 우수함.
kq=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6G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시내버스 와이파이 시범서비스(5G-WiFi 7) 개시 등 연간 계획된 주요 일정을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15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 등 지속적인 갈등 관리 노력이 더 요구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MWC 2025 참가 및 Mobile Korea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글로벌하게 홍보하고, 오픈랜 운영위원회 등 산·학·연 소통 채널을 활발히 운영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AP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목표(107.1GB)를 초과 달성(111.4GB, 104%)하였으며, 법령 개정 목표 또한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정량적 성과가 매우 우수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AI-RAN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함. 다만 유지보수 제도의 현장 안착은 진행형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 및 국가위기 소통체계 지원 >

- **(기본계획 수립)** 재난·장애관리 의무 사업자*의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의무 사항을 반영한 「'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12월)
 - (기간통신) KT, SKT, LGU+ 등 11개사, (데이터센터) 삼성SDS, KT클라우드 등 8개사, (부가통신) 네이버, 카카오 등 10개사(^{25년}8개사→^{26년}SKT, 지에스네오텍 2개사 추가)
- **(법·제도 정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2월)하고,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12월)
 -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네이버 등 9개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다원화(온라인, ARS) 및 실시간 처리(답변) 의무 부여, 처리기한(3영업일 이내) 명시 등
 - 위기경보 판단 기준 개선, 전력 차단에 의한 통신망 장애 대비, 세부 지역별 피해·복구 현황 파악 등
- **(모의훈련)** 디지털 재난·장애 대비 강화를 위해 대설·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복구 체계 점검
- **(국지망 지원)** 재해·재난, 안보 이슈 등 국가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국지망을 활용한 영상회의 및 SNG(Satellite News Gathering) 차량 등 지원

우 수 사 례 대규모 행사에서 주요 통신장애 미발생

◇ 여의도 불꽃축제(9.27.), 핼러윈(10월), APEC 2025 정상회의(10.31.~11.1.) 등 대규모 행사에서 주요 통신장애 미발생

※ 통신설비 및 서버자원 증설, 이동기지국 차량 및 인근 기지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요원 배치,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비상 대응체계 운영



< 디지털 기술 기반 국민안전 제고 >

- **(안전모델 발굴)** 포트홀, 블랙아이스 등 실시간 도로 위험 요소 감지·분석 솔루션, 산악지역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구조 AI 정밀탐색 시스템 등 개발 및 실증*
 - (실적) 태백시와 협업으로 도로위험 감지솔루션 개발 운영 / 대전시청, 서울 관악서 등 현장 관서 실증 운영을 통해 112 및 드론 동시출동 효과성 검증

< 사물인터넷 고도화·적용 확산 >

- **(표준 확산)**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홈 IoT 글로벌 연동표준인 Matter* 국제공인시험인증소 운영으로 중소기업 대상 비용 및 시험기간 절감
 - * 플랫폼과 관계없이 가정에서 다양한 홈 IoT 기기의 연결·제어가 가능한 국제표준
- **(민간 협업 활성화)** 홈넷, 가전, 건설 등 이종 분야 기업 간 지능형 홈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운영
 - * 정책제도, 서비스, 기술표준 등 분과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능형 홈 정책·제도 개선안 발굴, 지능형 홈 활성화 지원제도 연구 및 개발자 대상 교육 등 실시
- **(중소기업 지원)** 송도·가산 IoT기술지원센터, 인천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IoT 제품·서비스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견인
- **(대국민 홍보)** 국제전시회, AIoT 신제품·솔루션 발표회 등 AIoT 기술에 대한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 AIoT Week Korea 개최(11.26.~28.)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 생활 밀착형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 카카오(4.4.), 삼성페이(6.2.)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여, 정부의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안정성은 미흡하였음.
- 사전 예방 체계의 현장 작동성 부족: 트래픽 급증 대비나 시스템 변경 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실제 일부 사업자의 현장 적용 미흡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정책의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 이행력 확보 :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장애 재발 방지 체계 마련 필요
- 국가 위기 대응 인프라(국지망) 투자 확대: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우려를 해소하고 영상회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을 현실화하고 전용회선 효율화를 추진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계획은 기한 내 마련하였으나, 반복되는 서비스 장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예방 대책 수립은 다소 미흡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디지털재난안전지수 등 정량적 지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규모 장애 발생 여부가 지표 달성도에 충분히 연동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주요 통신사업자 실태점검(6월), 을지연습 훈련(8월), 법령 개정(2월) 등 연간 계획된 주요 일정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운영 등 산업계 소통은 원활했으나, 장애 발생 이후 사후적 시정조치(5건)에 집중되어 사전 현장 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노력은 강화가 필요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K-IoT 해외로드쇼 개최, AIoT 위크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성과를 홍보하고 민관 협력을 도모한 점은 긍정적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디지털재난안전지수, IoT 매출 달성 등 설정된 정량 목표치는 100% 달성하였음. (다만, 장애 발생 사실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 일부 하향)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 무장애를 달성한 성과는 있으나, 카카오○삼성페이 장애등 국민 불편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이라는 상위목표 기여도가 낮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① 정보보호 종합 대책 마련으로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보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10.22., 부총리)
- ②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해킹대회 데프콘에서 4회 연속 우승 달성 등 한국 화이트해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
 -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을 통한 최정예 화이트해커를 양성하여 세계 최고의 해킹대회(DEFCON CTF*)에서 대회 최초 4연속 우승('22~'25년)
 - 직무 중심* 교육의 정보보호특성화대학(7개교)과 산업 특화** 융합보안 대학원(9개교) 지원을 통해 사이버보안 인재 지속 양성

* ①보안관리, ②사고대응, ③보안SW 개발 직무 중 1개 선택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 가상융합, 모빌리티, 항공·우주, 제어시스템, 헬스케어·의료

우 수 사 례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및 국제해킹대회 4년 연속 우승 성과 달성

- ◇ (종합대책) 현 사이버 위협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발표(10.22, 부총리)
- ◇ (국제해킹대회) 차세대 보안리더(BoB)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 대회 데프콘에서 4년 연속 우승(8.10, 美 라스베이거스)



③ 미래 글로벌 암호체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으로 암호체계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여건 마련

- '35년까지 체계적·안정적인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중점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종합 추진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9.9)
- 국가 주요 산업분야('25 행정, 의료, 에너지) 대상 최초로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해결방법 등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시범전환*

사업 착수

* 행정, 의료, 에너지 3개 분야 IT 인프라 대상 암호모듈 개발, 상호운용성, 호환성 등 기술 검증

④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ITU-T SG17 회의에서 정보보호 국제표준 14건을 승인받고, 의장단 16석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보안 주도권 확보

- ITU-T에서 디지털 신원 지갑, 제로트러스트 보안 등 신규 표준화 항목 9건 승인,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국제표준 1건 사전채택
- 새로운 연구회기('25~'28)에 의장단 16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지속해서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작업반 2석, 연구과제그룹 12석, 합동조정그룹 2석

⑤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제로데이 공격을 사전 예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큐싱 확인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피해 제로 달성

- 한국인터넷진흥원 內 「윈도우10 종료(10.14) 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축·운영하고, 유관기관과 24시간 신속 공조·대응체계 유지(4월~)

※ 제로데이 공격 발생 시 MS社·보안업체와 협력하여 전용 백신 개발·보급 예정 및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안내를 전국 초·중·고(4월)와 전국 PC방(6월) 등에 배포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반복되는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예방 체계의 한계 노출: SKT 개인정보 유출(4월), 정부 온나라 해킹(7월), 롯데카드 정보유출(8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9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11월)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사고 발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함.
- 성과 포장과 실제 지원의 괴리: '데프콘 4회 연속 우승'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으나, 이는 다국적 연합팀이자 국내 특정 민간기업(티오리) 주도의 성과일 뿐이며, 정부의 별도 지원은 없어 정책성으로 보기 어려움.
-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난맥상: 최정예 보안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KITRI BoB(Best of the Best) 프로그램이 운영상 차질을 빚으며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인력양성 정책의 내실이 부족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효성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보안 대책 재정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고 빈발 분야(통신, 금융, 공공)에 대한 강도 높은 이행 점검과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함.
- 민간 성과의 단순 편승 지양 및 실질적 지원 강화: 민간의 자생적 성과를 부처의 실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함.
- 양적 성과를 넘어선 질적 대응 역량 강화: 화이트해커 양성 대회 우승 등 홍보성 성과보다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의 배치와 처우 개선 등 실질적 보호 역량 확충에 집중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종합대책(10.22.) 수립 등 형식적 계획은 마련되었으나, 연초부터 이어진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함. 특히 '데프콘 우승' 등을 주요 성과로 계획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예산 지원 계획은 전무했던 점 등 계획과 집행의 괴리가 큼.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지표가 단순 정책 건수나 R&D 산출물 등 투입·산출 위주로 설정되어, 실제 목표인 '사전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또한, 정부 지원이 없는 민간 기업의 성과를 정부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kq=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연간 일정은 대체로 준수했으나,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인 KITRI BoB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차질과 잡음이 발생하여 내실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올해 긴급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속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전문가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은 가동했으나,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 규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더디고, 화이트해커 그룹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하지만 실질적 지원책이나 규제 개선 등은 정책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큐싱 확인서비스' 등 대국민 홍보는 긍정적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위기 소통은 미흡했고, 민간 주도의 성과를 정부 성과로 과대 포장하여 홍보한 점은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정책 제시 실적(18건), R&D 성과 등 설정된 정량적 지표의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점수는 부여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정량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정부 온나라·금융권 등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사전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보보호 산업 육성 >

- (IoT 보안 강화) 로봇청소기 보안점검*을 통해 생활 밀접 제품의 보안을 강화하고, IoT 보안제도 국외 상호인정 등**을 통한 국내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한국소비자원 협력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추진(3~8월), 민관 협력 대국민 안전 수칙 홍보(8월~)

** 국내 인증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독 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MRA) 체결(9월), 글로벌 사이버보안 라벨링 협의회 공동성명 및 협력 방안 논의(10월)

- (공시제도 개선)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으로 정확성을 제고하고 의무대상 확대, 공시 항목 세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추진**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사에 대해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등 검증

** 공시 의무대상 전 상장사로 확대, 투자 및 활동 현황 세분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 (정보보호 클러스터) 기존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시설,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내실화*하고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구축(충청)** 추진

* 5대 핵심서비스 보안리빙랩 구축 등 시설 고도화(판교), 지역 전문기업 및 인력 양성 방안 마련(동남)

** (추진경과) 공모(3.25.~4.30.) → 선정평가(~5.21.) 및 선정(5.26.) → 구축 추진(~12월)

우 수 사 례 IoT·디지털기기 등 국민생활 밀접한 기기의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안내재화 확산

- ◇ 선제적 로봇청소기 보안 수준 점검 및 민관 협력 대국민 안전 수칙 홍보
 - 로봇청소기 포함 디지털 제품 구매시 제품별 보안사항 확인 필요 인식 제고 계기 마련
- ◇ 디지털보안 전문성,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제품 합동 보안점검 계획 수립
 - 일부 제품의 사생활 노출 가능 취약점 즉시 보완조치, 소비자 IoT 보안인식 제고



< 신기술 보안 산업 확산 >

- (팀 시큐리티 코리아) 한국형 통합보안* 모델 개발(3종), 민간 주도형 추진 체계 「팀 시큐리티 코리아 협의회」출범(200개사 이상 참여)으로 협업 활성화

* 다수의 보안 기능을 통합해 보안위협 탐지·대응 및 관리·운영이 가능한 차세대 보안 플랫폼

※ 팀 시큐리티 코리아 참여기업 중심 제품개발, 특허전략, 투자유치 등 지원(8개사)

- (AI 보안기업 육성) AI 기반 보안 기술 개발·사업화를 통한 보안 위협 대응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다각도 판로 개척 지원*(9개사)

* AI 보안 유망기업 비즈니스·투자상담회, 성과공유회, AI해킹방어대회 등 개최 지원

< 정보보호 인재 양성 >

- (산업연계 인재양성)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설계·운영, 채용까지 연계한 정보보호 인재양성(2,505명)
- (취업지원) 채용연계 기업 인턴십, 현업전문가 멘토링, 기업 참여 실습 프로젝트 등 실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및 취업박람회 개최(22개사, 941명 참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루키 Meet-up 데이’(해외연사 국내 초청 특강) 개최

우 수 사 례 정보보호 구직인력 대상 산업계 진출을 위한 취업역량 프로그램 및 취업연계 지원

- ◇ 정보보호 구직인력-기업 간 직접 매칭을 위한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개최
 - 채용연계 기업 인턴십, 정보보호 채용정보, 수강생 및 수료생 대상 취업컨설팅 제공
- ◇ 해외연사 국내 초청 특강 ‘정보보호 루키 Meet-up 데이’ 및 글로벌 기업탐방 기회 제공
 - 구직인력 대상 보안직무 이해, 선진기업 문화경험, 정보보호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 이해 함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생활 밀착형 디지털 제품에 대한 법적 규제 권한 미비: 로봇청소기 해킹 등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민간 제조사의 제품을 강제로 점검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 정량적 성과 대비 체감형 시장 확산의 과도기: 'Team Security Korea' 출범 및 펀드 조성 등 공급 측면의 기반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지원책이 실제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이나 매출 폭증과 같은 가시적인 시장 성과로 직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보안관리 체계 법제화: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제품에 대해 정부가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함.
-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 성과 추적 관리: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넘어, 실제 수출계약 및 파트너십 체결(27건 논의 등)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추적 관리와 현지 실증 지원을 강화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디지털 기기(IoT)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이 다소 지체된 측면이 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정책 추진율', '인재 양성 수' 등 과정 중심의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매출 증대, 수출액 등)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음.
kq=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200억 규모), 클러스터 공모(충청), 실태조사 등 연간 계획된 주요 과제들을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Team Security Korea' 협의체(200개 사 참여)를 통해 민간 주도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청소기 보안 점검 시 소비자원과 협력하는 등 현장 소통 노력이 인정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한-독 IoT 보안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대국민 보안 수칙 홍보 등 대내외 정책소통을 활발히 수행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우수	정책 추진율 100%, 핵심 인재 양성 목표 달성 등 설정된 정량 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지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위권 점수 부여.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MRA 체결로 수출 기반을 닦고 펀드를 조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생활 속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 부재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효과는 제한적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능동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예방 조치>

- (침해사고 대응) 침해사고 원인분석*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SKT, KT, LGU+)

* '25년 10월말 기준, 침해사고 신고접수(1,969건), 피해기업 원인분석 지원(1,574건)

- (스미싱 대응)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계정탈취 등으로 인한 스미싱 대량 유포 방지를 위해 문자 발송단계에 사전 차단체계(X-ray) 도입('25.4월~)

- (정보공유) 사이버위협 적시 대응을 위해 C-TAS를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및 회원사('24년 4,408개 → '25년 5,124개) 확대*

* 침해사고 신고기업, 유관 협·단체 등 회원사를 확대하고 공격자 정보·수단, 피해정보, 취약점 등 다양한 연관정보 공유 추진('25년도 10월말 기준 총 11.2억건 공유완료(누적))

※ YES24, SGI서울보증 등 랜섬웨어 침해사고 다수 발생으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백업 8대 보안수칙' 마련하여 KISA 보호나라 및 C-TAS 통해 공유(7월)

우 수 사 례 중대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약 2,696만건의 유심정보가 유출되어 민관합동조사단(4.23. 구성)을 통해 약 3개월간 조사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등을 요청(7.4. 발표)
- ◇ KT 펌토셀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여 민관합동조사단(9.9. 구성)을 통해 보안 문제점 등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여 이행 요청(12.29. 발표)
 - KT 전체 서버 점검 및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었음을 추가로 확인 및 조치 요청
- ◇ 익명 제보를 통해 자료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LGU+의 침해사고 안내·신고 이후 민관합동조사단(10.24.)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강화>

- (기반시설 관리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보호 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보호 역량 제고
 - 파급도가 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지정범위 재검토를 수행하여 중요 데이터 처리·저장 장비 등 보호범위에 포함('25.8월)

- 취약점을 악용한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침해사고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위험 취약점 관리* 추진('25. 추경)

<정보보호 주요 제도개선>

- (침해사고 관련 제도개선)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직권 조사 신설, ISMS 인증제도, CISO 제도 등 개선추진 (10.22 종합대책)

<침해사고 관련 제도개선 내용>

분류	주요내용	추진 현황
침해 사고	•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전에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 기업 신고 시에만 현장 조사 가능	발의(9.15., 최민희) → 법사위 통과(12.3.)
	• 침해사고 신고의무 위반(미신고·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 (현행) 최대 3천만원 이하 → (변경) 5천만원 이하	발의(9.15., 최민희) → 법사위 통과(12.3.)
	•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권고한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 (현행) 과태료만 규정	발의(5.22., 조인철 등) → 법사위 통과(12.3.)
CISO	•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한 정보 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임무 강화* 추진 * 정보보호 인력·예산 편성·집행,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IT 자산 통제권 등	발의(9.2., 조인철) → 법사위 통과(12.3.)
ISMS	• ISMS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신사 등 중요사업자 대상 점검항목 및 점검방식 강화(현장조사, 사고기업 관리강화 등) ※ 이동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최신 보안위험을 반영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심사원 가이드라인 개발('25년 추경)	통신사 특화 점검항목 개발(12월) → 사업자 적용·배포예정('26.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핵심 기반시설의 방어 체계 침해: 침해사고 대응 조치율 등 사후 대처 지표는 달성했으나, 국가 통신 기간망인 통신 3사(SKT, KT, LGU+)에서 유심 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등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효과가 미흡했음.
- 기업의 안일함과 정부의 형식적 감독: 통신 3사 사고 등은 AI 공격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실패와 관리 소홀이 주원인임. 정부의 감독이 체크리스트 확인에 그쳐, 기업의 '자율'이 '방임'으로 변질됨.
- 사고 수습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적 중복 조사': 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KISA, 개인정보위, 경찰, 검찰 등 상황에 따라 6~8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함. 이로 인해 피해기업의 핵심 인력이 행정 응대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원인분석과 서비스 복구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효율이 반복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여주기식 점검 대신 '상시 불시 점검' 체계화**: 포렌식 센터 구축 등 예산 따내기식 하드웨어 확충보다, 평시에 예고 없이 수행하는 '불시 실전 모의침투'를 통해 기업이 감추고 있는 진짜 구멍을 찾아내야 함.
- '침해사고대응과' 중심의 조사 채널 일원화 및 교통정리: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사고 시 부처 간 중복된 자료 요구를 통폐합하고 창구를 단일화해야 함. 정부가 기업을 들볶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 기술 조사와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종합대책 등 계획은 수립했으나, 사고 발생 시 부처 간 혼선 방지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계획'은 미흡함. 또한, 실제 사고 원인인 '내부 통제 실패'를 차단할 실효적 계획보다는 시스템 구축 등 예산 투입 위주의 계획에 치중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대응 조치율(96%)'은 수치상 달성이나, 사고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효율적 복구를 지원했는지를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모의훈련, 법령 개정안 발의 등 행정적 절차는 계획대로 이행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사고기업들은 중복 조사로 인한 업무 마비를 호소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수사·조사 채널 일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스미싱 예방, C-TAS 정보 공유 확대 등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은 정상 작동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침해사고 대응 조치 건수 등 정량적 목표는 달성하였으므로 점수 인정.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통신 3사의 연쇄 사고는 '예방 실패'를 의미하며, 사고 후 난립하는 조사기관들로 인해 '신속한 복구'라는 정책 효과마저 반감됨.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사고 수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설적 상황 발생.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① 신규사업자(제4이통) 정책 방향 발표 >

-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을 마련·발표(1.15.)
 -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신규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②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이음5G 신규 진입 지원 >

-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해외사업자의 국경간 공급 체결 검토·승인*을 통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행정절차를 완료
 - * 스페이스X(스타링크코리아, '25.5.30.), 원웹(한화, 케이티셋, '25.5.30.), 원웹(SK텔레콤, '25.9.19.)
- (이음5G 등록) 한국수력원자력 등 이음5G 사업자 추가 등록*을 통해 5G 특화망 특성(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에 기반한 산업별 현장 서비스 고도화 지원
 - * 스맥(안전관리 솔루션 연구·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건설관리, 안전관리 고도화), 에치에프알(영상무전기, 로봇 등 실증) 등

참고 신규사업자(제4이통) 정책방향 발표 및 저궤도 위성 관련 국경간 공급 승인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 ◇ 2025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 방침
 - 도매대가 대폭 인하, 1만 원대 5G 20기가 요금제 출시 기대
 -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 신뢰 제고
- ◇ 신규사업자 정책은 시장수요 기반으로 전환,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신청 가능

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0일(금) 스타링크 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 케이티셋(대표 서영수)이 유텔넷 원웹(이하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③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정비 및 현행 제도개선 병행 추진 >

- 국민 통신비 부담, 통신망 해킹 사고, 보이스 피싱 등 시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추진
 - * ▲ 단통법 폐지, ▲최적요금 고지제, ▲침해사고 시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감독 강화 등

- 아울러, 통신시장 환경 변화 반영, 시장경쟁 및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병행 추진**

- * ①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고시 개정, ②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당한 도매제공 협약을 반력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마련, ③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부담 차별지급 유형·기준 마련(입법예고) ④ 대량 문자전송 사업자의 등록요건 강화(입법예고), ⑤ 알뜰폰사 보안 강화 위한 등록요건 정비(입법예고) 등

< ④ 전기통신사업자 통신회계 자료 검증 등 >

- 전기통신사업자(12개社*)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 회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회계분리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2024회계연도 기간통신역무 매출액 8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 영업보고서 검증 계획 수립('25.1월) → 전기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제출('25.4월) → 영업보고서 검증(~'25.11월) → 시정 조치('25.12월말)

- 주요 통신사(SKT, KT, LGU+, SKB)의 분기별 실적 발표(IR) 검토를 통해 매출액, 마케팅비, 투자비, 영업이익 등의 추이 등을 분석하여 통신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최근 알뜰폰 서비스 확산으로 통신료가 상당 부분 낮아졌으나, 여전히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가 존재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MNO 뿐 아니라 Full MVNO 등 알뜰폰을 포함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다소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과제에 대한 지표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국민의 체감 정도는 낮음
kq=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미흡. 소비자단에서의 정책 체감 정도가 미흡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시장내 규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사업자와의 의견 소통이 충분하지 않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특정연도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관성이 정책 성과의 일관성이 떨어짐.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계획수립 시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실패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불충분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업계의 의구심을 잠재울 만한 협력 방안이 다소 미흡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알뜰폰 경쟁력 제고) 이통사·알뜰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월)
 - *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부가서비스 제공 확대, 정보보안 의무 및 등록요건 강화 등
- 중소 알뜰폰사 보호를 위해 이통사-알뜰폰사 간 도매대가 협상의 자율성은 높 이되, 이통사의 불공정한 행위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3월, 시행령 개정)

우 수 사 례 ‘5G 1만원대 20GB’ 요금제 출시 ◇ 데이터 도매대가 대폭 인하(36%↓) 등을 통해 이통사 대비 40% 이상 저렴한 알뜰폰만의 요금제 출시 지원(7개사 18종)	
--	---

- (취약지역·계층 통신접근권 향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제공
 - 응급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도 직접 119 신고·대처하도록 소방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수어통역 시행(4월)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 (플랫폼 정책기반 조성) 네이버·메타 등 8개 플랫폼 대상으로 자율규제 원칙* 이 행을 점검하고 현황을 공개(9월)하여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 *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 플랫폼 분야 사회적 합의 유도 등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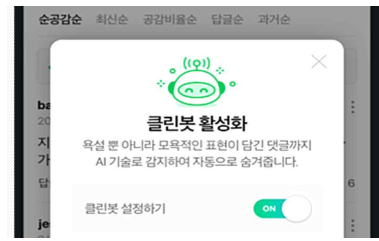
[현황 공개 사이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행점검 현황 공개 보도자료]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



우수 사례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굴·확산 및 소상공인 동반 성장 촉진

- ◇ 투명하고 안전한 AI 서비스 제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성과 발굴·확산
 - (구글) 생성형 AI 콘텐츠 워터마크·라벨 표시 등 안전조치
 - (네이버) 음란물 차단 '그린아이', 악플차단 AI '클린봇' 운영 등
 - (카카오) 답페이크 악용 영상물 유통 시 원스트라이크 영구제재 정책
- ◇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플랫폼(카카오)-소상공인 동반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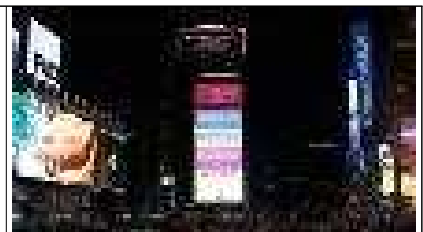
- (K-OTT 확산 지원) AI 더빙 특화 사업('25. 80억원)으로 현지화한 K-채널 20개를 K-FAST(삼성·LG) 기반으로 북미·중남미·유럽 등에 송출

※ K-채널의 해외 판로개척 종합지원으로 K-FAST 글로벌 쇼케이스 개최(11월, 뉴욕)

[SBS, MBC 등 다수 언론보도]

[글로벌 K-FAST 쇼케이스 현장]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홍보]



-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8월, 부산)하여 투자유치 쇼케이스, 국제 스트리밍 서밋, 글로벌 OTT 어워즈 등 국내 OTT·콘텐츠·AI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제공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알뜰폰 경쟁력 확대를 통해 통신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K-OTT 확산을 위한 지원을 K-FAST 기반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했으나 방향성에 있어 의구심 존재.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 추세가 정책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효과가 5G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정책 필요.
- K-FAST를 통한 K-OTT 플랫폼 확보 및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이 제시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국정지표에 부합되게 적정한 계획이 수립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통신시장의 보편적 의무 제공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적절히 수립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의 추진이 적장하게 이루어짐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 실행에 있어 소비자와의 소통이 미디어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짐.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디지털플랫폼 상생강화협력의 경우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디지털플랫폼 상생강화 부문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플랫폼 사업자간 상생 협력 방안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 >

- **(통신 요금제 개선)** 5G 요금제 대비 열위인 LTE 요금제 간소화(2월), 무약정·자급제 요금제 출시 및 LTE-5G 통합요금제 신설 유도(~12월)
-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7.22), 다양한 중저가폰 출시 유도,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운영(5.28~)

우 수 사 례 통신 물가지수 및 가계통신비 지출은 안정적 수준 유지

<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 및 가계통신비 추이 >



◇ 매년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통신비 지출 규모는 안정적 수준 유지

<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



◇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통신 부문 물가지수 상승률은 낮은 수준

<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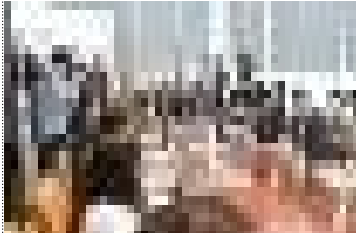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8.28) 및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발족(10.15)
- **(민·관 협력)**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8.8), 악성앱 차단 관련 과기정통부-구글 업무협약 체결(9.10)

우 수 사 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소통·협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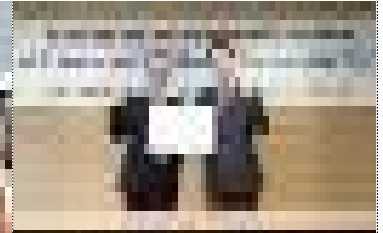
◇ 개인정보위, 국과수, 이통사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모색(8월)

◇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악성앱 설치 차단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 체결(9월)
-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약 3,500만대)에 구글의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

<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8.8) >



< 과기정통부-구글 업무협약(9.4) >



< 이용자 보호 및 합리적 통신소비 지원 >

-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SKT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지도(5월) 및 디지털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 유도
- **(통신 채무자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등 통신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 ※ 통합 채무조정 시행 이후 8개월 간('24.6~'25.2월) 29,700명에게 통신채무 612.5억원 지원
-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개최(7회), 제도개선* 추진
 - * (예) △부가서비스 장기미납 채권 추심, △휴대폰 소액결제 시 익월 환불 개선 등
- **(대형재난 피해 수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요청 시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 선제적 통신요금 감면 조치 시행(1월)

우수사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협의, 애플·카카오·삼성전자 협조를 얻어 유가족 요청 시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 결정
- ◇ 희생자 여권번호를 확보하여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하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선제적 통신요금 감면 조치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AI를 활용한 대응 방안 마련에 타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범죄자들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
- 제조사에게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통신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가계통신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요금제를 통해 잘 이루어진 반면, 단말기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정책 추진이 일정에 맞게 잘 이루어짐. 다만 LTE-5G 통합요금제 신설을 통한 통신요금 부담 완화 노력은 미흡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회의 개최 및 통신요금 정보포털 고도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성과지표 달성에 목표치를 모두 확보했으나 국민의 체감으로 연결되었는지 의문임. 악성앱 차단 업무 같은 경우 여전히 소비자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통합요금제의 신설을 통해 통신비 저감효과를 적절히 가져옴. 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출하는 사업자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음.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발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 점은 매우 긍정적.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품질 개선에 대한 이용자 체감을 높이기 위해 품질평가를 개편
 - (품질평가 강화) 5G·LTE 동시측정 방식을 도입, 측정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5G 품질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고, 5G 기지국에 대한 투자 유도
 - * [5G] '24년 400개 → '25년 600개, [LTE] '24년 315개 → '25년 600개
 - ※ 기존 측정방식은 5G와 LTE를 개별 측정하여 LTE 자원을 5G·LTE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의 실제 이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실내시설 평가 강화) 실내 음영시설 개선을 위한 평가 규모 확대* 및 사업자별 5G 옥내 기지국 구축 현황 정보 수집·공개 추진
 - * [실내시설 평가물량] '24년 160개 → '25년 300개(강남구청, 국립경주박물관 등)
 - (고속철도 품질개선) '24년 품질/접속미흡 발생 구간에 대한 장비 최적화, 투자 유도 및 재점검('25.8)을 통해 일부 품질을 개선(67%*) 하고,
 - * 총 미흡지역 52개 중 35개 지역 개선 완료
 - 통신사업자와 수차례 회의 및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품질문제를 전면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망 2.0*' 기술 적용 및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고 '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 품질 개선 추진합의('25.9)
 - * (공동망 1.0) A 사업자 망을 B, C사가 공동 이용 → (공동망 2.0) A사업자 망에 B, C사 장비도 추가 구축·연동하여 서비스 용량 확대 및 가입자 분산 수용
- 고속철도 구간의 5G 공동망 2.0 도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품질개선 가능성을 제고
 - (농어촌 공동이용) 복수의 사업자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공동망 2.0을 고속철도 구간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향후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품질개선 수단을 마련
- 국민 생활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시행
 - (정비사업 추진) 51개 자치단체 321개 정비구역에 대해 11월 현재 3,143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주와 통신주 153,673본 정비 추진
 - ※ 정비절차 개선 지자체 설명회(3.20) 해지회선 철거사업 확대(100만 → 200만 회선), 안압설비 공용화(서울 강북 등 10개 지자체) 및 공동주 활용(서울 강남 등 3개 지자체) 사업추진
 - (특별 점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경주 주요 전통시장 및 관광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10.22.~23.)하고, 방치된 해지회선 철거 등 정비 시행

-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비 완료지역 공중케이블 재난립 방지를 위해 정부·지자체·정비사업자·시설관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현장정비 실시(서울 중랑 5.29., 구미 6.12.~13., 부산 11.11.~12.)
 - 번호자원 관리를 통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
 - (듀얼번호) 듀얼번호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전화 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개정(10.30) 및 각 통신사 전산개발('26년부터 시행 예정)
 - (클린번호) 휴대전화 번호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소를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사용년수 5년 이상의 클린번호를 우선 배정하도록 각 통신사의 영업전산 개발 및 적용 완료(SKT 기시행, KT·LGU+ 7월 시행)
 -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불법스팸 방지) 전기통신사업법('25.9.19. 시행)에서 위임한 문자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사항 구체화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중(과기정통부-방미통위 공동)
- ※ 방미통위 사정(위원회 미구성)으로 개정 지연 중이나, 위원 구성이 완료되어 의결 즉시 법제심사 등 개정 절차 속행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5G 공동망 2.0 도입의 취지는 매우 효과적이나 실질적인 진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클린 번호 우선 배정 정책의 경우 여전히 사업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 정책에 머물고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동망 2.0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필요.
- 이동통신사업에서 번호 자원 부족의 문제점을 단순히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더욱 획기적인 정책 수립을 고민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품질개선에 대한 평가방식이 이용자 체감으로 충분히 연결되었는지 의문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의 달성률 미흡하며 주민조사 방식이 명확한 제시가 미흡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이 완료되지 못함. 3%의 품질 개선 목표 설정의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주민과의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이 적절히 이루어짐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지자체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적절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68.9% 완료 보통	국가적 행사 준비를 위한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실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지자체 협력 등을 이끌어 냈으나 달성률이 낮아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통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지자체 등과의 협력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노력은 하였으나 성과는 충분치 못해 보임.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 G3 강국 도약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가칭)AI 시대 전파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25.6월~)
- ※ ▲버티컬 AI(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차) 주파수 공급,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등) 센싱 기술 확보, ▲해상·공중·우주 등 초공간 AI 커버리지 확대 등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 발굴
- ※ 산업계 등 대국민 의견수렴 후, AI전략위 등 회의체를 통해 연내 발표 예정
- ‘24.12월 2차 예타 탈락 이후, 기재부.캠코.서울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B/C) 및 재무성(PI)을 대폭 제고***한 결과 예타(재신청) 및 최종통과(9.30)
- * ▲입주기관 다각화, ▲편익 추가발굴, ▲재무성 평가생략 등

1차 예타(‘20년)	2차 예타(‘23~24년)		3차 예타(‘25년)
	중간(‘23년)	최종(‘24년)	
예타 자진철회 (사업성 부족)	AHP: 미산정 (B/C: 0.49, PI: 0.54)	AHP : 0.432 (B/C 0.80, PI 0.73)	AHP : 520 (B/C: 0.96, PI: 1.00)

- 전기차, 로봇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시험·실증시설 구축***을 추진(대구, 경북대 부지)하고 수도권.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 ‘25.6월 무선전력전송 실증을 위한 실환경 테스트베드 착공식 개최(‘26. 상반기중 시험운영 예정)
- 중소기업 대상 **전문인력 컨설팅, 개발·측정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을 운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9개社)하여 **제품개발 비용 지원**

우 수 사 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개발 비용 지원

◇ 22년 창립된 헬스테크 스타트업 O사에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WiFi/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 체온계’를 제품화하여 ‘CES 2026 혁신상’ 수상



- 전파·방송 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지정하여 전시회, 세미나 및 대통령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 개최(11.10~16, 코엑스)



- 집중호우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25.7.1.~12.31.) **무선국 전파사용료 전액감면** 지원대책 시행

우 수 사 례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지역에 무선국 전파사용료 전액감면 지원대책 시행

※'25년 기준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무선국 시설자는 4,564명, 무선국은 34,858국이며 전체 감면 금액은 34,070만원

프라임경제 · 2025.07.24.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신요금과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보통신 분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난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작년대비 전파산업 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등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전파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파자원 배분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작년도 평가의견을 반영한 성과지표 제시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인프라, R&D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적절히 구성되었음. 다만, 사업기획 건수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제시된 추진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전파정책의 내실 있는 기획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전파정책 자문회의와 산학연 외부 전문가 회의와의 동시 개최로 인한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전체적인 정량적 목표 달성은 이루어졌으나, 당초 제시한 R&D 사업기획 건수가 다소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 인증제 도입(안) 마련은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은 차년도 실적으로 예상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송파 보안클러스터 예타 통과 및 AI시대 전파정책 중장기 로드맵의 구체적 결과물은 차년도 성과로 기대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른 구체적 성과는 미흡해 보임.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국내 도입을 위한 신속한 규제·제도 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
 - 위성통신용 단말의 개설 절차 간소화* 및 위성통신 서비스용 단말의 국내 이용 지원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5.26.)
 - * 이용자는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인증 받은 위성통신용 단말 개설·사용(허가의제 제도 도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추진
 - ※ 저궤도 통신위성(2기) 및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시스템(1식) 구축(~'30, 3,224억원)

우 수 사 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도입에 대응하여 관련된 제도 정비

- ◇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성망 국제등록부터 무선국 개설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제기 위성망들과의 조정을 지원
- 국내 위성망 보호 및 신규 위성망 확보를 통한 국가 우주영토 확보 강화

- 국내 방송 기술이 일본, 유럽 등을 제치고, 브라질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채택('25.8월)되는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남미 시장 선점 기회 창출
 - 이와 함께, 글로벌 수요 기업 등과 국내 중소기업 간 사업화 컨소시엄(1개)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우선 공급 계약체결 등 수출 역량 강화

우 수 사 례 국내 방송 기술이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의 새로운 방송표준에 채택

- ◇ 국내 방송 기술이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의 새로운 방송표준에 채택
- 정부 지원을 받은 R&D 사업의 기술 사업화 성공 및 그간 일본 중심의 남미 방송 장비 시장에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파 방송 산업 성장을 위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 측면에서 방송 주파수에 대한 구체적 재배치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정과제인 AI 관련 산업 개발 관련하여 방송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위성통신 대비 방송 전파자원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비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국내방송 산업 생태계 지원 관련 성과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짐.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이 잘 지켜졌다고 판단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다양한 산학연 교류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외부자문단과의 협력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방송 관련 부분은 제시한 성과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미비하였고 이에 따른 실적도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위성통신과 방송 기술의 해외 진출의 우수성이 존재하나, 국내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은 아쉬움이 존재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저궤도 위성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이한 정책소통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체계 구축

- (재할당 정책 수립) 3G·LTE 이용자 보호 및 AI 시대에 걸맞은 망으로의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할당 세부정책방향·방안* 수립(~12월)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체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추진하고, 이용기간·대가 등 설정

우수사례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통한 5G 품질향상 대책 마련

- ◇ 모두의 AI를 위한 세계 최고 성능 네트워크 구축 및 5G 품질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 5G SA 서비스 제공을 할당조건으로 부여
- ◇ 5G 실내 커버리지 개선을 위해 5G 실내무선국 1만국 또는 2만국 추가 설치 시 재할당 대가가 인하되도록 투자유선 설정



- (국제협력 체계 마련) 6G 후보주파수 연구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아·태지역 협력 강화*, 국내 산업계 동향 청취 및 정책 반영** 추진

* 일본(총무성)과 전파국장급 회의 개최('25.5월)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 (APG) 참가하여 한국 입장 반영('25.7월)

** 이동통신, 위성, 무선전력전송 등 산업계가 참여하는 자문협의체 개최('25.9월)

- (주파수 이용 촉진) 미이용 이동통신 주파수의 he 용도로의 주파수 확대 적용을 위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디지털 혁신 주파수 시범공급 추진계획 수립(~12월)

* (1차) 이음5G 사업자 36개 기관, (2차) 국가 기반시설 분야별 69개 기관

- (공동사용) 산업 및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TVWS 제도개선(~12월)

- (이용현황) 3G·LTE 이용기간 만료 예정대역, 6G 후보대역 등 주요 주파수 정책 추진 대역을 선정하여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3월)·평가(9월) 시행

○ 국민생활 편의·안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제도개선

- (Wi-Fi 규제완화) Wi-Fi를 스마트공장 내 설비제어·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6GHz 일부대역 실내출력 상향(0.5W→1W) 추진(~12월)

- (GPR) 싱크홀 탐지 등에 사용되는 GPR(지표투과레이다) 활용 촉진을 위해 적정 주파수 대역 및 기술기준(안) 마련(~12월)

- (용도미지정 주파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광대역 용도미지정 주파수 확대 방안 마련(60GHz 대역, 현재 57-66GHz(9GHz폭) → 확대 57-71GHz(14GHz폭))(~9월)

※ 유선 인입이 어려운 건물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백홀, 센서 등에 주로 활용**

- (도심항공교통(UAM)) **UAM 5G(800MHz대역) 실험용 주파수 공급 확대***(9월)

* '24년, 인천지역 → '25년, 김포, 한강일대로 설치장소 확대 (국토부 실증 수요 고려)

○ 공공용 주파수 수급 개선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성 제고**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을 통해 재난안전, 국방·안보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21개 기관, 약 9.6GHz폭)

※ (주요 공급분야) ▲재난·안전 : 조류탐지레이다, 해상·항공 감시레이다, 산불진화 헬기 무선통신 등 ▲국방·안보 : 무인무기체계, 안티드론체계, 정찰위성 등

- (산업통신용 주파수) 산업 밀집 지역 내 **전파 혼간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이용 주파수 발굴 등을 통한 **산업통신용 주파수 추가 공급**(5월, 400MHz 대역 39파)

우 수 사 례 조선소 작업 안전을 위한 산업통신용 주파수 공급('25.5.)

◇ 이동하는 골리앗 크레인(1600t급)을 이용하여 선박을 운반하는 조선소 작업환경 상, 작업 안전을 위해 짧은 지연시간과 끊임없는 안전한 통신환경 요구

- 조선소 작업 상황에 적합한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전기 사용에 대한 업계 방문 (한화오션,거제) 및 임시 허가 제도 등을 병행하여 신속 대응('25.1월) → 산업통신용 주파수로 추가 공급하여 작업 안전 확보 추진('25.5월)



○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이음5G 활성화 추진**

- (수요자 편의 향상) 수요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음5G 주파수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할당신청 절차 신설**(1월), **가이드라인 개정**(5월)·**배포**(7월)

- (확산 촉진) 관계부처(중기부·국토부·산업부) 협력, 이음5G 융합 서비스 사례전망 세미나 (4회), 사전컨설팅 운영(7건)으로 식품, 로봇 등 **다양한산업 분야에 이음5G 확산 촉진**(~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산업생활 주파수 생태계 조성은 국민 데이터 복지 및 산업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나, 평가지표로 규제완화 건수 보다는 제공되어지는 주파수 대역 및 활용분야의 정량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 주파수 발굴 및 공급 그리고 신규 산업에 제공하는 주파수 할당 등이 주요 과제이기에 성과지표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발굴/ 공급/ 신규산업 건 수를 포함하도록 수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AI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은 다소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에서 새로이 발굴된 주파수 및 이에 대한 활용도를 나타내는 척도 부족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계획에서 제시된 산업생활 주파수, 신규 주파수 공급 및 공공용 주파수 이용 분야등 모든 분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조사 분석 자문회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성과지표의 내용이 주파수 발굴 및 이에 따른 산업의 영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움.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의 일부가 나타나 있음. 이와 같은 결과를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수식의 변경 요청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비면허 주파수 활용 과제 창출을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이음5G 관련 세미나 개최는 정책 소통이나 이를 탁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 (규제 개선)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자재 단순 진열·보관 시 처분을 형사처벌(징역, 벌금)에서 행정제재(과태료)로 완화(전파법시행령 개정, 4.1)
- (소비자 보호)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차단 조치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국민 안전 관리 강화 추진
 - ※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공정위, 국표원, 환경부, 관세청 등) 참여(2회), 관세청 통관 협의(10월), 펌토셀 등 불법장비 차단(9~10월), 국내외 온라인몰 협의(10월), 불법 직구제품 차단(11월) 등
- (MRA 확대) 인니와 MRA 1단계 시행(5.27), EU와 MRA 2단계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 무역 확대 기반조성
 - ※ 인니 최초로 MRA에 의한 외국(한국) 시험기관(4개) 지정(국내기업 인증비 절감: 720만원 → 480만원)

우 수 사 례 한-인니 MRA 1단계 시행

- ◇ (수출 지원) 한-인니 MRA 1단계*를 시행(5.27)하여,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적합성 평가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
 - * 국내 시험기관에서 인니 기술기준을 준수한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24)인 인도네시아는 국내 ICT 기업의 주요 수출국(\$10억, '24)으로 한-인니 MRA를 통해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중앙·지방정부 데이터 연계를 통한 해상 안전·편의 강화

- (재난대응) 국가재난시, 마을방송 접속 허용대상을 확대(기존 226개 시군구 → 개선 17개 도 추가)하여 재난(3월 의성·안동 등 산불) 시 사용
- (안전강화) 과기정통부-해경 시스템 연계로 불법운항* 선박을 신속히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7월), 해상 인명안전 강화(적극행정 우수상)
 - * 선박에 설치되는 무선국은 해상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하나, 불합격 또는 검사거부 등 사유로 운항이 금지된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 불법운항 선박으로 규제

우 수 사 례 본격 단속 전 계도를 통한 홍보 및 성과 조기창출

- ◇ (해상안전강화 추진현황)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 우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해경·수협 합동 홍보 및 계도 실시 (9월~현재) → 향후 장기간 불법 운항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예정
- ☞ (불법운항 선박 감소) 계도 전 매월 약 25건 → 계도 후 10월 4건(84%감소), 11월 2건(92%감소) 으로 감소
- (불편개선) 개별 기관마다 신청해야 하는 선박 및 무선국 행정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행정정보연계와 제도개선*으로 어민불편 해소
 - * (과기정통부) 선박무선국 허가업무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1월)

- 생활환경 전자파 대국민 소통 강화 및 안전 관리 확대 추진
 - (생활안전) 전자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한 다양한 생활제품·환경의 전자파 측정·공개 및 측정기 대여 서비스 지속 추진(1월~)
 - ※ 유아·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 ('25) 목표 9,000회
 - ※ (소형 측정기 대여실적) ('22) 950회 → ('23) 2,000회 → ('24) 3,000회 / ('25 목표) 3,400회 / 시행 3,526회

대 표 성 과 전자파 안전 홍보

- ◇ (안전홍보) 데이터센터와 쇼핑몰, 병원 등 고압전선 설치 시설의 전자파 비교측정* (9월),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6월~), 전자파 관련 방송홍보(11월, EBS “취미는 과학”)
 - * (측정결과) 측정치는 모두 유사하며, 국제기구 인체보호기준(60Hz, 833mG) 1% 수준
 - ※ (전자파 안전 공모전) '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동영상 포스터 공모전(6월~10월)에서 9개 작품 수상(87개 작품 접수, 수상 작품은 전자파 안전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
- ◇ (전자파 신호등) 데이터센터 인근에 전자파 측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추진
 - * 기설치 IDC 4곳, 설치 공사 중인 IDC 1곳 등 총 5곳 설치·운영('25년~), 신호등 설치 지역 인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전자파 안전 체감 지수: 42.1점 → 93.8점)



○ 전파차단장치 제도개선

- (전파차단장치 제도개선) 대테러 역량강화, 방산 수출 확대, 안전 강화를 위해 전파법령(법 2.20., 령 6.11.) 개정* 추진 및 국회 협의(2월~11월)
 - * 전파차단장치 훈련시험 근거의 법제화, 수출용 장치 인가 면제, 도입·폐기 신고 의무기관 확대
- (전파차단장치 이용개선) 국내기준상 시험이 불가능했던 수출용 장치의 시험, 도입기관(원전, 공항) 내 시험 등 허용(수출장치 2.26., 도입기관 5.1.~)
 - ※ 우리부와 새만금청·방사청·전북도가 협력하여 사거리 10km 전파차단장치 시험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일대 시험장 지정·운영 MOU 체결(12.17)

대 표 성 과 국가 안전 관리 강화

- ◇ 과기정통부-경호기관 협의 하, APEC 정상회의 기간(10.31~11.1.) 중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공항에서 사전실증을 진행하였으며, 정상회의 기간중 외국정상 경호를 성공적으로 수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친환경 이동통신 무선국 관리 방안에 대한 시행 실적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 이동통신 무선국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성과 목표의 논리적 연계성이 적합하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제도 개선 건수 이외에 해당 개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계획 추진 일정이 충실히 수행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다양한 현장의견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나, 통신 장비 유통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24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소통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제시된 성과지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 개선의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나, 그 영향은 다소간에 제한적임.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우수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우수'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 가점 분야에 모두 실적이 인정되나, 그 영향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임.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새정부 국정과제 총괄 수립)** R&D 투자가 국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등 추진 기반 마련
 -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혁신, 연구에 전념하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정책 비전 설정
 -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국정과제 26번)
- **(현장소통 강화)**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 제고
 - 대국민 직접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혁신본부 현장소통 'R&D 미소공감' 추진, 젊은 과학자와 정기 포럼 개최 등
- **(기본계획 이행)**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참여 30여개 부처 이행점검 등 총괄조정
 -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4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5년도 시행계획 수립(3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5년도 시행계획 수립(4월)
- **(데이터 기반 마련)**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 산업현장의 직무별 인력수요와 R&D 인력의 고용흐름 파악 등 인재 데이터 확보
 - (글로벌 인력지도) 글로벌 핵심인재 분포를 파악하고 국제협력 현황, 연구 트렌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양자분야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10월)
 - (직무분석)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산업현장의 직무별 인재 상세 요구사항 분석*(10월)
 - * 기업 채용자격역량요건(수요)과 정부 인력양성 사업(공급)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시사점 도출
 - (IRIS-고용보험DB 연계) 연구자정보(IRIS)와 고용정보(고용보험DB) 간 연계·분석*으로 국가 R&D사업 참여인력의 양성부터 고용까지의 흐름 파악
 - * 가명화 결합된 약 51만명의 연구자 정보를 기반으로 '13~'23년 간 연구자 취업경로, 보수수준, 직종현황 등을 시범분석

- **(성과확산 지원)**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 개최 및 추진방향* 발표(4월)

*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 등

우 수 사 례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 ◇ (주요 내용) 「이공계지원법」 상 이공계 인력 유입·유출 현황 조사 시, 기존에는 전세계 국외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 현황을 추정*을 통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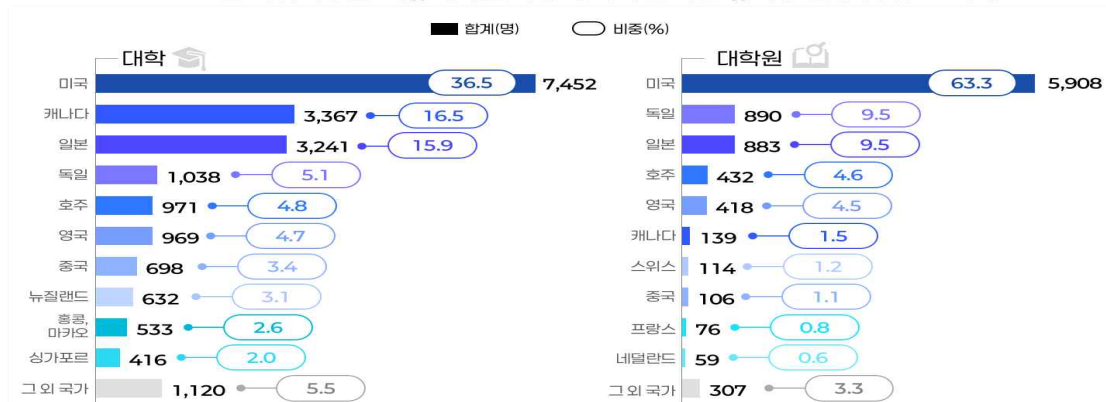
* (추정산식) 전 계열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교육부) ×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중 이공계 비중(미국립과학재단)

→ '24년도 조사부터 교육부 및 재외공관 협조를 통해 각국 한국인 유학생의 계열 정보를 직접 수집·발표

- ◇ (주요 성과) 기존에는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중 이공계 비중을 전 세계 한국인 유학생에 적용하여,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의 국가별 현황 파악도 불가

- 협업을 통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이공계 유학생 체류 현황 정보의 신뢰도·활용도 제고

'24년 학위과정별·체류국가별 이공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상위 10개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성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과학기술정책 총괄 부서로서 정책고객 유형을 보다 세분하여 유형별 만족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성과 만족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R&D 중심에서 전주기 혁신정책으로 확장

👉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R&D 외에 창업·금융·산업 등 기술기반 혁신정책 추진으로 K-혁신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총괄 조정기능 내실화에 부합되도록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과제에 충실히 반영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성과지표 선정은 적절하나,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과도, 정책총괄 기능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발굴 및 보완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일정 집행 및 관리가 우수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R&D 미소공감” 운영(19회), 미디어 데이, 젊은 과학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 정도가 우수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외부자문단과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성과 자료를 제공 하고, 설명회 및 정책자문회의 등으로 정책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데이터 기반 인재양성 정책 이행,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등에 관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음. - 정책만족도가 전년대비 다소 개선(미흡→다소미흡)으나, 정책고객 유형별 만족도를 진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단계에서 정책 총괄기능을 적극 수행, R&D 투자시스템 혁신,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혁신기반 마련에 기여한 정도가 큼.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해당 사항 없음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 전문성·자율성·지속가능성 3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R&D혁신방안 마련

* 전문성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기획·투자·평가 체계 구축, 자율성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성유연하고 예측가능한 재정지원 등

- 권역별(5극)·주제별(평가, 제도, 장비 등)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9회) 및 온라인 플랫폼(모두의 R&D 개통, 7.16)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그 외, 과제 도출 및 대안 발굴을 위한 분과별 현장 소통(23회 이상 실시)

우 수 사 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 ◇ 관계부처협의(10.16.) 및 현장 공청회(10.27.), 대통령 주재 대국민 보고회(11.7.) / 국립중앙과학관
- ◇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11.24)



○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기획·집행하는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체계 도입

※ '26년 시범사업 형태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지특회계 R&D예산 1,600억원 반영

- 중앙정부 주도 R&D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 기반 기획·집행·성과 확산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부처별·사업별 산발적인 지원을 연계, 지역산학연 협력 촉진 등

- 지자체,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심의·조정,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예산 연계 등 수행

※ (개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위한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및 중앙지방 공동 거버넌스 체계 확립

우 수
사 례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기반 마련

-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현장에서 답을 모색하다
 - 지역의 연구 현장에서 현장의 모습과 의견을 직접 보고 들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 마련



- 민간 기업의 R&D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기업 R&D 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논의 기회 확대*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참여 제고
 - * 기업 대상 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혁신본부장 주재 산업계 현장 간담회 등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성 강화
 - 7개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의 기술간 정합성 검토 및 로드맵을 보완하여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연계성·전략성 강화
 - * ①풍력, ②전력저장, ③전력망, ④에너지통합시스템, ⑤산업일반, ⑥환경, ⑦원자력 분야
- 글로벌 R&D를 통한 국익 극대화 및 중요기술 확보 추진
 -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및 후속업무 추진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성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다소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 관리과제의 특성(현장 대응형 혁신정책 추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유형별 고객을 분류, 맞춤형 정책 홍보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R&D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와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개편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총괄조정 외에 협력 기능을 대폭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과기부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관리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현장 기반 혁신정책 수립 목표에 부합되도록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 현장 유형(지역, 민간, 글로벌)별 모니터링 및 대응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일정 집행 및 관리가 우수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정책 추진단계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정책 반영 노력 정도가 우수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외부자문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성과관리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를 100% 달성함 - 전문성·자율성·지속가능성 등 3가지 원칙에 기반한 혁신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목표의 적극성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해당 사항 없음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혁신도전형 R&D 앞으로(APRO) 사업군 체계 개선

- **(제도개선)**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및 분류 고시」 제정 및 혁신법 내 전용 매뉴얼 신설
- **(사업군 관리 고도화)** '25년도 사업군을 신규 지정(7개)*하고, 차별화된 운영 방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 사업의 이행 현황 점검 추진**

*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 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등 7개 사업(32개→39개 사업)

** ^(1차)'24년 2차 조건부 지정 8개 사업의 조건 이행여부 점검, ^(2차)지정사업 전체 대상 연구 목표·추진체계의 변경 여부, 과제의 혁신 도전성 등 검토 및 컨설팅

- **(협력기반 구축)** 혁신도전형(APRO) R&D 사업의 핵심 주체인 IPL의 역량 강화를 위해 美 DARPA 경험 글로벌 PM 대상 세미나 실시(11.3.)

우 수 사 례 혁신도전형 R&D 제도개선

-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을 통한 도입기간 단축(120일→50일), 자체평가 면제 등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유형과 지정 절차, 특례 등을 명시한 행정고시 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內 혁신도전형 R&D 특례사항 안내 매뉴얼 마련
 - R&D과제 평가등급 폐지, R&D사업의 공모기간 단축, 우수성과 과제 공모절차 없이 후속연구 추진 가능 등 연구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마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 **(심의체계 고도화)** 국과심 안건 대상 정책의 지속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제도 운영 및 결과 환류 강화 등 심의체계를 효율화

※ 주요R&D사업 예산요구서 상 국과심 코드번호표 생성 및 위원 의견 환류를 위한 과제카드 작성

- **(상정기준 마련)** 과학기술정책과의 정합성·연계성 확보 및 심의대상 확대를 위해 안건 상정 기준을 마련하고, 상정 대상 중장기계획 재분류 추진

※ 과기자문회의 운영위(2.21.)에 상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

우 수 사 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 민간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운영 관련 의견 수렴

- 국가과학기술 최상위 기구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실질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 추진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확산

- **(범부처 사업 기획)** 국민 수요가 높은 핵심 사회문제에 대한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 R&D 역량을 결집하는 임무지향형 플래그십 사업 기획
- **(성과확산 지원)**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의 사업화·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요 기반 맞춤형 현장컨설팅 추진

* 예시) 인증(NET, NEP),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마케팅 등), 조달·해외시장 진출 등

- **(민·관 협업 기반 마련)** 사회문제 해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및 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
- 공공 민간의 사회문제해결 추진 현황 공유, 사회문제해결 민관 협력 수요 논의 및 향후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제1회 사회문제해결 민·관 협력 포럼」 개최

우 수 사 례

사회문제해결 R&D 현장컨설팅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의 현장적용·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상 성과별 사전 수요조사 및 수요기반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 개발 기술의 현장 실증·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성과 활용·확산 관련 애로해소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정 조치 부족
 - ☞ 혁신도전형 R&D의 안착과 기대 성과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제도 개선 추진 및 현장 수용성 강화 미흡
- 사회문제해결 R&D 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다 혁신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개선 추진 미흡
 - ☞ 현장방문, 현장컨설팅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제도적 개선과 지원 성과로 이어져야 할 필요

- 위원회 개최 횟수, 현장방문·컨설팅 횟수 등의 단순 정량지표 수립과 달성 노력보다는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 노력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통을 넘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의 정책·제도가 연구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사회문제해결 R&D가 현장 소통에서 나아가 실제 국가·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제도 차원의 제안과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은 인정되나, 도전적인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일부 아쉬움.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정책검토 횟수, 현장컨설팅 건수 등 단순 정량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와 노력에 대한 지표 설정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계획 대비 추진일정 충실성 인정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위원회 개최, 현장방문·컨설팅 등 행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높으나, 정책개선 노력은 다소 미흡해 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추진 중인 정책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 노력의 충실성 인정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계획한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과 목표의 적극성과 도전성에 대한 수준은 다소 낮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안정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였으며, 정책소통 노력 인정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범부처간 협업이 요구되고 사회적가치 중심의 업무가 부여되고 추진된 바 이를 인정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신속한 전략기술 확보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전략기술 육성 강화

- 산·학·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분야별 조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요정책 심의·조정 및 로드맵 실행(연중)
-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최고위급 협력 체계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출범(4.9, 23개 기관) 및 ‘국가전략기술 서밋’ 개최(12.18)
- 한·미 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美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공동포럼 개최(5.22, KAIST)
- 정부·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통해, 관계부처·민간 수요 포함 후보군 구축 부터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단계 전반에 의견수렴 강화(5~9월)
 - ※ 특위(25.5), 관계부처 수요조사 및 연구자(2,280명) 설문조사(6~9월), 산학연 오픈포럼 및 간담회(8~9월)
- 국가가 R&D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임무를 도출하여 범부처·민간 협업 초대형 R&D ‘NEXT 프로젝트’ 추진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기업 매칭 비율 최대 50% 완화

우 수 사 례 「국가전략기술 서밋」 성공 개최

◇ 세계 최초·최고기술 선점 및 산업주도권 확보를 통한 국가 대도약을 위해 **NEXT* 전략기술 체계**로 나아가는 「국가전략기술 서밋」 개최(12.18.)

* New, Emerging, exponential Tech : 차세대·신흥기술 중 가하급수적 성장으로 신산업을 이끄는 분야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속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민·관 협업 의지 표명
- 국회의원, 국가전략기술 주요 산·학·연 대표, 전문가 등 1,000여 명 참석



② (성과관리)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제1차 국가전략기술육성기본계획」에 대한 22개 부처청 대상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국가전략기술특위 의결 3.12.)

- ①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여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하며, ②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③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
- '26년 정부안 기준 전략기술 정부 R&D 30% 증액('25. 6.5조원 → '26. 8.6조원) 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투자정책 이행 추진 중

③ (우수 산학연 발굴지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연구개발 중인 우수한 산학연을 발굴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운영(분기별)하고, 인센티브 확대

- 전략기술 '보유·관리' 기업 대상 기술특례상장 신청요건 완화에 더해, 정책금융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R&D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지원 확대

※ '24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주)알지노믹스의 RNA 편집 기술은 '25년 美 일라이릴리社와 1조 9천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특례상장 통해 코스닥 상장('25.12.18)

우 수 사 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 ◇ 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고 시 안내하는 기술개요서 상세화 및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8.5.)

*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개요, ▲확인제도 관련 일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과기정통부 유튜브 등에 설명회 영상 게시



④ (법·제도 개선) 외국 정부 등이 기술육성주체(산·학·연)에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 제공 요청 시 통보절차 보완 및 사전협의 제도 신설

- 시행령에 통보·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방법·절차를 위임하고 있어, ▲통보 관련 서식·기한·절차 보완 및 ▲사전협의 관련 조문 신설
- 기술육성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보 및 사전협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9.29) 및 가이드라인 배부 추진(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NEXT 전략기술의 국가 기술혁신과 미래성장 연계성 강화 필요
 - 현재 글로벌 과학기술이슈를 개괄적으로 포함하는 것 보다, 국가미래 성장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제조기술, 에너지 기술 등으로 구체화 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획이 필요
 - 전략기술 별로 선정 기준, 기술개발 단계와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술별 우선순위와 시급성, 중요도, 신산업창출 가능성을 평가하여 각 전략기술별 예산의 배분과 경중과 완급을 반영 하는 것이 요망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 및 분야별 유사 중복성을 점검하고 전략의 효율성 강화 필요
 - 전략기술 개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TRL 등 개발 단계에 따라 부처융합형 과제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첨단기술개발 단계와 사업화, 산업화 단계 등을 평가하여 주관부처 선정이 바람직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점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4	소통참여 확대계획은 설명회, 간담회, 행사로 판단되어 하위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13	전략수립 정책수립 및 소통참여 확대와 같은 단순지표보다 지표의 구체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표 발굴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5	지표 추진 일정이 치우치지 않게 배분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5	설명회 및 공동포럼 추진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4	연중 전문가 조정위원회 등으로 충실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22	정책수립 건수, 회의 개최 증빙과 안건으로 이루어진 지표는 달성됨 * 조직의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굴이 필요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20	자원의 선택과 집종의 전략은 수립되었으나 산업 생태계의 연관성, 사업화 성과 창출효과를 산정할 단계는 아님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다소미흡	7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다소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1	- 국가 전략기술 분야 민간 (산학연) 소통을 위한 지원 노력과 활동이 인정됨.
	사회적 가치	불인정	0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0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5	
총 점			8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6년 정부R&D 예산 35.5조원(+19.9%),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회 예산설명회(5월·7월)를 통한 사업별 심층 검토 추진
 -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역대 최대규모 '26년 정부 R&D 예산 심의·의결(8.22),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12.2, 35.5조원)

< 주요R&D 예산 중점 투자 분야 >

	'25년	'26년	주요내용
① 경제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① AI	1.1조원	2.4조원 (+116.6%)	▶ 독자적 AI 역량 강화, AI 기본사회 가속화
② 에너지	2.2조원	2.7조원 (+20.3%)	▶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③ 전략기술	6.5조원	8.6조원 (+32.1%)	▶ 파급력 있는 원천기술 선점, 핵심기술 내재화
④ 국방	3.1조원	3.9조원 (+25.4%)	▶ K-방산 업그레이드, 미래전장 선제 대응
⑤ 중소벤처	2.4조원	3.4조원 (+39.5%)	▶ 역량 있는 중소벤처 지원, 혁신조달·구매연계
②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⑥ 기초연구	2.9조원	3.4조원 (+14.6%)	▶ 전체과제수·기본연구 복원, 연구몰입환경 조성* * 최소 연구기간 연장, 연구내용 전환·변경 허용
⑦ 인력양성	1.0조원	1.3조원 (+35.4%)	▶ 최고급 이공계 인재 육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⑧ 출연기관	3.4조원	4.0조원 (+17.6%)	▶ PBS 단계적 폐지, 임무중심 대형연구 지원
⑨ 지역성장	0.7조원	1.2조원 (+66.2%)	▶ 지역자율형R&D, 지역특화 대규모 AX 실증
⑩ 재난안전	2.1조원	2.4조원 (+13.9%)	▶ 첨단기술 활용 현장적용형 안전기술 확보

우 수 사 례 '26년 정부R&D 예산 35.5조원(+19.9%),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

- ◇ 기술주도성장의 핵심주축, R&D에 확실하게 투자
 - 과학기술계와 함께 진짜성장 실현
 - 과감한 R&D투자로 생산성 대도약, 미래 전략산업 육성·업그레이드
- ◇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확립
 - 위축되고 피폐해진 연구현장을 완전히 회복
 - 예측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부R&D 투자 규모]



-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R&D 예산 심의, 연구자·일반국민과 적극 소통
 - R&D 예산 규모 및 세부사업 개수 증가에 따라 기술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확대**(7개 분야 133명→10개 분야 166명)하여 **심의 내실화** 기반 마련
 - * 「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국가 R&D 사업에 대한 투자전략,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기술적 자문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8.22) 이후 '26년 정부R&D 예산안에 대해 분야·지역 산·학·연 연구자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일반 국민께 홍보** 추진**
 - * (분야별 간담회) 기초(9.12), 지역AX(9.17), 산업(9.18), 에너지(9.24)
 - ** 본부장 정책브리핑(8.22), 장관 기고(8.27, 매일경제), 본부장 라디오 인터뷰(9.3, YTN) 등

우 수 사 례

2026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 등 정책 대상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4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영남권(9.22), 244명 참석]



[호남권(9.24), 182명 참석]



[수도권(9.26), 269명 참석]



[충청권(9.30), 438명 참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한 노력·성과와 자문회의 전문위 확대, 국가 기술전략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가 인정됨.
- R&D 예타 폐지에 따른 주요 R&D 예산의 급격한 증대 및 대규모 연구형 사업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과 제도적 보완 노력 제시가 다소 미흡
 - ☞ 사업점검 및 기획이 충실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고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 제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R&D 예산 증가와 대형 R&D 사업 확대 시 사업기획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대형 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배분 조정 시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의 충실성이 인정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었으며, 다만 단순 소통강화 건수를 핵심 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기반하여 추진일정이 준수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노력과 정책반영 노력과 성과가 인정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부 R&D투자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노력이 인정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이 완료되었으나, 단순 횡수 기반의 목표설정은 지양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달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계획과 목표 달성으로부터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R&D 예산증가와 대형사업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실 영향도 검토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부처와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 노력이 인정되며,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합리화와 정책소통 노력이 인정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효율적인 투자 및 제도개선)** R&D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R&D 투자의 효율성 증대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목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25.3.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 및 이행
 -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
 - 연구장비 심의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부담 대폭 완화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안)('25.11.24., 과기장관회의 의결)
 -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대상사업을 대형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개* 관리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
 - * ①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②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③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④차세대 핵융합연구선 건조, ⑤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⑥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 ⑦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 다부처협업사업의 예산요구의 적정성, 협업체계 구축현황, 성과활용 방안 등 종합적으로 통합심의하여 효율적 관리 추진

우 수 사 례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기준 상향 개편(안)

- ◇ 연구자율을 높이고 필요한 연구장비를 신속·적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도입 시 심의기준 상향 개편(1억원→3억원,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연구자의 도전·몰입이 국가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안)」 일환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를 더 쉽고 빠르게 확보·활용

< 심의기준 상향(안) 전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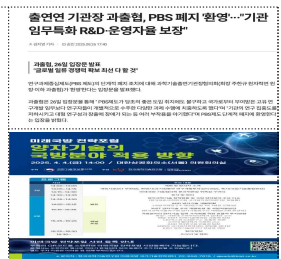
구분/비율	기존	개편
3억원 미만	「차질」 심의 미적용	최종
3억원~10억원	「차질」 심의 미적용 / 「차질」 심의 미적용	최종
10억원~100억원	「차질」 심의 미적용 / 「차질」 심의 미적용	최종
100억원 이상	「차질」 심의 미적용 / 「차질」 심의 미적용	최종

- (출연연·국방 분야 R&D 전략적 투자 강화) 출연연 예산 전략성 강화 및 국방분야 예산 효율화
 - 국정과제(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30년까지 출연연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여 연구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투자 강화
 - 첨단기술 활용 국방력 강화와 무기체계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 R&D 예산의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및 민·군 협력을 통한 효율적 투자 강화

우 수 사 례

전략적 투자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 ◇ 출연연 재정구조 임무중심 혁신을 위한 소통 및 노력(공청회 및 토론회 등 참석)
 - 출연연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PBS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연구현장의 긍정적 반응 도출
- ◇ 미래 국방 전략포럼/기술교류회 개최
 -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 논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인 사업관리(PM) 지원제도를 통해 첨단화·고도화 되는 산업 동향에 발맞춰 연구기반구축R&D사업의 단계적 효율적 검토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축관리 필요
 -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바,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관리가 필수적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출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국방분야의 디지털, AI 신기술 도입을 보다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지능형 영상분석 및 데이터 기반 국방 무기체계 고도화와 같은 선택과 집중형 R&D 사업발굴이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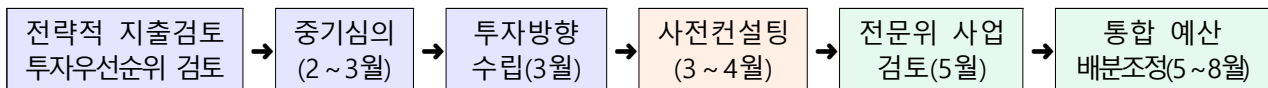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점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4	연도내 분기별 세부계획 수립으로 실행력 강화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14	국방의 현장수요 발굴은 주요지표로서 적합하나, 분야별, 사업별 세부항목, 지표 추가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5	목표가 뚜렷한 국방분야의 전략의 로드맵 중심의 관리체제로 단계별 진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4	PBS 폐지에 따른 소통(15회) 노력이 인정됨 * 국방분야의 수요조사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4	컨설팅, 전문위원회, 평가단 운영으로 충실한 소통을 위한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22	제도개선 건수, 간담회 실적지표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추가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24	단순 기술개발에서 완성도 높은 사업화, 제품화 성공에 집중된 지원과 관리가 요망 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6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1	PBS 폐지 및 인센티브 강화형 R&D 제도혁신
	사회적 가치	불인정	0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0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총 점			8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공·에너지 분야 R&D 예산 배분·조정 】



○ 전문위 의견수렴을 통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1~3월)

- 분야별 주요 정책현황과 부처별 R&D 추진방향에 대한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전문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R&D투자 주안점 심층 검토(~2월)
- ※ 부처별 R&D 투자우선순위제출(11월) → 전문위(공공에너지) 검토(12월) → 중점 투자방향 도출 및
'26년 투자방향 초안 마련(1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2월) → 공공에너지분야 투자방향 수립(3월)
-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 경제·기술·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해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투자방향 수립(3월)

【 공공·에너지 분야 투자방향('25.3월, 자문회의) 】

- ◇ (에너지·자원)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지능형 전력망, CCUS, 탄소중립 기반조성 등에 투자 강화
- ◇ (환경·기상)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수재해 대응, 기상 관측·예보 역량 고도화 등에 투자 지속
- ◇ (우주·항공·해양)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미래항공 모빌리티 실현, 해양과학영토 확대 등에 투자 확대
- ◇ (건설·교통)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재료 개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안전 인프라 투자 지속

○ '26년도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사전컨설팅 실시(3~4월)

-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근거한 전략적 예산배분·
조정을 위해 신규기획 사업 대상 사전 컨설팅 추진(3~4월)

※ 13개 부·처·청 공공·에너지 분야 128개 신규기획 사업 대상 사전컨설팅 실시

○ '26년도 공공·에너지 분야 예산 배분·조정(5~8월)

- '26년도 공공·에너지 분야 소관 19개 부·처·청의 442개 사업, 4조 5,397억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5~8월)

※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 사업설명 및 심층토론 실시(5월·7월)

【 공공·에너지 분야 예산 배분·조정 결과(정부안) 】

-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시스템 국산화, 상용급 실증 확대 전환 → '26년안 2.6조원(19.1%↑)
- ◇ 공공·에너지 소관 국가전략기술 4대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26년 2.2조원(13.8%↑)
- ◇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정부 R&D 역할 확대 → '26년 3.2조원(14.5%↑)

【 공공·에너지 분야 투자 전략성 강화 및 현장의견 청취 】

- 공공·에너지 분야 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한 투자분석 보고서 마련('25.2월)
 - '26년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조정 및 전략 선제시 등 능동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우주 등 주요 기술분야별 투자분석 및 전략 마련
- ※ 7개 분야^{①탄소중립 ②우주 ③재난안전 ④원자력 ⑤환경 ⑥건설교통 ⑦기상}에 대한 투자 전략 마련
- 공공·에너지 분야 현장 소통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추진(상시)
 - 공공·에너지 분야 정부R&D 관련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자, 민간,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연구현장 소통 적극 추진
- ※ 공공·에너지 분야 연구현장 소통, 민간R&D 협의체 실무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소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인 '공공에너지 분야 투자 전략성 강화'의 내용이 여전히 모호
 - 현재 지표는 투자방향 수립 여부, 사전컨설팅, 전략적 예산 배분 조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으로 산식이 구성되어 있어 정책수립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성과측정 미흡
- ☞ 향후 성과지표를 성과달성 측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로 투자 강화, 투자 지속, 투자 확대, 투자 지속 등만 강조되어 있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의 달성이 불분명
 - 실질적인 투자 조정 내용과 근거 등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획의 단순 수립이나 예산 확대 등의 성과에 더하여 실질적인 '예산 조정'의 내용이나 근거 등의 제시가 필요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산 조정에 따른 효율성 측정 계획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과기부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1이 투입위주로 구성되어 성과를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우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피드백의 구체적인 성과가 분명하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평가위원 자료 제공 등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구체적 활용에 대한 설명이 아쉬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1의 4개년도 성과목표치가 100%로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함. 또한 산식도 자의적인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정책영향 보고가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해당없음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 기계소재, AI·ICT, 양자반도체 관련 분야의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투자 확대 및 정부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 투자방향 및 기준, 신규사업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부진 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재원을 시급성이 높은 전략기술 분야에 재투자
 - 주요 대형사업의 문제 진단을 위한 사전점검을 추진하고, 분야별 핵심사업에 대해 보완사항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
- (연구현장 협의·소통 강화)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 배분·조정 of 전략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 다수 수행
 - 전문가 및 사업부처, 기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등 대상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장 중심의 투자전략 및 예산 배분조정 도모
 - 연구현장 방문, 투자방향 공청회, 기획건설팅, 전문가 간담회 등 다방면의 현장소통 기반으로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에 기여

우 수 사 례 연구현장 협의·소통 강화

- ◇ (서울 흥릉강소특구)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및 연구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현황 파악, '26년 정부R&D 관련 제언 청취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투자 확대(사업화·중소벤처 2.4조원 → 3.4조원 등) 및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육성지원 신설 등 '26년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 ◇ (현대 의왕연구소)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방문을 통한 첨단로봇·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의 민간 주도 연구 현황 파악 및 '26년 정부R&D 관련 제언 청취
 - 로봇 분야 투자 확대(3,765→4,868억원) 등 정부주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등 '26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 ◇ (서울AI허브) 2026년도 국가R&D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AI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력확보, 컴퓨팅 자원 지원 등 정부 지원 방안 등 논의
 - 최고급 인재 양성 및 AX 확산 지원을 위한 신규 인력양성사업 반영 등 인공지능 분야 인력양성사업 투자를 확대(882억 → 2,379억원)하는 등 '26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 **(민간 투자 확대)**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에 따라 딥테크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정부 투자의 마중물 역할 강화
 - 민간 R&D 협의체의 제안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연계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달성
- **(AI R&D 예산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AI R&D 관련 적극적 업무추진을 통해 대폭 증가한 AI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
 - (다부처협업 AX 사업모델)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AI R&D 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권고하고 협업사업 대상 심화 컨설팅 수행
 - (AX R&D 신규사업 사전점검) AX 관련 R&D 신규사업에 대해 배분·조정 전 점검을 진행하여 기획 충실성을 점검하고 사업 기획 고도화 유도

우 수 사 례

AI R&D 예산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 (다부처협업 AX 사업모델) 20개 부처 과장급 공무원 대상 관계부처 간담회 8회 개최
 - 총사업비 1조 112억원 규모의 협업수요 발굴(10개 부처 26개 사업)
- ◇ (AX R&D 신규사업 사전점검) '26년도 AX R&D 신규사업 대상 정부지원 필요성 및 사업기획 완성도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R&D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
 - ※ AI모델 개발 수준, 향후 연구성과물 활용도, 민간 유사·중복성, 데이터·컴퓨팅 자원 활용·운영 방안 구체성 등
 - 사전점검 대상인 AX 분야 139개 사업 중 61개 사업의 예산만이 반영되어, 부실한 AX R&D 사업 다수의 조정을 진행하여 R&D 예산 효율성을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1> 해당 분야 투자 전략성 강화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
 - 현재 지표는 투자방향 수립 여부, 사전컨설팅, 전략적 예산 배분 조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으로 산식이 구성되어 있어 정책수립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성과측정 미흡
 - 설명자료는 정책 추진 단계별 추진내용을 잘 담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달성이 불분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불필요한 사업 등의 통폐합이나 비효율적 사업의 정리 등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제시 필요
- 현장 소통의 결과가 어떤 내용들이 사업으로 환류되었는지 근거 제시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과기부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1이 투입위주로 구성되어 성과측정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우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반영이 분명하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평가위원 자료 제공 등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평가위원의 자료 구체적 활용에 대한 설명이 아쉬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1의 2개년도 성과목표치가 100%로 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영향 보고가 사업개편과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략성과 연관된 자료 제시가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다양성·자율성·안정성에 기반한 연구 생태계 복원
 - 축소된 개인기초 과제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자율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 지원체제로 개편
- 첨단바이오투자를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AI 융합, 혁신·도전 연구 등을 통해 유전자·세포 치료, 합성 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
- 농수산업 생산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로 식량안보 확보
 - AX(AI 전환), RX(로봇 전환)를 통한 농수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바이오 제조 고도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기술 혁신 추진

□ 우수 협업 사례

- (개요) 부처 간, 민·관 간 협력이 특히 중요한 바이오 R&D 핵심 협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전략적 협업 투자 강화
- (예산반영) AI 신약개발, 합성생물학, 차세대 육종 분야 등 핵심 협업 분야를 발굴,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부처의 신규 사업 기획·연계 촉진
 - 신약개발 전주기 AI 활용 관련 5개 신규 사업(추경 포함) 등 예산 적극 반영

〈(사례) 신약개발 전주기 AI 활용〉

연구단계	Discovery	Development		Manufacturing ...
	타겟~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인·허가	생산·제조 ...
AI활용 (예)	단백질 구조 예측, 가상 스크리닝 등	ADME/T*, PK** 예측·분석 등 세포 시뮬레이션 임상시험 설계		공정 최적화 등

* Absorption(흡수), Distribution(분포), Metabolism(대사), Excretion(배설) / Toxicity(독성), **Pharmacokinetics(약동학)

□ 정책소통 성과 사례

- (추진배경) 연구현장과의 소통 없이 이루어진 '24년 R&D 삭감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기본연구 재신설** 등의 혁신 기반 마련
- (기본연구 복원) 전임부터 비전임까지 **필요 최소 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 제공**

* (과기정통부) 전임 대상 기본연구 2,000개 과제, 1,150억 원 반영
(교육부) 비전임 대상 기본연구 790개 과제, 237억 원 반영

- (연구기간 확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성과 쫓기에 급급하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 연장***, 꾸준히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몰입환경 조성**

* (신진연구 유형A) 최소 1년 → 최소 3년으로 연장
(핵심연구 유형A) 최소 3년 → 최소 5년으로 연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일정 지연이 심각한 기반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
- 성과지표 중 <성과지표 1>과 <성과지표 3>은 각각 산출지표와 투입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1>은 전략 마련이 성과지표로 투자분석보고서와 투자전력 건수의 복합산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결과지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
- <성과지표 3>은 전략성 강화이지만 이를 신규사업수 비율로만 계산하고 있어 금액 등을 고려한 지표 개선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과기부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1과 3이 산출 및 투입위주로 구성되어 성과 측정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우수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반영이 분명하지 않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평가위원 자료 제공 등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외부 자문단 및 평가위원들의 자료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1>의 산식의 타당성이 낮아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는 <성과지표 3>의 경우도 동일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에 예산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화에 따른 기존 사업에 설명이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연구성과 관리·활용·홍보 제고

- ‘제5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6~‘30)’을 수립하여 성과의 효과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5년간 정책방향 종합 제시(10.27)
 - ※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위 및 3개 분과(연구성과관리, 기술사업화, 오픈사이언스)를 구성하여 수립위원회 운영(5~9월)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4년 선정된 R&D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8년만에 개최(1.23)
 - 또한 기술사업화 유형 성과 인정기간 확대(3년→5년), 후보 추천서 양식 및 접수시스템 개선 등 추진

우 수 사 례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 기계·소재 등 6개 분야별 최우수성과 12개, 사회문제 해결성과 12개 선정
 - (6개 기술분야별 선정 현황) 기계·소재 17건 / 생명·해양 25건 / 에너지·환경 19건 / 정보·전자 22건 / 순수기초·인프라 5건 / 융합 12건
- ◇ 선정된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후속과제 지원 사업 착수 추진
 - 내년부터 신규로 우수성과100선 선정과제에 대해 후속과제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과제당 3년간 약 13억원 규모 지원 예정



□ 수월성·전문성 중심의 전문기관 혁신

- 전문기관 의견수렴 통한 주요 개선사항 발굴 및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안)’ 마련 추진(3.28)
- 전문기관의 R&D사업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실태 조사·분석(12월)을 통한 국가R&D제도 개선 등 이행 점검
 - 국가 R&D사업을 대행하는 모든 주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하고, 분석 및 환류 실시

□ 자율과 책임 중심의 평가기반 마련

- 우수 성과창출 기반 마련 및 효율적 평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6~’30)」 수립(10.31)
-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분석 지침마련 및 상위점검을 통해 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 강화 및 지속적 확산 지원
 -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시 점검항목(50%↓) 및 보고서 분량(30%이상↓) 등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대상 훈.포장(7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 수여(4월, 과학의 날)하여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문기관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극대화 필요
 - ☞ 전문기관 사업관리담당자, 연구자 등 대상으로 지속적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발굴 확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범부처 전문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실제 일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이 가진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
 - ☞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의 증가로 모두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 2022년 기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는 1,397개로 이 중 983개를 17개 주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음
 -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시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연구성과 관리.활용.홍보 제고, 전문기관 혁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평가기반 마련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시스템 혁신에 부합하는 계획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활용 정책 추진율을 계획으로 수립한 것은 타당하나 연구관리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대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이 성실히 추진되었으나 일정 준수율이 91.67%이고 1건이 지연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TFT운영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높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추진 관련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선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수립을 노력 중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적극홍보와 소통강화로 우수성과 100선의 위상과 중요도 등이 높아져 우수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목표를 높이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상향되었으나, 우수성과에 대한 지표의 다변화 등이 여전히 필요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전문기관 혁신에 대해서는 특히 반복적인 내용보다 장.단기관점에서의 혁신방안 도출되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범부처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부처와의 협업 노력이 인정됨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전략적 평가 시행 및 실효성 확보】

- (사업평가) 성과 부진 및 관리미흡 사업 대상 구조조정계획 및 사업개선 이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사업평가와 사업·예산 환류 연계 강화
- (특정평가) 인력양성·기술사업화·글로벌 R&D 등 국가적 현안 및 정책이슈 사업 대상 심층평가를 통해 전략적 사업조정, 정책개선, 예산 배분·조정 추진
- (과제평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평가협의회(3,5,7,11월) 및 관계 기관 의견조치 실시(11월)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 마련

내용	개선사항
평가등급 개편	· 연구자들이 목표달성 실패의 부담없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4등급 체계를 성실성 중심 완료여부 평가로 전환
혁신성 평가	·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과제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지표로 연구개발과제의 혁신성 추가

- (연구기관평가) 현장 소통을 통해 평가체계를 설계하였으며, ▲시범평가 실시, ▲현장간담회, ▲전 구성원 설문조사 등 공감대를 개편 방안 반영

우 수 사 례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편(안) 마련

◇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선

- 이원화된 연구기관평가제도, 높은 평가부담, 낮은 평가 실효성
→ ▲(경영+연구)통합평가, ▲평가 부담 완화, ▲실질적 환류로 개편

◇ 다수 현장 소통 실시, 보완 위한 시범평가, 전구성원 설문조사 등 현장과 함께 추진

~ '25.3.	'25.5.~ 10.	'25.10.	~'25.11.
현장 의견 수렴 (릴레이 간담회, TF 등)	⇒ 시범평가 및 의견 수렴 (본 평가 수준 점검, 개선점 발굴)	⇒ 전 구성원 설문조사 실시 (통합평가 만족도, 환류 등)	= 릴레이 간담회 (기관장, 부서장, 젊은우수연구자 등)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제고】

- (제도개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파편화된 규정 정비를 위한 표준지침 개정*(7월)

* (주요 개정내용) 공동활용 기본원칙 제정, 연구시설 관리체계 개편, 연구장비 신속도입 체계 마련, 전체 표준지침 체계 재정비(3장 10절 → 7장 8절) 등

- (현황점검)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통합관리제** 확대 등을 통한 현장착근 추진

* 494개 비영리기관 및 보유 연구장비 53,848점 대상 / 온라인 서면조사(4-6월) 및 현장조사(8-9월) 실시

- **(활용촉진)** 기관 내 활용성 낮은 장비를 수요 기관·기업에 **이전***하여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우수 연구지원시설의 공동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 추진**

* ('25년) 나눔장비 이전심의회 총 11회 개최, 총 539점(약 16억원) 이전 지원

** 2개 주관시설(화학연(이차전지 분야), 나노중기원(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선정·지원

우 수 사 례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성과발표회 개최 및 나눔장비 이전지원

◇ 제2회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성과발표회 개최

- 공동활용(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관련 **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를 알리는 제2회 **통합성과발표회** 개최

◇ 나눔장비 이전지원

- 연구장비 539점을 이전·지원하였고,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248점(46%)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R&D 성과창출**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의 활용보다 **평가의 목적**에 더 가치를 두고 **평가지표 발굴**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미흡

☞ 사업평가, 특정평가의 평가지표 중 정성 평가지표 확대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효율 및 활용도 제고는 필요하나 **현장의 애로점에 대한 고려** 미흡

☞ 절차가 신속하고 간소화되도록 시스템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 설정한 성과에 대한 목표의 달성여부와 함께 계획에는 없지만 사업 추진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성평가 강화 필요

☞ 잦은 평가지표 및 제도의 변화로 현장의 혼란 야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평가지표 확보**로 연구의 수월성 및 도전성을 유도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장비구입 및 활용의 신속 진행 필요

☞ **AI 활용**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시스템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전략적 평가 시행 및 실효성 확보,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제고는 연구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연구수월성·수행편의성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계획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성과평가와 연구시설장비 고도화·효율화를 위한 성과목표는 적절하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활용정책 추진을 계획으로 수립한 것은 타당하나 연구관리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이 성실히 추진되었으나 일정 준수율이 96%이고 1건이 지연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설명회, 성과발표회, 현장간담회, 교육 등 다수 실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현장에서 지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로서 다수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영 중이고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에 환류하고자 노력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사업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과제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고도화를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및 나눔장비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나, 잦은 평가의 변화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으며,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이 더 가속화되는 연구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 현장의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정책 발굴도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나눔지원장비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는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장 중심 연구개발제도 개선

- (의견수렴 실시) 제도개선 기본지침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부처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온·오프라인) 및 건의사항 검토

※ IRIS 제도개선 게시판 운영(4~5월), 전문기관 및 연구행정 실무협의체(4~5월, 2회),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 등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5월)등

- (기본지침 마련) 현행 연구제도 분석 및 현장 건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25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지침 마련(과기자문회의, 3.28.)

○ 학생인건비 및 연구비 제도 개선

- (연구비 사용 유연화) 연구비 사용 관련 사용 불가 용도만을 규정하는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연구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정 검토

* 정책연구를 통해 '26년 상반기까지 방안 구체화, '26년 내 개정 목표

- (정산 간소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 간소화*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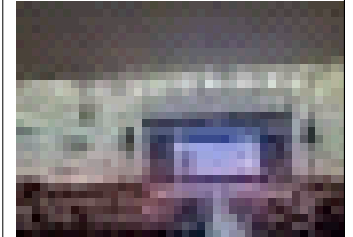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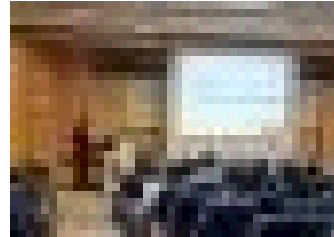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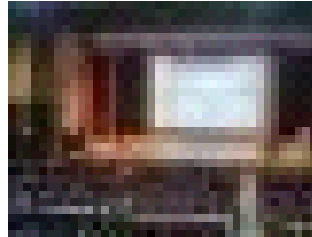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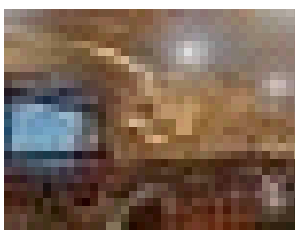
* 연구비 소액과제(5천만원 미만) 중 연구비 부정행위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과제만 정산하도록 개정 추진

- (학생연구자 지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 지정 확대(기존 年 1회→ 年 3회)를 통해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 2025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1차 : '25.6., 2차 : '25.8., 3차 : '25.12.)

○ 연구제도개선 홍보

- (설명회 개최) 권역별(수도, 충청, 호남, 영남권)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정부와 연구현장 간 소통의 장 마련(1.14.~1.23.)



제도개선 종합 설명회(충청권 1.14, 호남권 1.16, 영남권 1.21, 수도권 1.23))

- (혁신법 매뉴얼 배포) '24.2분기~'25년 제도개선 사항 및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하여 혁신법 매뉴얼 배포(4월, 9월)

*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발생에 따라 연구기관 신청자격에 안전역량 강조

- (교육 실시) 연구개발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가R&D 수행 및 관리 인력 등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교육과정 제공(10회)

○ 과학기술혁신펀드

- R&D 자금 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사용하는 16개 부처(복지부·국토부 등)와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

* 출범 첫해임에도 약 7,500억원 이상 결성 예상, 기존 목표(2,500억원)대비 300% 달성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혁신법 시행 이후 개선된 주요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는 증가하였으나 이행률에 대한 점검이 미흡

☞ 범부처 전문기관 전문가들, 즉 실제 연구자와 소통하며 제도를 집행 안내하는 연구행정종사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

-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조성은 매우 바람직하나 폭넓은 전략기술을 다루는 만큼 他 실·국·부처의 협조 필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타부처 사업에도 제도개선이 안착되도록 부처간 소통 필요
- 만족도 조사 대상의 다양성 확보 필요
- 현장의 제도 이행률을 높이는 인센티브 강화 지속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제도·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법 보완 계획은 국정과제에 부합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장과의 소통, 현장의 만족도의 성과지표는 적절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이 성실히 추진되었으나 일정 준수율이 94.12%이고 1건이 지연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계획대비 150% 달성된 45회의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온·오프라인 소통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에 노력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사항 12건 발굴 및 법령 제도 정비 추진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만족도 조사 대상에 대한 다변화 및 참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연구환경 혁신, 행정부담 완화, 미래 연구환경 제도정비의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부처별 연구의 속성에 따라 제도 적용이 다르게 진행됨을 파악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 촉진 정책 개발이 필요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학생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확약서 소급확약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적극행정이 인정됨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연구자산의 선제적·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등 연구보안 체계 정립 및 내실화 추진
 - 보안등급 세분화(‘민감과제’ 신설), 범부처 보안지침 수립,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등 연구자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혁신법 개정 추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25.2월), 법사위 의결(12월)
 - 연구개발기관 대상 국외수혜정보 보고, 연구보안 사고 대응 및 조사 체계 정비 등 연구보안 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실시(4개 대학, 8~12월)
 - 연구보안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학(원) 교육과정 신설, 연구기관 지원 인력 대상 연구보안 교육 실시(~11월, 4개 권역·온라인 384명)

우 수 사 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및 연구자를 위한 현장매뉴얼 마련·배포

- ◇ 국제공동연구시 상대국의 규정 미숙지로 공동연구 중단, 제재 등 방지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마련(미국편 7월, EU증보판 12월)
 - 미국 DOE의 ‘민감국가’ 지정을 계기로, 국내 연구자의 주의 환기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국가의 보안제도 특성, 연구문화에 따른 주의사항 등 안내
- ◇ 국가 R&D 연구자가 연구보안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등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 제작 배포(6월) 및 교육 실시(7월, 213명)
 - 주요 상황(국제공동연구 등)별 연구보안 관련 법·규정, 행동 권고사항 등 안내



-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건전한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및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부처의 사전 제재처분에 대해 해당 연구자에 소명기회 제공 및 합리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 재검토회의 운영(25회 개최, 421개 사전처분 심의)
 - 국가R&D과제 선정평가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3월)
 - 국가R&D에 특수관계자(가족, 미성년자 등) 참여 시 검증·승인절차 개선을 위해 마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0월)

우 수 사 례

제재처분 컨설팅 실시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 부처별 R&D과제 특성을 고려한 제재처분 유의사항 및 혁신법령 적용 미비사항 등 컨설팅을 통해 사전 제재처분의 합리성·타당성 보완
 - 제1차 농식품부(8.25) / 제2차 중기부(11.6) / 제3차 방사청(11.18)
- ◇ 연구현장의 제재처분 이해도 제고와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단계별 표준프로세스 노하우 공유, 제재처분의 합리적 기준·절차 등 안내를 위한 가이드 개정 배포
 - ‘연구자용 제재제도 설명서’, ‘제재처분 표준프로세 및 노하우’,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공, 연구윤리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
 - 생성형 AI 사용 확산, 논문공장 대두 등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제공(11월)
 - 부실의심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해외기관·단체에서 정한 학술지 평가 등급 제공 등 정보 검색 서비스(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AFE)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보완 및 정책개선을 위한 방향성 검토 노력이 인정됨.
- 성과목표인 제도·시스템 혁신에 기반한 성과 창출 촉진 측면에서 연구현장에 연구윤리 관련 핵심 제도 착근과 활용성이 다소 미흡
 - ☞ 정책적 영향이 연구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연구보안, 인식제고, 컨설팅, 인력양성, 제도개선, 법 개정 등과 관련된 주요 분야 정책이 국가적 필요와 더불어 연구현장의 니즈와 수요를 함께 반영하여 발굴·추진 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나, 제재처분을 포함한 연구현장에서의 제도·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 개선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전문성·적극성에 기반한 연구자 권익과 연구윤리(보안) 문화의 안착 노력 필요
 - ☞ 향후 연구자율성 확대에 따른 연구관리 리스크 및 불확실성, 규정해석 모호성 증대 수반 가능성 있어 제도·정책 입안자와 수혜자의 충분한 양방향 소통과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계획이 국정과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충실히 설정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및 정책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설정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추진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노력이 인정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다양한 정책소통 노력과 과정의 우수성이 인정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인정되나, 계획과 목표의 도전성 측면의 수준은 다소 낮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현장에 정책 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의 문제 해결 관점에서의 정책효과는 판단하기 어려움.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타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 성과와 적극행정 노력이 인정됨.
	사회적 가치	해당없음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해당없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RIS를 통한 연구행정 혁신)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불편 해소,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 및 R&D 정보 공유 확대
 - (IRIS 전면 적용*) IRIS 서비스 개통('22.1월) 이후 37개 전문기관의 IRIS를 적용 중이며, 25.2만개의 국가 R&D 과제가 IRIS를 통해 관리
 - * 산기평을 제외('26.3월 이관완료 예정)하고 쏘 IRIS 적용기관의 계속·종료과제 정보(내용, 평가 결과 등) IRIS 이관을 통해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완성('25.5월)
 - (시스템 안정화) 과제 접수 집중 시기('24.12.~'25.4.)에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성능 강화 및 실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 ※ 시스템 지연을 유발하는 ①데이터 처리 지연 구간 개선, ②시스템 성능 개선, ③접수 집중시기 H/W자원 증설 등으로 3.5만여개 과제 동시 접수 시에도 문제없도록 개선
 - (편의성 개선) 연구개발기관(대학·출연연 등), 성과물전담기관 등 他 시스템 연계*, 이용편의 기능 확대** 등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총 42건)
 - * (기관 연계) 기관 MIS에서 협약정보 변경 시 IRIS 자동 반영 / (성과물 연계) 既 등록성과 연계 반영
 - ** 검색·사용 편의, UI/UX 개선, 해외연구자용 기능 보완 등 연구자 중심 개선
- (수요자 맞춤형 NTIS 제공)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이용자 중심 NTIS 서비스 개선
 - (정보 정합성 제고) 출연연(15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를 NTIS와 연계(21,492건)하여 국가 R&D 성과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
 - (이용자 중심 서비스) 복잡하고, 연계성 부족했던 메뉴 체계를 이용자 동선에 맞추어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개편(41개 메뉴 → 21개 메뉴)
- (범부처 연구데이터 체계 확립) 국가R&D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법*(약칭 연구데이터법) 제정 추진 및 현장의견 수렴**
 - * 복기왕 의원 발의안('24.7.2.), 박충권 의원 발의안('24.7.4.) 황정아 의원 발의안('24.9.3.)
 - ** 박충권 의원 국회 공청회(3.17.), NST 소관 출연연 연구자 설문조사(5월), 출연연 기관 저장소 운영자 간담회(9.24.), 연구자 간담회(10.28.), 산학연 연구자 설문조사(11월)
- (Ezbaro 개선) 효율적인 국가 R&D 연구비 집행정보 관리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

- (시스템 안정화) 이용 불편을 유발하는 메뉴 조회 및 레포트 로딩 지연, IRIS 연계 지연 등의 성능 문제 개선하고, 이용자 계정 보안 관리 강화*

* 분기별 PW 변경 의무화, OTP 수신 매체 확대(카카오톡, SMS→App 추가) 등

- (이용자 중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증빙자료 (외자구매 등 사후제출 허용), 카드내역(다수 카드 일괄 조회) 등 개선(총 71건)

○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획 등을 위한 과학기술 통계정보 생산

- (연구개발활동조사) 국내(정부+민간) 연구개발활동(연구비, 연구인력 등)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국가 대표통계(OECD 제출) 수립(12월, 운영위 상정 예정)

* '24년 7만개 산학연 대상, 총 연구비 131조(세계 5위), GDP 대비 5.13%, 연구인력 62만명

- (기술무역통계) 한국은행 외환거래자료 기반 기술무역 통계를 작성·발표하여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경제·산업 주요 데이터로 활용

* 기초데이터 제공위탁 근거법령 마련 후 데이터를 입수('24.9월)하여 결과 '23년 결과 발표('25.4월)

- (기술영향평가) 평가대상 기술(AI agent)에 대한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대안 중심 평가, 정책협의체 신설 등 실질적 환류 체계 구축

- (기술수준평가) 평가전문가 POOL 대폭 확대*, 전략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석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

* ('22년) 1,360명→('24년) 2,129명 / ** 네이처, 케네디스쿨 등 해외 자료 교차분석, 전문가문단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수요자, 사용자 중심의 지속적인 효율성 증대 지표 발굴 필요

- 활용성과 만족도 평가 지표와 더불어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에 관련된 새로운 지표 선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사과제 검토, 중복성 점검과 더불어 성과에 대한 분석기능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축적된 data의 AI 분석 기능 도입으로 활용성 증대 요망

- AI-Agent 개념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R&D 행정업무의 효율화, 통계 데이터에 의한 R&D 과제 기획,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국가 R&D 정보의 통합, 사용자 중심 운영이 반영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사용자의 만족도,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표는 타당함 * 시스템 성능평가와 관련된 sub 지표 발굴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일정 집행 및 관리가 우수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소통 플랫폼 운영하여 의견 종합하고, 반영을 위해 노력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연중 간담회, 설명회, 협의체 등으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이상 낮음	성과지표는 일정에 맞추어 달성됨 *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을 상향 검토 필요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효율성 제고 필요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인정	시스템의 통합 및 상시적 VOC 반영 노력이 인정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R&D 예타 획기적 개편】

①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시행(국정과제)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 추진(1~11월, 국회 설명·대응 48회) 법사위 통과(11.12)

※ (과기기본법) R&D 예타 후속제도 시행,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에서 R&D 제외

② R&D 예타 후속제도로써 1천억원 이상 대형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예타 총괄위원회에 보고(12월 과기자문회의 상정 예정)

- (추진경과) 후속제도 마련을 위해 현장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간담회(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3.12,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3.14, 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4.2, 과기혁신본부장 주재 연구인프라 관련 8.13), 국회 공청회(5.8), 설명회(출연연 4.1, 관계기관 5.8, 5.12, 10.1) 등

< R&D 예타 폐지 관련 출연연 설문조사 >

○ (주요결과) ①예타 폐지 및 새로운 제도로 전환 필요(83.7%), ②R&D유형별 제도 도입 필요(83.2%), ③과기기본법에 근거한 제도 필요(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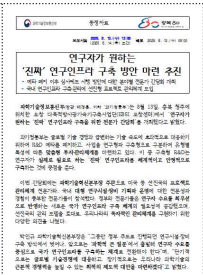
※ NST 소관 출연연 연구자 916명 응답('25.4.11.~4.20.)

우 수 사 례 R&D 예타 폐지 추진 및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 마련

◇ (R&D 예타 폐지) 적극적인 범부처 협력 입법 노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예타 대상에서 R&D 제외)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R&D 예타 후속제도 시행) 법사위 통과('25.11월)

◇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1천억원 이상 R&D사업에 대하여 유형(연구형, 구축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와 연계

- 특히,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높고 구축 이후 경비가 지속 투입되는 구축형 R&D는 단계별 심사에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입 가능한 관문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 추진



【과도기간 유연하고 안정적인 예타 추진】

① (예타면제·적정성검토) AI 3대 강국 도약 등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 10개 사업, 부처 요구 총사업비 약 6.6조원 규모(지역거점AX, AI반도체, SMR, 해양연구선 등)

** '24년 예타 면제된 6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완료(9,835억원 절감), 9개 사업 진행 중

② (특정평가) R&D 예타를 통과한 사업 중, 환경변화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를 진행하여 유연한 사업 추진 지원(4개 사업 검토)

③ (대상선정) R&D 예타 신청 사업에 대해 정책 부합성, 예산 투자 측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 선정

※ ('25-1차) 7개 사업(3조 1,451억원) 예타 접수 → 2개 사업 대상 선정, 예타 조사 중

('25-2차) 9개 사업(5조 5,733억원) 예타 접수 → 대상 미선정

('25-3차) 11개 사업(5조 7,372억원) 예타 접수 → 1개 사업 대상 선정, 예타 조사 중

('25-4차) 17개 사업(13조) 예타·면제 접수 → 대상 선정 진행 중

④ (본예타) 사업별 PM, 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시행/미시행 여부 결정

※ 11개 사업 예타 조사를 진행하였고 10개 사업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부처 요구 5조 5,095억원 → 확정 총사업비 3조 4,042억원), 2개 사업 예타 조사 중

⑤ (사전컨설팅·현장소통) 컨설팅을 통해 4개 예타 신청 예정사업의 완성도 향상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예타로) 운영, 교육*, 현장방문** 등 추진

* 상/하반기 R&D 예타 및 후속제도 설명회에 305명 참석(5.8, 5.12, 10.1), 출연연 대상 후속제도 설명회에 102명 참석(4.2)

** 수소환원제철(1.9),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수행기관(3.7), 포스코 용선 현장(4.2), 한국해양과학기술원(4.9~10), CCU 메가 프로젝트 현장(4.16), 인공위성개발 현장(6.18)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가 R&D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R&D 예비타당성제도' 폐지를 새정부의 국정과제(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에 포함시킨 성과는 인정되나, 정책성과 홍보 및 소통노력 지속 필요

👉 '예타 만족도 조사(24.11.3~11.21)' 결과 및 이를 활용한 예타 제도 개선 방안 홍보, 예타 후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효과, 후속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관한 홍보계획과 전략을 마련하여 법률 및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R&D 예타 폐지에 관한 입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 TF를 구성하여 정책 홍보 노력 강화 필요

👉 국가 R&D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포함하여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혁신'을 통한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예타 폐지 및 후속 조치계획 수립 계획은 적절하나,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혁신방향에 부합하는 세부 목표와 전략이 다소 미흡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예타 제도개선 및 현장소통 추진율은 성과지표로 적절하나, 폐지대상인 예타제도 만족도(30%)는 적절한 지 의문이며, 과도기 지표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비중 하향조정 필요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성과관리계획 상의 추진일정은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나, 폐지 후속조치(사전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일정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예타 폐지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간담회 4회, 국회 공청회 1회, 설명회 4회) 노력은 인정되나, 정책 미확정으로 인하여 정책 반영 성과는 다소 미흡하였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예타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및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적극성은 3년간 추세치보다 낮은 등 적극성은 낮으며, 관련 법률 미개정을 이유로 후속조치(제도개선방안 및 운영)의 실효성이 낮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관련 법률의 입법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 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대형 R&D투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혁신 등에 관한 정책효과로 연계되지 못함
	3-3.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미흡	외부 정책고객의 만족도가 “미흡”으로 나타남
4. 가점	협업	불인정	해당 사항 없음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해당없음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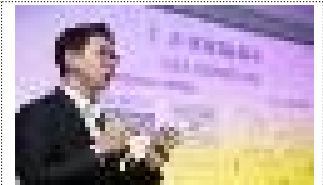
- (정책 방향 마련) 국정과제,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25.1)하는 등 과기정통부 비전, 주요정책과제 제시
- (주요 정책·국정과제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및 소관 국정과제 관련 정책추진 현황 등을 총괄 점검(매월)·관리하여 국정운영 성과 제고
- (부처 간 협업 촉진)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장관회의, 이슈별 점검회의/위원회 등을 지원하여 범부처 협업 촉진(총 47회)
- (부처 간 소통 강화) 3+@ (총리-부총리-관계장관) 회의, 부총리 기관 간 간담회를 신설하며 부총리 기관으로서의 부처간 소통 및 조정 역할 강화
- (청년 정책참여 확대)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과정에 청년층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지원 및 2030자문단 구성·운영
- (정책연구과제 관리) 과학기술·ICT분야 주요 현안 및 우리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연구과제(7건) 추진
- (정책회의 운영) 매주 정책 공유회의, 메시지전략회의, 외청 및 별도기구가 참여하는 확대정책공유회의를 진행하며 부내 현안 공유와 리스크를 점검
- ('26년 예산편성 및 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여력을 확충하고, AI 대전환, 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등 중점 투자
- ('25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AX대전환, 정보보호 강화, 민생지원 등 주요 정책방향에 맞춰 2차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 편성(5.1, 7.4)
- ('25~'29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이행) AI산업 기반 확충, 핵심전략기술 확보, 디지털안전 등 주요 정책방향에 맞춘 5년 간 투자 방향 마련
- (집행 점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원활한 집행을 독려

- (보조사업 관리) 보조금 정산·반납을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를 통한 정부 재정 여건 향상에 기여(보조금 정산현황 매월 점검)
- (예타 사업 발굴) 과기정통부 중점분야에 부합하는 신규 예타 사업을 발굴(9건)하고 기획을 지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건) 및 면제(4건) 추진

우 수 사 례 과기정통부 청사진 제시

◇ 과기정통부 도전과제 설정 및 청사진 제시

-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9.12)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AI 정책 청사진 발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선제적 노력을 통한 성과창출보다 외부 요청에 대응하는 업무(예: 주요 회의체 대응), 부서업무 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예: 회의개최) 횡수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과정지표로서 적극적 목표 설정이 요구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사업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신속집행을 독려하는 것은 일선 부서에서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실질적 업무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이 부족함
- 정책소통의 적극성 및 소통 대상이 다소 부족함
 - 국회 예산설명은 정책소통이라기 보다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 상의 활동임. 성과관리계획 자문단이나 자체평가 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이외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회의체 대응, 회의개최 활동의 실질적 성과와 연계되는 지표를 마련 하는 등 도전적 성과지표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보완할 필요
- 경기대응과 4분기 집중 집행 방지를 위한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를 살 리되 실적 경쟁으로 형식화되지 않도록 사업 특성과 집행 환경에 따라 신속집행의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등 재정기획 부서로서 창의 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신속집행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소통의 적극성 및 소통 대상의 다각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예를 들어 청년 보좌역 지원과 2030 자문단을 정책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 이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을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 및 AI 대전환을 위한 국정기조와 부합하며 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 노력이 인정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성과지표①과 ②는 과정지표로서 실질적 성과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성과지표③의 경우 신속집행이 실질적으로 일선 부서에서는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부서에서의 사업 성격을 고려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세부 추진계획이 일정지연 없이 모두 충실하게 이행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청년2030 자문단을 운영하여 정책제언을 발굴하였으나 부처 핵심 정책에 반영정도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보통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및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 수준으로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예산설명을 위한 국회 대상 설명회로서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모든 지표에 대해 100%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부서 성과 달성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된다기보다는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 외부 요청에 대한 대응 업무로서 적극적 목표설정이 요구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주요 국정목표인 AI3대강국 진입을 위한 최다수 국정과제 수립 및 이행 지원, 핵심 구조조정을 통한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로 주요정책을 뒷받침한 성과가 인정됨
4. 가점	협업	인정	다양한 회의체를 통한 기관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도출 및 예산을 편성하였음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조직·정원) 통상적인 정기·수시직제 외에도 정부조직개편(10.1) 대응, 하부기구 정비, 대통령위원회 신설로 부총리 체제에 걸맞는 조직역량 확보
- ▲과학기술·인공지능 총괄 부총리 체제 출범 ▲인공지능정책실 및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신설 ▲인재 유치 등 신규 정책수요를 반영한 임시조직 신설 등

우 수 사 례

조직개편 대응 및 하부기구 정비 추진

- ◇ [조직개편 대응]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3월~, 대통령실·국정위·행안부 등)을 통해 부총리 부처 승격 및 AI실 신설 건인(+29명)
- ◇ [하부기구 정비] 핵심 국정과제인 미래 전략기술 육성 및 출연연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정책실 개편 및 해킹 등 현안 대응 인력 보강(12월)

- (정부업무평가) '25년도 정부업무평가 대응계획 수립(11월), 정부업무평가 정기점검 및 외부 전문가 종합점검(TF, 2회)을 통한 분야별 추진성과 창출
-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정평가 대응체계 구축
 - ※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등 4개 부문 우수기관 선정
- (성과관리) 전년도 평가결과를 개인별 성과급 지급(3월)에 환류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정
- (자체평가) 관리과제별 이행상황 점검(대면) 및 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최종성과 점검(12월) 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결정(26.3월)시 활용
- (정부혁신·적극행정)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혜택과 행복을 체감하기 위한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28건) 및 우수공무원(38명) 선정·포상

우 수 사 례

조직문화 개선, 정부혁신/적극행정 성과

- ◇ [조직문화]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저연차 어벤저스 활동, 현장방문(LG AI연구원, 네이버 1784), 간부들과의 소통밥상(6회), 팀업-스포츠데이(체육대회), 칭찬문화 만들기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정부혁신 실천
- ◇ [정부혁신 성과] ① AI·디지털 선도부처로서 정부혁신박람회 혁신서비스 전시(3건), 부대행사 운영(3건), ② 자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과제 발굴(총 34건)로 범부처 정부혁신 경진대회 2차 온라인 국민심사 진행(3건) 및 장관상(2건) 수상
- ◇ [적극행정 성과] ①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1건 수상, ② 국조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 선정

-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실시(2회), 직무급 도입현황(총 13개 기관 도입) 점검(2회),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9월~) 등 추진
- **(갈등관리)**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2월)하고, 자체과제(4건)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갈등현안(4건) 발굴, 부내 소속 직원들의 갈등관리 교육과정 이수(총 24,800명)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우수기관 선정 등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질적 도약을 위한 노력보다 양적 성과에 다소 치우쳐 있음
- 평가회의와 같이 정책소통으로 보기 어려운 활동들을 실적으로 제시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에 있어서 양적 도전성과 질적 도전성을 결합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부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부서 업무와 관련한 정책소통 필요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부내 직원이나 공공기관 구성원의 혁신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소통,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통한 실질적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 및 AI 대전환을 위한 국정기조와 부합하도록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고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 노력이 인정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 성과를 지표로 선정하고, 그 외 부서의 핵심업무를 대표하는 지표체계로 구성함. 다만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양적 성과보다 질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조직개편이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기인하여 1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지연 이외에 충실하게 추진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부서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부내 의견수렴 및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다만 기관 외부의 의견수렴 결과 정책반영 정도는 다소 부족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보통	자체평가 점검회의를 위한 설명회, 적극행정 및 갈등관리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노력이 인정됨. 그 외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회의로서 정책소통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효율적 조직관리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경우 목표치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였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목표치는 양적 도전성에 다소 치우쳐져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주요 국정목표인 AI 3대강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정비로 주요정책을 뒷받침한 성과가 인정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균형있는 규제 합리화

- (핵심규제 개선) R&D 예타 폐지, AI데이터센터 입지시설 규제합리화 추진 및 AI학습 활용 규제개선 안건 발굴로 대통령 주재 공개토론(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9.15) 논의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신사업 등 즉시 규제 개선이 어렵고 정책실험이 필요한 과제 직접 발굴, 실증까지 지원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6월)
- ※ (발굴과제) 국가지식정보 원문의 AI학습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실증 특례

○ 체계적 입법추진 및 정책입안 지원

- (법령 제·개정 지원) 정부입법계획 수립*('24.12월), 관련 부처(국조실, 법제처 등) 협의를 통해 법령 25건**, 일반안건 8건 등 33건 국무회의 상정·심의·의결
- * 총 4건의 정부입법계획 목표 중 4건(100%) 국회 제출 완료
- ** 차관회의(42회) / 국무회의(49회) 진행, 하위법령 제때 마련 시행령(15건) 등 22건 개정 완료
- (국회심사) 상임위 법안 소위·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대응으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제정안) 등 32개 법안 통과
- ※ (상임위) 법안 소위 17회·전체회의 8회·공청회 3회 / (법사위) 전체회의 9회

○ 대민서비스 질 제고

- (민원답변 관리) 민원처리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답변 사전 검토·사후 검수 등 민원심사관 제도운영('25.1~10월, 국민신문고 35,000건 접수·처리)
- ※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접속장애 기간(9.26~10.28) 민원실 대표전화(1335) 등을 통해 민원(전화 2,350건, 우편/이메일 483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 (제도개선) 국민 안전·통신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시행(5건*)
- * ① 쿼싱(QR코드 범죄) 피해예방 캠페인, ②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수립 ③ 명절·응급진료 시설 정보제공, ④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피해수습 지원, ⑤ 알뜰폰 요금제 통신비 부담 완화
-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 담당자 정신건강 보호·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7개)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장·차관 간담회 개최(6회)

○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 강화

- (협력관계 조성)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과방위 보좌진 업무설명회 개최(9월), 신임 장관의 과방위·예결위·법사위 의원(7월) 및 국회의장(9월) 면담 등 추진
- (의정활동 지원) 장관 인사청문회(7월),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1·2·4·9월), 과방위 전체회의 등(20회) 국정감사(10월) 대응 및 의원별 요구자료* 취합·제출

※ 인사청문회(7.14), 대정부질문(2월, 4월, 9월), 긴급현안질문(1.9, 4.3), 과방위 전체회의·해킹 청문회 등(1.6, 2.25, 3.5, 3.11, 3.24, 4.18, 4.30, 5.8, 6.27, 7.7, 8.26, 9.5, 9.11, 9.24, 11.17, 11.24, 12.2, 12.9., 12.10, 12.17), 국정감사(10.13~29)

* 국회 요구자료 현황(12.10일 기준) : 10,815건('24년 총 8,973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규제개혁 추진율의 경우 전체 과제수 대비 완료 과제수로 측정하고 있으나 과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과 산업혁신, 민생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의 성과가 필요할 것이나, 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부입법계획 수립의 경우 계획수립 그 자체보다는 입법화가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바, 계획수립의 30%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수요조사, 조정, 장관결재와 같은 활동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적극적 정책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방식의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소통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체감도 높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 성과를 도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민원담당자나 산하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와 같은 다각화된 방식의 정책소통 및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대국민 소통 등 적극적인 정책 소통

활동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행정제도 발굴 건수, 민원처리 만족도와 같은 산출·결과 차원의 성과를 측정한 노력이 인정되나, 성과지표명(민원행정 추진율)은 과정지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지표명 변경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성과목표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국정과제와 부합하도록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고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 노력이 인정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행정제도 발굴 건수, 민원처리 만족도와 같은 국민체감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측정하였음. 다만 일부지표는 타 부서 업무 성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유 성과를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세부 추진계획이 일정지연 없이 모두 충실하게 이행되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수요조사, 조정, 장관결재의 경우 지표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와 같은 추가적 노력을 이행할 필요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보통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대상 정보제공 이외 별도의 소통노력이 다소 부족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규제개혁, 민원행정, 정부입법 지표의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 다만 규제개혁추진율의 경우 파급효과 큰 규제개혁을 추진했는지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정부입법계획 수립의 경우 계획수립 그 자체는 투입지표로서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규제개선 및 법령 제·개정 조정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과기부 주요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과가 인정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제정·시행하여 지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국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던 우편 및
우체국 금융 서비스 장애를 초기에 정상화
- 대응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전문가 및 담당자가 참여한 모의훈련및
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매뉴얼 개정 등 검토

○ AI서비스 개발 및 학습에 적합한 AI친화 공공데이터 개방·발굴 추진

- 사회현안 해결에 용이한 스팸·해킹·피싱 피해 상담 데이터셋(합성) 3종 등
총 216건 개방* 추진(~10월)

* 3차원 동적객체검출, 고령자의 일상행동인식, 에너지 잠재량, 자율주행 신호등 및 수신호 인식 등

○ '25년 과기정통부 AI·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등 성과공유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우수 활용사례와 AI·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정책·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공유 및 포상*을 통한 활성화 추진(6~9월)

* 총 39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을 선정, 장관상 6점과 부상 수여

우 수 사 례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1건, 우수2건, 장려상 3건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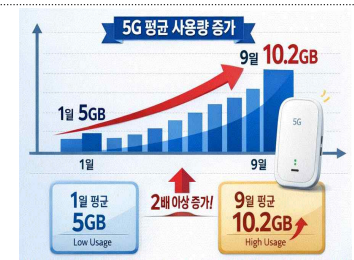
◇ 수상작 내역

시상	기관명	과제명	분야
최우수상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해상 인명안전과 선박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분석· 정책활용
우수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AI 이미지 분석을 통한 무선국 안테나 정보 확인 시스템	
우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AI 활용 촉진을 위한 비정형 텍스트데이터의 가명정보 제공! (UDmaster)	개방· 민간활용
장려상	한국인터넷진흥원	AI 가상 데이터로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생체인식 제품 성능은 정확하게!!	분석· 정책활용
장려상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 특화 언어모델(SPARK) 및 생성형 AI 서비스(KISTEP-GEN) 구축	
장려상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개발원	머신러닝 기반 정책수요자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정책 효과성 검증(우체국금융 초개인화 마케팅 사례 적용)	

-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한 윈도우11 전환(PC 약1,300대, VDI시스템)과 CS센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조치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 5G 정부망 이용률 저조('23년 평균 1.32GB)하였으나, 신형 에그(속도, 경량화 개선) 교체 및 이용 장려책을 통해 1인당 평균 사용량이 '25.1월 5GB에서 9월 10.2GB로 증가

우 수 사 례 5G 정부망 사용량 증가 사례

- ◇ 신형 에그(속도, 경량화 개선) 도입과 이용 활성화 정책(각 부서에 이용 실적 공유, 우수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5G정부망 이용률 대폭 상승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AI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은 신규지표이긴 하지만 현재 국정과제 1순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노력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됨
- 과기정통부가 가장 앞장서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내 모든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정보화 부서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아쉬움
- 공공데이터 발굴과 국민 이용 활성화 추진이 본 과제의 주요 목표인데 반해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 관련 사례들도 중요성에 비춰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보화 부서로서 장애 대응이나 수동적인 사용자 요구 서비스와 같은 고전적인 개념을 탈피해,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AI 활성화를 견인하는 능동적인 추진과제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기 바람.
- 공공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 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전파된 사례를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성과목표에 따라 추진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나 국정과제 연계 측면에서 다소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장애 대응 및 사용자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 노력에 대한 성과지표는 정보화 부서의 기본 지표로 볼 수는 있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 AI 주무부처로서의 가치 지향 및 확산을 위한 도전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추진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외적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이행과제는 일정대로 추진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적절히 운영했으며, 결과의 정책반영 노력도 어느 정도 인정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협의를 수행하였으나 정책 반영 및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목표달성도는 100%이지만 사건사고 대응과 같은 고전적인 지표보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데이터 개방의 활용 성과 등과 같은 도전적인 지표 발굴이 필요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 성과를 도출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및 대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365일 24시간 3개 사이버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공격 실시간 대응
 - 3개 센터(과기정통·과학기술·우정)를 통해 본부·소속·산하 63개 기관 침해 대응
- 홈페이지·정보시스템 상시 취약점 점검·이행 조치 내실화 및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한 사전 취약점 제거
-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심층적·장기간 모의침투 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킹 대응 역량 강화
-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정보보안 부문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제고

우 수 사 례	미흡기관 역량 강화
---------	------------

- ◇ 정보보안 부문 미흡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등 실무 교육 실시(2회, 11.13, 11.25)
- ◇ 정보보호 미흡기관 역량강화 TF구성·운영(3회, 10~11월)

- 소속·산하기관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강연, 부내 정보보호 포인트 제도, 미흡자 대상 해킹메일 대응 교육(기관별) 등을 통해 자발적·적극적 정보보호 활동 유도

※ 찾아가는 강연회(5회), 정보보호 포인트제도(매월), 부서별 담당자 교육(3회), 정보보호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 운영 등

- 실무자·최고책임자 협의회, 워크숍, 주요정책 설명회 등을 통한 소통 강화 및 사이버 위협 정보(공격자 IP, 유형 등)·우수 정책 상시 공유 체계, 국정원 협력체계 운영
- 실무자·최고책임자 협의회, 워크숍, 주요정책 설명회 등을 통한 소통 강화 및 사이버 위협 정보(공격자 IP, 유형 등)·우수 정책 상시 공유 체계, 국정원 협력체계 운영
- ※ 정책설명회(1회), 협의회(책임자 5회, 실무자 1회, 사이버안전센터 4회), 개인정보보호 연구반(5회) 등

우수사례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설명회

- ◇ 소속·산하기관과 상시 정책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지원 시스템’ 커뮤니티 개설 및 실무자협의회 및 사전설명회를 통한 실무자 의견* 수렴

* 매뉴얼·지침 개정, 제도개편방향 등 의견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서(5건) 개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산·학·연 및 타 부처 등과의 실제적인 협력은 현장에서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교한 협력 방안**에 대한 설계와 추진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2024년도 지적이 있었는데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음
 - 산하기관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기정통부, 개보위, 국정원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로감이 높음
- 사이버공격 대응이나 훈련에 있어 고전적인 방법을 넘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를 활용한 또는 AI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이버 공격 등 정보보안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보다 **선제적이고 트렌드 지향적인 정보보호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이 기대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성과목표에 따라 추진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나, AI 안전·신뢰 확보라는 국정과제와 부합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AI를 필두로 한 신종 사이버 공격 및 방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성과지표의 발굴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이행과제는 일정대로 추진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적절히 운영했으며 지표통합을 위한 노력도 인정되나, 현장은 여전히 여러 채널을 통한 점검과 평가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자료 제공, 현장방문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및 상반기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노력도 인정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목표달성도는 100%로 달성이지만 AI 안전·신뢰 확보라는 국정과제 목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 필요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국정원, 개보위 등 중복·유사기관 점검 지표를 일원화하여 기관 행정부담을 감소하고 점검 효율성을 높인 것은 고무적인 시도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점검·평가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정착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더 필요함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의 과학기술·ICT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신속·정확히 설명·전달할 수 있는 소통체계 강화
 - 브리핑 확대, 기자간담회·기자스터디·백브리핑 등 개방형 정책설명, 부총리·차관 인터뷰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홍보전략 마련, 기관장의 적극적인 현장 및 언론소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및 인재강국 실현, ▲ 세계를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 ▲ AI 3대 강국 도약, ▲ 튼튼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



-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핵심 정책에 대해 시기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보·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 신뢰도 제고
 - 민감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긴급 현안 브리핑 등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상세히 공개·설명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에 노력

-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신속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보도설명 자료 등을 배포하여 오보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노력

우 수 사 례 언론대응 우수사례(제22회 국정홍보점검회의, 11.13)

◇ 언론대응 우수사례(제22회 국정홍보점검회의, 11.13)

-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혁신을 골자로 한 과기정통부의 종합대책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 대상 적극 설명, 수정 요청 ➔ 보도 후 기사 수정(제목 수정 및 과기정통부 입장 추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4년 대비 정책 브리핑 확대 실적이 상당하나,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정과제 발표 및 신규정책 수립 등 시기적 특수성도 있다고 하겠음
 - ☞ 차년도에는 올해 추진한 업무 실적과 축적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기획 등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
-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정책이해도 제고의 결과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 필요
 - ☞ 신규 세부지표 추가, 지표간 비중 조정 등 검토 제안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홍보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책소통과 대국민 정책이해도 제고이므로 「과기부 홍보강화 방안 수립('25.10)」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안대응과 기획홍보의 균형전략 마련 필요
- 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는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속기관 및 기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고 홍보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기획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안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새정부 출범에 힘입어 국정과제 핵심정책에 대한 소통계획을 주요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정책브리핑 활동실적(40%), 방송·신문·온라인 보도성과(40%),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인지도(20%)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결과 및 효과 측정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총 10개 계획과제를 일정에 맞게 준수하여 추진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홍보전략회의(주1회), 메시지전략회의(주1회), 간담회·정책설명회(총5회) 등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발표 및 행사를 대비한 집중 홍보 노력이 있었으며, 과기부 홍보강화방안을 수립하였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주요 정책발표 전 타부처와 협업으로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노력이 있었으나, 주요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는 일정이 집중되어 개선 검토 필요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세 가지 성과목표 모두 100% 달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현안으로서 APEC 디지털·장관회의 결과,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방안 발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부총리·차관 브리핑을 추진하여 언론 이해도를 제고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통강화, 국정 핵심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 언론 이슈 대응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함 - 기획홍보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리스크 대응 등 사후조치에 머무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VI-2-②

온라인 홍보채널의 활용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 제고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다양한 포맷의 브랜드 콘텐츠로 폭넓은 연령층 관심과 콘텐츠 참여 증대

- ① (정책 특집) APEC 정상회의, 광복 80주년,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계기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정책 기대감 확산
- ② (정책 토크쇼) 어려운 정책을 토크로 풀어내는 콘텐츠(B보도 등) 지속
- ③ (리얼 현장) 이공계 연구실 소개(구해줄랩), 이공계 도전·열정 다큐(나의선택 이공계), 인터뷰 등 생생한 연구 현장을 담은 콘텐츠로 정책 효과와 공감을 확산



2 민간·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친근한 정책 메시지 확산과 정책 관심 유도

- ① (삼프로TV) 대표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기관장이 직접 출연하여 AI 3대 강국 실현 비전과 실행 방안 등 정책 추진 의지 확산
- ② (인플루언서 협업)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콘텐츠의 도달률을 증대하고, 정책 메시지의 이해와 수용성을 향상

* 개그맨 남희석(전국과학자랑), 외국인 방송인 프셰르&로빈(아임프롬사이언스)



③ 정책 현장의 메시지를 신속하고 친근하게 확산하여 정책 접근성 제고

- ① (보다 빠르게) 기관장의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 정책 의지와 방향을 담은 정책 현장 콘텐츠로, 국민들의 정책 이해·공감 확산
 - (기관장 역할 확대) 기관장이 직접 출연(후니버스), 작성하는 SNS 콘텐츠 등으로 기관장의 정책 현장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
 - (카드뉴스)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주5회 내외)
- ② (보다 쉽게) 국민들의 관심과 주요 정책·성과를 국민의 눈높이 맞춰 쉽게 설명하는 고객 친화형 콘텐츠로 정보 접근성 향상

			
기관장 쇼츠	카드뉴스	정책 설명(국정과제)	광고 영상(AI 3대 강국 실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수요자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지표로 개선한 점은 인정되나 현재 한 가지 지표이므로 지표의 세분화 등 다각화 검토 필요
- ☞ 다양한 관심과 반응을 반영하여 지표 구분, 홍보단계 지표화 등
- 전통적 방식의 홍보를 벗어난 온라인 홍보의 시대에 맞는 역할 강화
- ☞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방식의 트렌드를 늦지 않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채널 활용 업무의 체계화 노력도 병행 제안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및 적절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부처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사 활동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연계하여 효율화하고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제안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 보유하고 있는 SNS 채널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추진정책과 뉴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025 과기정통부 디지털 소통계획' 수립 - 전년도 평가의견을 반영하고자 수요자 관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신규로 설정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대국민 디지털 소통 효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수요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댓글과 호응 건수 등 시청자 반응지표를 설정하여 전년도의 도달(조회) 수보다 한 단계 진전한 결과지표로 개선한 점이 우수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총 11개 계획과제를 대부분 일정에 맞게 이행하였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 홍보 콘텐츠 발굴·조정(정책수립), 이용자 반응과 상호작용 모니터링(집행), 정책 키워드별 언급량 및 긍부정 분석(모니터링), 우수 캠페인 공유 및 협업 콘텐츠 기획·발굴(환류) 등 체계적인 업무 추진 노력을 기울임 -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정책 및 성과를 다각도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 자체 정책 서포터즈 기자단을 대상으로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민간 주도의 정책 소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 - 전 부처 온라인대변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임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 대국민 디지털 소통 효과를 지표로 개선(신규)하였고, 댓글(60%)과 좋아요(40%)로 구분하여 목표치의 108%를 달성하였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정책 특집, 정책 토크쇼, 리얼 현장 등 다양한 포맷의 브랜드 콘텐츠로 대국민 관심을 이끌었으며 인플루언서와의 협업과 기관장이 직접 출연하는 콘텐츠 등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제고함 - 이러한 반응은 국민들의 댓글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음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과지표)** 부내 직원의 역량수준 제고 및 직장 만족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실적 상승
- **(인재개발 만족도 및 역량수준 지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인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반영해 교육 만족도 및 역량수준 지수 상승
※ '22년(166.9) → '23년(168.5) → '24년(168.4) → '25년(170.6) / 목표 대비 달성도(101.0%)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만족도)** 동호회 활동 지원, 사무환경 개선, 직원복지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직원 만족도 상승
※ '22년(84.7) → '23년(80.3) → '24년(82.7) → '25년(82.9) / 목표 대비 달성도(100.1%)
- **(소통활동 신규 추진)** 직원 사기진작, 부서 간 소통 촉진 등을 위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신규 추진

우 수 사 례

- ◇ 전 직원 격려 다과행사(11.17)
 - 국정자원 화재('25.9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품을 다량 구매 후 국정자원 화재 대응, 조직 개편, 국정감사 현안 대응 등에 매진한 직원 격려 다과 행사 추진
- ◇ 부서 간 합동 체육대회(11~12월)
 - 직원의 건강증진 및 부서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부서 합동 체육대회 추진
※ 각 부서별 자율적으로 종목, 일정, 참여부서 등을 선택해 체육활동을 실시
- ◇ 2025년 노사협의회(12.15)
 - 부총리, 소속기관장 등과 노동조합원이 참여해 인사, 복무, 복지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나 평가 시점에 추진되는 과제들이 있어 일정 준수율과 근거자료 제출에 영향을 미치고, 매년 부서 업무 수행에도 부담을 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차년도 계획 수립 시 상시업무의 경우 추진 일정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

- ‘역량수준 지수’로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객관성 제고 노력과 함께 전년도 평가결과 의견에 대한 개선사항 설명 보완 필요

☞ 개선 노력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서술 제안(설문 항목 개선내용 비교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성상 새로운 정책이나 아젠다 추진이 아닌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에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고려한 쇄신 노력으로 관성을 극복해갈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의 적극성과 도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원 전문성 강화’라는 최종 목표를 상기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인재개발계획, 민간위탁교육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주요계획 등을 적시에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인재개발 만족도 및 역량수준 지수의 경우 직접적인 역량강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라기 보다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조사이므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 전년 대비 설문항목을 개선하는 노력은 있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총 20개 계획과제를 대부분 일정에 맞게 이행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과제들이 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인재개발계획, 민간위탁교육계획 수립 시 부내 직원들의 만족도 및 수요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점이 우수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음 - 25.12월에 시행한 과제의 근거자료 제출은 다소 지연되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 두 가지 지표 모두 100%를 달성하였음 - 다만, 전년대비 개선사항, 산출방법, 데이터 등에 대한 설명은 보완하여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구성원의 역량개발,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함 - 직무 전문성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접목 필요
4. 가점	협업	불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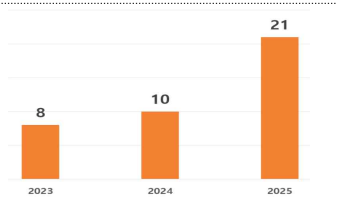
- (공직기강 확립)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위·품위훼손 행위를 엄중 처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성숙한 공직문화 도약 기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포항가속기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등 기관장 및 직원 비위행위 적발·처분
 - 본부·소속·산하기관 대상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태·보안관리 부실 등 기강해이 발생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실시
 - 설 명절(1.20.~2.2.), 대통령 선거(5.12.~5.16.), 하계휴가/을지훈련(8.18.~8.29.), 추석 명절(9.29.~10.12.),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10.22.~12.31.)
- (반부패·청렴정책) 기관장 주재 회의 등 청렴 활동*등을 통한 기관 고유 업무(우편, 전파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청렴 환경 조성
 - (청렴활동) '24년도 청렴도 평가 간담회 개최, 2025년도 반부패 청렴 계획 수립, 반부패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 추진 등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7.28.), 공공재정 환수 운영실태 점검(3회), 타 기관과의 교류(3회)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추진
- (제도 홍보) 실지 감사 현장을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의 홍보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홍보 강화
 - 감사장 입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제도 안내문 부착, 문답 등 과정에서 제도 활용 기회 적극적 고지 등 홍보 수단 다양화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2건)을 지원하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비공식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내실화
 - 최초 신청 시 컨설팅 범위가 넓은 경우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위조사 및 조치)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청원24, 부정비리신고센터, 감사원 제보 등 다양한 신고처 운영 및 비위행위 조사 엄중 처벌

- 우리부에 신고되는 모든 소극행정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민원 등 응대·처리 과정에서의 업무해태 행위 예방 추진

우 수 사 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조속한 조사·처리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되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처리를 통해 전년도 대비 신고사건 처리(조사 결과 권익위 회신) 건수 2배 이상(10건→21건) 증가



- (감사원 감사 지원) 기관 정기감사(본부, 우본), 성과감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을 통해 개선책 발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지원

- 불합리한 법령, 규정, 관행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원하여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력 확보

- (소통 강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데이터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공유 등을 위해 감사정보공유시스템(AIS) 활용*

- 공지사항 SMS 발송, 팝업창, 민원처리 현황 등 시스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이용자 편의 기능 구현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정보 공유의 효과 극대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기본적인 직무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감사와 관련한 활동이 대부분 수동적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개발행정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high risk, high return”을 전제로 혁신적인 연구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의 감사 원리와 방향을 정립

- ☞ 감사원, 국회 등이 요구하는 방향을 참조하되 최선단의 개발행정, 혁신 행정을 펼쳐야 할 부처이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감사 활동 외에 부처의 업무, 관련자(특히, 연구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감사의 방향이나 원칙, 기법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이 있으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사행정(특히 개발행정 차원에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과기부 특색을 반영한 활동이 미흡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지표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그 활동도 그리 적극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추진일정에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실지 감사 현장 사전컨설팅 등의 노력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잘 정리되고, 뛰어나 활동이라기보다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기관장 주재 회의 등 청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잘 유도한 측면이 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목표치는 100% 이상식 달성하였으나 지표와 목표치의 성격을 볼 때 100% 달성은 처음부터 무난하게 이뤄질 수 이 있는 성격의 것들이어서 특별히 다른 추진과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실시, 실지 감사현장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홍보는 적정한 효과를 발휘했거나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4. 가점	협업	인정	협업과 정책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유관단체와의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관리 효율화를 위한 감사정보공유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 강화

-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른 '26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 **안전한국훈련**(10.31.) 실시, **해빙기**, **여름철** 및 **겨울철** 등 시기별 재난대비 대책 수립·시행(3, 6, 11월), **집중안전점검**(4~6월) 추진 등
- 태풍, 화재, 폭발 등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속·산하기관 취약 시설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
-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재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단시간에 해소**하기 위해 수습·복구 훈련 등 **현장대응 위주의 안전한국훈련** 실시
-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추진**
- 2025년 재난관리평가 및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

- 중대재해 예방현황 현장점검 추진계획 수립(1월), 본부 및 소속기관 중대 재해 관련 업무공유 회의(2월, 12월), **소속 및 산하기관 중대재해 예방현황 현장점검**(50개 기관),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6월, 12월)
-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 협의회(9월)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 및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 예방능력 제고

○ 비상대비 태세 강화

- **국가비상상황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연간 총무계획 수립 및 을지 연습 등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점검 활동** 추진

※ ①동원자원조사(2~3월) 및 비축물자관리실태 점검(5~6월), ②'25 총무기본계획(4월) 및 집행계획(7월) 수립 ③ 총무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 을지연습(8월) 및 소속·산하기관 을지연습 서면평가(9~11월) 추진

○ 보안관리 역량 강화 및 테러대응 대비태세 확립

- **자유화통합 집행계획 수립**(5월), **국가중요시설*** 및 **소속·산하기관****

보안점검(1~11월)을 통한 보안관리 역량 강화,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점검(4~9월) 실시로 테러대응 대비태세 확립

* (국가중요시설) 4개 시설 ** (소속산하기관) 23개 기관 ***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2개, 과학관 6개

- 산하 공공기관 보안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감사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보안사고 예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재난안전법, 중대재해법 등 과학기술부 소관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나름대로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소관업무 특유의 재난이나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이 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유의 업무에 적절한 중대재해, 보안테러 등에 대한 대비계획 및 관련 업무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기본적인 계획 및 추진 업무에 대한 계획은 보통임. 다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등에 과학기술부의 특성이 더 반영된 내용들이 확대되었으면 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지표는 둘 다 본 과제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으나, 과정지표, 정성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체감 정도는 매우 낮음. 또한 지표 자체는 정성지표인데, 측정산식은 행안부 평가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이라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과제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보통이며,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소속 산하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점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행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책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행안부와 현장 등과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을 수행하였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낮음	지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와 성과측정의 적극성과 적절성은 적극성은 높지 않음 ※ 성과지표는 본질적으로 정성적인 지표이고, 목표치로 행안부의 재난관리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면, 그냥 이 과제의 경우 행안부 평가로 갈음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줄이는 것임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추진 자체는 절차와 시기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으며, 정책영향 역시 특별히 큰 사고가 발생했거나 테러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가점	협업	인정	행안부와와의 협업 내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에는 산하기관(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에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협력촉진법 제정) 범부처 추진체계, 국제협력 R&D 사업 지원특례, 연구안보 체계 등을 담은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마련(11.3. 의원입법 발의)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TF회의, 연구자 간담회, 과학기술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소통 다수 추진
- (글로벌 연구안보) 美 민감국가 대응과정에서 우리 연구안보 기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즉시 정부 대응체계 점검·확립 및 대외 협력 착수
 -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책임관 지정(과기정통부 소관 44개 기관 부기관장급) 및 정례협의체 출범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책임·이행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과기정통부-외교부 협력채널 구축, 해외센터 연계·협력 강화, 과학기술 외교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거점공관 현지 지원 강화
 - 외교부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K-Science&Technology 글로벌포럼 공동 개최(12.9), 과기외교인력양성 예산 확대 등 부처 간 협력 활성화

우 수 사 례 K-S&T 글로벌포럼 개최

- ◇ (개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정부, 주한공관,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의 장
- ◇ (일시/참석자) '25.12.9.(화) / 부총리, 외교부 2차관, 과방위 국회의원, 주한공관 92명, 주재관, 연구기관, 연구자 등 190여명(49개 국가 참석)



- (다자협력 기획) 환태평양 지역 다자연구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자 의견청취, 외국정부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26~'32) 착수 준비
- (국제협력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핵심 R&D 사업(G-HUB 사업) 적정성 재검토심사 통과를 통해 사업 안정성 확보 및 우수 연구성과 지속 창출

우 수 사 례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주요성과

- ◇ (KAIST-MIT) 기계화학적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 네이처 Nanotechnology紙 논문 게재('25.4월)
- ◇ (서울대-스탠포드) 촉매 동역학 규명을 위한 통합적 접근 : 오페란도 기술, 이론, 인공지능의 연결 : ACS Nano紙 논문 게재('25.10월)



- (통상협상) 다수의 과학기술·ICT 통상의제 상시 대응 및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추진

※ 한미 비관세 분야 협상 대응, 영국 FTA 개선, 태국 CEPA 제정, 말레이시아 FTA 개정, 디지털통상 협상 타결

- (해외진출 지원) 해외IT지원센터, KIC 등 현지 거점을 통한 국내 ICT 기업 해외 수출 프로그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추진 등으로 9,115만불 수출 성과 창출 및 185만불 공급계약 체결

우 수 사 례 해외진출 주요 성과

- ◇ Dubai AI Festival('25.4.) 내 한국관 설치
- ◇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25.9.)와 연계한 피칭 대회 수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학기술외교 활동 성과라는 지표의 구체 내용은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활동으로 이해됨. 기반 구축 활동의 건수가 현재로서는 중요하나 몇 년 이내에는 건수보다 그러한 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정부-외교관-연구자 간 네트워킹과 전 권역 센터 연계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소통의 기회를 늘린 점은 주목할만하나, 공개 행사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공식 초청자(발표자 등) 이외에도 많은 소통 대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 세부 사업에 대한 계획별 성과는 과기국제협력촉진법 제정 및 핵심 R&D 사업(GHUB) 안정화(적정성재검토 심사 통과), 통상 협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편이나 상위목표 및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체계화 노력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학기술외교 활동 성과라는 지표의 명칭은 실제 해당 과가 진행한 과기외교활동에 대한 성과로 이해되는 혼선이 있어 과기외교 역량 기반 강화 활동 등의 형태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과기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각종 연구 네트워크 등의 협력 활성화 계획을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과학기술외교 활동 성과라는 지표는 내용은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활동이나 명칭은 실제 과기외교활동에 대한 성과로 이해되는 혼란이 있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기반 구축 활동의 건수가 현재 중요하나 몇 년 이내에는 건수보다 그러한 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총 35개의 계획 과제가 모두 정상 추진되어 100% 일정이 준수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특히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제정안 발의 등의 정책반영 성과가 돋보임.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정부-외교관-연구자 간 네트워킹과 전 권역 센터 연계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소통을 늘린 점은 주목할만하나, 실제 해당 플랫폼에서의 소통 대상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 향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체계화 등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과기외교 활동이라는 지표의 명칭과 내용의 적절성은 보완이 필요하나 해당 새로운 지표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성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고, 기존부터 해오던 통상협상 대응실직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은 올해 정책환경상 당연히 대응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도전성의 결과라기 보다는 성실한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성과지표 목표의 달성도는 100%가 넘어 높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세부 사업에 대한 계획별 성과는 과기국제협력촉진법 제정 및 핵심 R&D 사업(GHUB) 안정화(적정성재검토 심사 통과), 통상협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편이나 상위목표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체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4. 가점	협업	인정	- 외교부와외의 정책협의회 개최, 과기외교아카데미 참여, 공동 글로벌 포럼 개최 등의 협업 성과 인정 - 국내외 협력주체와 과기 국제협력 소통을 위한 플래그십 행사를 개최한 성과 인정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MOU 체결) 양자 정상회담, 다자기구(2025 APEC) 등을 계기로, 미주 아시아 국가와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발전·강화하는 MOU 체결
 - AI 활용 가속화, 신뢰 기반 기술리더십 구축을 위한 한·미 기술번영 협약을 체결(10.29)하여 첨단기술 분야 한·미 협력 강화
 - 중국(혁신창업, 11.1), 베트남(과학기술협력, 8.11), 싱가포르(디지털 협력, 11.2) 등과 MOU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기반 마련

우 수 사 례 국제행사, 고위급 방한 등 계기로 美·中 등 주요국가와의 MOU 체결

- ◇ 한·미 기술번영(TPD) 협약 체결(10.29)
- ◇ 中 과학기술부와 혁신창업 MOU 체결(11.1)



- (협력 프로그램) 미주아시아 국가와의 정책공유,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개최 및 양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한·일·중 ICT 장관회의(제7차, 4.11),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제14차, 11.27), 한-뉴질랜드(제6차, 8.28), 한-호주(제6차, 12.3) 과기공동위 등을 통해 정책공유 및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방안 모색
 - 협의체 등을 통한 양국 협의에 기반하여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를 '25년 기준 중국, 일본, 캐나다와 6개의 신규 과제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 확대
- * 이외에도 미국(20), 캐나다(3), 브라질(4), 중국(24), 인도(10), 베트남(8), 필리핀(7), 뉴질랜드(3)를 포함하여 총 85개의 공동연구 수행 중

우 수 사 례 협력 프로그램(정부간 협의체, 공동연구) 지속·확대

- ◇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개최('25.4)
- ◇ 단가 1억원 이상 공동연구 '25년도 신규과제 추진



- (신흥국 협력) 베트남 등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과의 협력 거점 및 기반 확대하여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8.11) 공동연구, 인력 교류, V-KIST, 과기공동위 등 과학기술 협력 논의
 -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거점으로 한-중앙아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 하고, Kaz-AIST(카자흐), 우즈베크 화학연 등 설립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8개 계획의 이행은 17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건 지연된 행사는 상대국의 일정 지연 통보로 차질이 발생함. 예기치 못한 정책 환경 변수는 늘 발생하는 부분이며 지연된 행사는 내년 1월에 즉시 개최하기로 한 만큼 후속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관련 사업 관리 내실화 노력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 협력 의제 발굴,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다양한 실무자, 연구자, 담당자 등과의 현장 의견수렴 노력이 다수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책 소통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관련 내실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음.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 등의 부분에서는 조속한 해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의견수렴 위한 각종 행사가 워낙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및 시간 부담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실제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추후 보완된다면 활동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충실	선도국, 유사입장국, 협력국, 동북아 등의 성격과 유형별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과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미주아시아국가들과의 직접적인 협력 건수, 이러한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반 활동에 대한 건수 그리고 공동연구 추진 건수로 다양화하여 지표를 적절히 설정함. 특히 공동연구는 1억원 이상 규모 건수만 적용하는 등 질 높은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 등의 노력이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18개 계획의 이행은 17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건 지연된 행사는 상대국의 일정 지연 통보로 차질이 발생함. 예기치 못한 정책 환경 변수는 늘 발생하는 부분이며 내년 1월에 즉시 개최하기로 한 만큼 후속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협력의제 발굴,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다양한 실무자, 연구자, 담당자 등과의 현장 의견수렴 노력이 다수 이루어짐. 그러나 관련 협의 및 정책 소통의 결과가 정책 반영으로 이루어진 것인 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 연계성이 추후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설명될 수 있으면 좋겠음.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특히 외부 자문단 등 평가위원에게 정책 소통을 하기 위한 행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지난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보완 노력은 충실히 이루어짐.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모든 지표에 대해 전년도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모두 달성함. 미주아시아라는 지역이 방대한데 향후에는 각 지역별 협력의 목적과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구분한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두고 전략적 국제협력의 의미에 알맞게 고루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음.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 등의 부분에서는 조속한 해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4. 가점	협업	인정	- 유관부처인 산업부, 외교부 등과 함께 한일 과기협력위원회를 재개하는 협업의 성과가 있으며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대응 노력도 타부처 및 민간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감국가 지정 상황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미 에너지부 DUNE 프로젝트 참여 위한 탐색하는 노력을 적극행정의 사례로 인정함.
	사회적 가치	불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완료) HE 준회원국 가입 절차 완료로 완전하게 국내 연구자의 HE 과제 참여 및 연구비 수주 가능
 -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협정 서명(7.17) 및 준회원국 재정기여금 납부 완료(10.22)
- 국내 연구자는 EU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으로 HE 프로그램 Pillar II 분야별(보건, 양자, 우주, 농업 등) 과제 공모 신청('25년 32건* 접수 中)
 - * 호라이즌 유럽 공모 접수를 위한 사전기획 과제 수요 증가('24년 48건 → '25년 68건(약 42%↑))
- (HE 참여 활성화 지원) 국내 연구자의 HE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 사전기획 지원, EU 국가/연구자와의 접점 강화 추진
 - HE 설명회 개최(총 36회, 약 1,900명 참석), 사전 기획연구(15건) 지원 및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5회), 한-EU R&I Day 개최 등 연구자 참여 촉진
 - *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HE Pillar II 클러스터(분야)별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AI, 4.1~4/양자, 4.9~10/첨단바이오, 7.1~4/에너지, 10.14~17/생물다양성, 12.1~3)
- (과학기술·ICT 글로벌 협력강화) EU, 독일, 사우디 등 유럽·중동 국가와 고위급 면담, 디지털 협의체 등을 개최하여 기존 협력 공고화 및 신규 협력의제 발굴, 핵심분야 협력 확대 추진
 - 고위급(장·차관급) 면담 6회(EU, 독일, 체코, 사우디 등), 과기공동위 5회(스페인, EU,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디지털 협의체 3회(EU, 독일, 영국) 개최

우 수 사 례

유럽 및 중동 국가와의 과학기술·ICT 글로벌 협력강화

- ◇ (EU)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및 ERC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2.12, 10.31, 장·차관)
- ◇ (스페인) 8년 만에 과기공동위 개최 후 첨단바이오·슈퍼컴퓨팅·스마트 농업 분야 공동연구, 기관 간 MoU 추진 등 과학기술 분야 적극 협력 확대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 간 스마트농업·디지털파밍 협력을 위한 MOU 체결('25.9.29)
- ◇ (영국)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 등 디지털 분야 실무자 정책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및 AI 분야 양국 기업의 상호시장 진출 지원

- (과학기술·ICT ODA 추진) 현지 수요 기반 '26년 무상원조사업 발굴* 및 고위급 초청연수** 등을 개최하여 개도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 강화

* '25년 사업 수 : 37건 / '26년 사업 발굴 수 : 30건 (긴축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사업 수 축소)

** 제10회 글로벌 ICT리더십포럼 개최(11.12, 서울), 8개 초청연수 과정 운영(총 150명)

우 수 사 례 2025년 ODA 사업 주요 성과

- ◇ 국내 선진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비소제거 흡착제(비소 94.9% 제거) 개발 및 정수처리 플랜트 설치 등으로 파키스탄의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26,500명 식수 지원)

* 파키스탄 펀자브 주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처리기술 적용사업('22~'25)

- ◇ 우즈베키스탄 양봉 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거점 연구시설(꿀벌연구센터·분석실·양봉 사료 공장) 구축·운영 및 기술개발(스마트 양봉 AI 모니터링 시스템 등) 지원

*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양봉 생산성과 강건성 증진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22~'25)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정과제에서 강조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 및 발전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과기·ICT 협력 관계는 ODA를 포함하여 그 외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될 수 있는 계획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협력국 일정으로 순연되는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아직 개최 일자가 미정인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제기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관심·인지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차년도에는 관련 설명회, 네트워킹 포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한국의 준회원국 입지를 십분 활용한 EU 지역과의 과기·ICT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과제가 중요함
- 최근 전 세계 ODA 사업 규모가 축소하고 그 효율성, 효과성의 제고 과제가 부상하고 있는 등의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도 보다 다양한 협력 활동 형태를 고려하고 특히 ODA 사업 관련 성과 지표는 수정·보완 및 판단 근거의 확대 등의 고민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표로 장기적으로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선진 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모두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과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연구와 ODA라는 활동 유형별로 수립함.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추가적인 협력 계획 측면에서는 보다 확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과기 및 ICT 협력 확대 지수, 후속 공동연구 추진 건수, 무상 원조 시행계획 반영 건수 등으로 광범위한 활동 내역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괄적으로 설정함. 그러나 최근 전세계 ODA 사업 규모가 축소하고 그 효율성, 효과성의 제고 과제가 부상하고 있어, 관련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한 성과 지표의 재고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총 14개 계획된 과제 중 13개 과제가 이행되었으며, 지연된 과제가 있지만 완료되었고, 협력국 일정으로 순연된 행사의 경우 아직 개최 일자가 미정인 점은 지속해서 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협력 국가의 주한 대사관 등 면담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ODA 사업의 경우 중점협력국 등 총 28개국에 통합수요조사 서한을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진행함.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진 부분은 주목할 만하며 관련한 정량 평가는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나, 활동의 건수와 범위 측면에서 여타 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정성평가는 보통으로 평가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올해 진행된 소개, 설명회, 네트워킹 포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한국의 준회원국 입지를 심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과제가 중요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높음	모든 지표는 전년도 대비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모두 달성함. 그러나 특히 ODA 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수정·보완 및 판단 근거의 확대 등의 고민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표로 장기적으로는 재고해 보는 것을 제안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우수	올해 최대의 성과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완료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정책의 영향(효과)는 차년도에 더 많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참여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부의 후속 역할과 과제가 중요함. 여타 국가간 협력 기반 조성 노력에 따른 점진적 협력 관계의 진전 성과를 확인함.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4. 가점	협업	인정	- ODA 관련 타(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기 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함 - 구체적으로 시행된 ODA 사업이 지역 수질문제 해결 및 안전한 음용수 공급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인정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과기정통부가 성사시킨 것은 적극행정의 성과로 인정함 - 제11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통해 정책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나 이는 연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협력 강화 기반 마련 활동 이상으로 가점을 받을만한 별도의 노력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PEC KOREA 2025) 2025 APEC 한국 개최 계기로 디지털 혁신, 책임 있는 AI 활용 및 과학기술 인재 교류를 강조하는 정상회의 결과문서* 채택

* APEC 정상 경주 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 (정상회의) 정상회의 계기 첨단 GPU 확보,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MOU 체결 등 과기정통부 성과 총괄

• 한-미 기술번영 MOU, 한-싱가폴 디지털 협력 MOU, 과기정통부-현대자동차그룹-엔비디아 3자 협력 MOU 등

- (과학기술) 신진·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과학기술 인재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인재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 도출

* 공동연구 APEC 과학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5~9월, 6개국 98명), 신진²⁰²⁵ APEC ASPIRE 시상식(8.13, 한국인 수상), 여성^{APEC} 2025 Women in STEM 심포지엄(8.13), 청소년^{APEC} 청소년 STEM 경진대회(8.6~9, 10개국 28명 한국 초청), 젊은 화학자 포럼(4.23~25), 양자과학기술 포럼(10.22), APEC 기후 심포지엄(8.7)

** 과학자 교류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선언문 채택(8.12.)

- (AI·디지털) APEC 최초 디지털·AI 장관회의 개최 및 장관선언문 채택

•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AI 정책 방향 합의

- (국제기구 대응력 및 의제 주도력 강화) OECD, G20, ITU, ASEAN 등 국제기구 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주요 논의 선도 및 국제협력 교류 강화 등 추진

- (OECD) CSTP, DPC 등 정례회의 참석과 의장단 진출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규범 주요 논의를 선도

- (G20) 연구혁신, 디지털경제, AI TF 장관회의('25.9월, 남아공)에 참석하여 글로벌 디지털격차 해소,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참여 확대 강조

- (ITU) ITU-D(개발) 부문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WTDC에서 ITU-D 의장단 진출과 기고문 반영 등 핵심 의제를 관철하고, 기구 운영 및 활동 전반 심의·감독을 위해 이사회 참석

- (ASEAN)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 회의(태국, 1.16~17) 계기, APT 등 역내 디지털 협력 방안 논의
- (HSFP) 사전지원 과제 신규 추진(25년~, 4개 과제), 마스터클래스(11. 3.~7., 제안서 작성 실무워크숍)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등 HFSP 선정을 제고
- (의장단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OECD, ITU, APEC 등 국제기구 작업반에 진출하여 정책 입장 반영 및 국제 동향 파악으로 대응력 강화·논의 주도
- (APEC PPSTI 의장 진출) 한국인 최초로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의장에 회원국 만장일치로 진출
- (OECD AI 협의회 의장 진출) 인공지능 거버넌스 작업반(AIGO) 및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통합 신임 의장 진출로, 국제 인공지능 논의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
- (ITU TDAG 부의장 진출) ITU-D 부문 자문그룹(TDAG)의 부의장 진출을 통해 ITU-D 운영 및 활동에 국익 반영
- (협력사업 추진)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AI·디지털 발전을 종합 지원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KADIF) 등 디지털 분야 협력사업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외생변수로 인한 과제 이행의 지연 사유는 타당하게 이행되나 이러한 변수에 대한 사업 관리의 필요성은 과제의 특성상 지속해서 제기됨.
- 실질적인 국제기구 대응을 위해 사전단계에서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 협의회들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의견 수렴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 수렴활동이 단순한 절차로 끝나지 않고 그 수렴 결과가 대응 의제 마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한 내실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각 국제기구 내 한국의 리더십은 기존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것이 한국의 국정과제와 보다 전략적인 한국의 위상 제고, 영향력 행사 등의 목표와 부합된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연계성을 지도부와 소통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훨씬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APEC 최초의 AI·디지털 분야 장관선언문과 같은 상징성 있는 성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 활동에서 좀 더 가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제기구 활동 참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새로운 플랫폼의 발굴 및 분석 등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앞으로는 지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지표 산출 시 각종 협력 활동 또는 대응 건수를 일률적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활동의 전략성 제고를 위해 각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대응 건수에 대한 무게를 다르게 책정하는 등의 검토와 같은 지표 산출 방식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일부충실	다자외교의 장인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과기·ICT 부문 의제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다만, 각 국제기구 활동 참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새로운 플랫폼의 발굴 및 분석 등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앞으로는 지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단순히 건수 뿐 아니라 다자 활동의 전략성 제고를 위해 각 국제기구 우선순위에 따른 성과의 무게를 다르게 책정하는 등의 검토와 노력이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집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총 16개의 계획된 과제 중 15개 과제가 이행되었으며 이행되지 못한 1건의 과제는 개최 예정국의 일방적인 취소로 차년도 개최로 연기됨. 외생변수로 인한 지연 사유는 타당하게 이행되거나 이러한 변수에 대한 사업관리의 필요성은 과제의 특성상 지속해서 제기됨.
	2-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실질적인 국제기구 대응을 위해 사전단계에서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 협의회들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침. 이러한 의견 수렴활동이 단순한 절차로 끝나지 않고 그 수렴 결과가 대응 의제 마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3. 정책소통의 충실성	충실	국제기구별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자협력을 양자 협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환류 기제 마련 및 예산 증액 달성 등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보완 측면에서 정책소통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성과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완료 보통	모든 지표는 전년도 대비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모두 달성함. 다만 상기한 전략성 제고 등의 목적을 위해 지표 자체의 개선을 통하여 목표설정 및 달성 측면에서의 도전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3-2.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보통	각 국제기구 내 한국의 리더십은 기존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다만, 이것이 한국의 국정 과제와 보다 전략적인 한국의 위상 제고, 영향력 행사 등의 목표와 부합된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연계성을 지도부와 소통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훨씬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APEC 최초의 AI·디지털 분야 장관선언문과 같은 상징성 있는 성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 활동에서 좀 더 가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가점	협업	인정	- APEC 의장국으로서 행사 개최 성공을 위해 타부처와 진행한 협업의 사례를 인정함. - 역내 여성 AI 역량 강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스타트업 지원 등의 목적을 가진 소규모의 개별 활동들을 사회적 가치 성과 차원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인정한다면 의미 있는 효과성과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점을 부여함.
	사회적 가치	인정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불인정	
	규제합리화 및 정책소통	불인정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 - 1-①	○ 새로운 R&D 모델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	○ 높은 목표에 도전하여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재도전형 R&D' 등 실패용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R&D 모델 고민 및 예산 확보 추진 (~'26년 말(예산 확정시기 고려하여 설정))
	○ 진도·연차 점검이 관리 중심 행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실패 용인·성과 중심 지원이라는 점검 취지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	○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진도·연차점검 추진 시 실패 용인·성과 중심 지원이라는 점검취지를 사업 시행계획 등에 명확히 제시(~'26년 3월)
I - 1-②	○ 기초연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장기, 지속 지원이라는 사업철학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 이를 위해 기존 성과의 의미와 지표를 재분석하여, 차기 사업기획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	○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26년도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 마련 예정('26.5월)
	○ 정책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결실에 의존하는 지표보다 올해의 정책적 지향점이 반영된 '과정 중심 지표' 발굴이 병행	○ '26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26.3월)
I - 1-③	○ 국가 원천기술의 정의를 재검토, AI 응용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 필요	○ AI를 통한 핵심분야 구체적 난제임무 및 양자-AI, AI 반도체 등 AI 한계 돌파를 위한 핵심임무를 설정·달성하는 가칭 넥스트 프론티어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 마련 예정('26.上)
	○ AI 전략기술 분야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차년도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과 집중 투자가 시급	○ 과학기술 AI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AI 모델 개발, 전용 GPU(슈퍼컴 6호기), 융합인재 양성 등 약 1,800억원('26예산)을 확보하였으며, - 주도권 선점을 위해 과학기술×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관련 예산을 지속 확보할 계획임(지속)
I - 1-④	○ 해외선도그룹과의 기술격차를	○ 「퀀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동 계획

	매우는 전략,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방안 부족	에 포함된 민·관 국제협력 강화, 국제표준화 선도 등 중점과제 지속 추진('26.1월~) - 주요국 회의체(QDG, MDQ 등) 참여 및 의제 주도 - 양자 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및 글로벌 협력체계 확립 ※ ITU-T, JTC1, JTC3 등 양자 분야 국제표준 기구 활동 지원 확대·강화
	○ 논문·특허 외에 기술진척도, 민간참여, 인력확보 등 성과지표 재설계 필요	○ 기술사업화·이전, 양자 연구인력 양성수*, 국내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운영 실적, 등 성과지표 관리 중 * 3개 양자대학원 수혜인원, 해외연수 훈련인원, 국내연구거점 석박사·포닥 등 포함 ○ 논문·특허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기술개발 목표도 설정하여 달성여부 등 지속 관리
I - 1-⑤	○ K-첨단바이오 성과는 투자 규모보다 글로벌 시장 점유·기업 위상 중심으로 평가하고, 뇌과학·의료기기 등 단기 승산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분야별 국가전략 등 수립(~'26.上) ○ 첨단의료기기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26.1분기) ○ 뇌과학 분야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26.上)
	○ 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규제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범부처 원팀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바이오 분야 범부처(재정·과기·복지·산업·식약 등)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국가 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26.上)
I - 2-①	○ 사회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R&D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산불진화차·해수담수화·해저 재해 감시 등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 재난의 해결책이 되는 핵심기술인지 불확실함.	○ 산불진화차, 해수담수화 등 동 기술은 소방청, 산림청 등의 수요를 받아 개발된 기술로서 추후에도 정부·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 예정
	○ 국민안전 R&D가 일회성 현안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넘어, 예방-대비-대응이 연계된 상시대응형 R&D 플랫폼과	○ 현재의 일회성 현안대응 R&D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재난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10대 기술중심의 연구개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확대 추진

	중장기 예방 투자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I -2-②	○ 현재 5개로 나누어져 있는 주요 실적 성과지표를 재분류하고 통합할 것을 추천함	○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차기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26.4)
	○ 안전성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원자력의 기저부하·경제성 등 타 에너지원 대비 실질적 우위를 명확히 제시하며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	○ 유관기관(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의 경제성, 기저부하로서의 역할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계속)
I -2-③	○ 가속기 구축 공정률 보다는 가속기 운용율(비슷한 해외 가속기와 비교)이 당 과의 성과지표로 적당	○ 대형가속기 운용에 따른 지원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 발굴 추진(~'26.上)
	○ 논문 게재 수 또는 사용시간 등을 넘어선 경제적 효과 수치를 성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 투자 규모 대비 성과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성 지표 제시가 필요	○ 성과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보완을 검토(~'26.上)
I -2-④	○ ITER 사업의 수주 성과를 상용화 단계로의 연결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국내 기업이 ITER 부품·장비의 성공적 조달로 관련 기술들을 확보해 가고 있어, 핵융합 상용화 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One-Team(산학연 전문가) 추진체계 구성·운영을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25.12월)에 반영 * (정책 이행)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27~'36, 1조5천억 규모)' 예타 신청('25.12월) 중
I -3-①	○ 성과지표로 설정된 '누적 창업 기업수'는 과거의 수치가 산입되어 2025년 당해 연도의 정책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당해 연도의 정책 집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주요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등 성과지표를 다분화하여 관리하겠음.
	○ 딥테크 창업기업 수 이외의 '연구성과혁신정책'에 정책적 기여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연간 신규 창업 수' 또는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단기 성과를 반영한 지표 발굴이 시급	

I-3-②	○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전국 단위와 비교하여 지역별 추진이 갖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지역 연구산업의 효과성 점검('26.6)
	○ 부실 기업 방지 및 우수 기업 발굴을 통한 성과 창출 노력 필요	○ 부실기업 방지*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법 등 제도 마련 및 우수 기업 육성방안 수립('26.2)을 통해 제도 내실화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신설, 현장조사 강화 등
I-3-③	○ 지역적 균형성장보다는 실질적 기술역량의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역 자율 R&D 지원*을 통해 지역이 실질적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지역 자율R&D 지원 착수 '26.7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강점 기술분야에 대한 지역 앵커기관 중심의 R&D 지원
	○ 기술개발-상용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혁신 및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의 연구개발특구 新실증특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연구개발특구 개정안 발의, ~'26년)
I-3-④	○ 출연연 특화 임무 재정립을 통해 중복 연구개발을 최소화 할 필요	○ 수요 반영 연구주제 설정 출연연별 임무를 부여하는 산-연-정 협의체 신설·운영('26.上~)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의 추진 속도·범위·재원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필요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포함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수립('25.12.)
I-4-①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재외 과학자 유치를 균형 있게 강화해 국내 인력 기반을 확충할 필요	○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을 토대로 국내 우수인력 양성(해외유출 방지) 및 해외인재유치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 수립(~26년)
I-4-②	○ 과학영재 관련 성과가 학술 성과(KCI 8건) 외에도 있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여 성과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후원 유치, 고경력과학기술인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 ASESAN+3 과학영재캠프 등을 통해 과학영재들에게 국제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
I-4-③	○ 올해 청소년과학활동지원의 참여 규모가 국내 102명, 국외 17명 수준인데, 청소년 과학활동지원의 과학문화적	○ 청소년의 과학기술 진로관심도 및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과학탐구 활동을 운영하는 등 지원규모 확대 예정 * 동아리, 대회, 진로체험 등 300명(팀) 이상 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 대상 및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원
I-4-④	990개 과정, 43만 명 이수, 341개 콘텐츠 개발 등 양적 성과는 매우 크나, 형식적 교육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될 수 있어 교육의 질 제고 및 현장 변화로의 연계 성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	연구실책임자 중심의 랩미팅 안전교육 활성화, 사고사례 교육강화 등을 연구실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하여 교육의 질 제고 추진(~'26.12월)
II-1-①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 지표 발굴 필요	주요국,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등과 교류·소통을 통한 글로벌 AI 협력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 발굴 및 점검 추진('26.1분기~)
	결과지표 위주의 지표 발굴 필요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26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추진('26.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점)
II-1-②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 정책추진 필요	- 다양한 AI 위험에 대응하고 건전한 AI 발전을 위해 “국가 AI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안)*” 마련('26.2월) * (3대 추진전략) ①국민 일상을 지키는 AI안전, ②산업발전을 지원하는 AI안전 ③세계를 선도하는 AI안전으로 3대 추진전략 9대 핵심과제 발표 -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오류 없는 썬 AI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중('25.12.22~'26.1.21) - 캠페인을 통해 오류사례 개선 권고안을 작성하여 AI 기업에 통보('26. 3월)
	국민관심도가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내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해외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 국제협력 추진 필요	- 미국, 일본, 영국 등 10개국과의 글로벌 AI 안전성 기준 마련을 위해 협력중('26년 2회 추진) - 국내 AI모델을 대상으로 최소 2개 모델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 추진('26년 2회)
II-1-③	- 의료 AI 확산 과제 관련 정량적 편익 지표 발굴 필요 - 향후 범부처 협업체계 환류시스템 마련 필요	- 동 사업 성과의 국민 체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겠음('26년 내) * (현재) 의료진·구급대원 등 전문가 만족도 → (개선) 환자를 고려한 지표로 개선

		○ 국가AI전략위원회 주관으로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등 범부처 및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기본의료TF를 발족('25.11월)·운영 중임에 따라, - 의료AI 아젠다 논의 시 적극 참여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음('26년 내) ※ (범부처 협력 경과) - 클라우드 기반 병원시스템(P-HIS) 구축 사업('17~'21년): 과기정통부-복지부 다부처 예타 사업으로 추진 - AI앰블런스 개발 실증('19~'25년): 과기정통부-소방청-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지자체(강원·충북·전남) 협업 기반 시스템 개발 실증
II-1-④	○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성과지표가 단순 Top-tier 학술대회만으로 제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하겠음('26.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점)
	○ 인공지능 지역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적합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발굴이 필요함	○ AI, 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지역생태계 확산 성과측정 신규 지표 발굴하겠음('26.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점)
	○ 일부 사업에 대해 타 부서와의 유사 중복성 배제를 위한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사 사업추진 부서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정책목표·대상·기능·성과 등 중복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II-2-①	○ 대국민 수혜 성과지표 및 ROI 성과관리체계 개발 필요 → Output 관점(추진실적)이 아닌 Outcome 관점(대국민 편익)에서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성과 지표, 성과 관리 체계 등에 있어, GPU 사용자 만족도 등 대국민 편익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추진('26년 下)
II-2-②	○ 성과지표 개선 ☞ AI허브 서비스 만족도의 비중을 좀 더 낮추고, AI허브 데이터 만족도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형태로 비중의 조정이 필요 ☞ 서비스 만족도나 데이터 만족도도 좋지만, 실제 사용 건수나 이를 통한 서비스 개발 건수와 같은 실질적 성과지표 추가 필요	○ '26년도 성과지표 수립 시 개선·반영('26.1분기)
	○ 데이터 세분화	
		○ 제2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AGI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버티컬 AI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며, 새로 만들어야 하는 데이터이나, 아직 데이터화되지 못한 데이터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시 데이터 유형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영('26.상반기)
	○ 신규 플랫폼의 기술·운영 안정성 확보 ☞ 시범운영 기간 확장 또는 단계적 오픈(Closed Beta → Public Beta → 정규오픈) 적용 ☞ 리더보드 평가데이터의 버전 관리 체계 및 기록관리 강화	○ '26년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 구축·운영계획, '26년 리더보드 운영 계획 등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조치완료)
II-2-③	○ 성과지표를 다양한 사업을 균형있게 고려한 복합지표로 설계 고려 필요	○ AI 바우처 지원 사업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데이터·클라우드·바우처 각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 개선('26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하여 한국형 차세대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 필요	○ 국가데이터통합플랫폼(One-윈도우)의 고도화 및 확장을 통해 민간·공공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 예정 (~'26.12월)
II-2-④	○ 신규지표 및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등 지표 개발 노력 필요	○ 관리과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검토('26.상반기)
III-1-①	○ 정책연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단순 반영률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법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 영향력이 큰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전략별 대응과제 및 성과지표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필요	○ 정책연구 중 실효성이 큰 성과를 구분하여 전략별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논의 (~'26.6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의 운영 성과가 범부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소통의 성과를 구체화할 필요	○ AI전략위 등의 운영성과가 범부처의 정책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의 성과 구체화 및 향상 도모(연중)

III-1-②	○ 과제를 세부 사업 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융합 서비스의 정의와 확산 전략을 재정의하고 각 세부사업을 그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위사업으로 구성 필요. 세부사업 간 공통 산출물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 고려.	○ 동 과제는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확산하여 공공·산업 전반의 AX·DX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향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동 과제에서 다루는 융합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 자문·피드백받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개선·보완(~'26.6월)
	○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도를 '사업 만족도(인식지표)-해외 진출 기업 수(성과지표)-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여부(산출/이행지표)'로 단일 복합지표로 구성할 경우, 각 하위지표의 측정척도와 성격이 상이하여 산식 통합 시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육성도 평가를 단일 점수화에 앞서 하위지표를 동일 척도로 표준화하고, 방안 수립 여부는 단순 0/1이 아닌 실행가능성을 반영한 성숙도(단계) 지표 전환을 고려하고, 필요 시 성과·체감·제도기반으로 지표 재설계	○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보완(~'26.6월) - 블록체인 기술 수준과 산업 성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성과지표)를 신규로 마련 - 또한,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수요자 만족도(인식지표)를 병행 측정하여 정책 성과의 질적 향상 도모
III-1-③	○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AI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에 대해 지표 수립·관리 필요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과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발굴 논의(~'26.1분기)
	○ 현장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우선 순위 매트릭스(영향도·시급성 분석) 운영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반영 프로세스 수립 예정(~'26.1분기)
	○ RPKI·도메인 확산·원본요구법령 정비 등 수치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중간성과(KPI) 모델 도입 ○ 중·장기 효과 중심 제도 개선 사업 정책성과의 가시성 향상을 위해 성과 스토리라인(가시화	○ RPKI·도메인 확산의 경우 민간의 의사에 따라 성과가 산출되는 측면이 있어 정부의 도입 장려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성과 창출 예정(연중)

	자료) 구축	
Ⅲ-1-④	○ AI 관련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 발굴 필요	○ AI 관련 업무의 확대 추세와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AI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성과지표 발굴 추진('26.상반기)
	○ 법·제도 개정 추진 시,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필요	○ 향후 법·제도 개정 추진 시, 체계적인 일정 관리와 사전 리스크 대응을 통해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음(수시)
	○ 다양한 현장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민간 주도의 정책제언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민·관 합동 '디지털포용 얼라이언스' 출범('26.상반기)
Ⅲ-2-①	○ AI교육과 관련하여 학부 교육, 석박사 교육, 기업 연계형 교육, 전국민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정 방향성과 맞춘 정책 조정과 연계하여 집중 필요	○ AI교육을 정책 조정 방향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26.12월)
	○ 기업 연계 프로젝트 및 현장 실습 경험을 고려한 대학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형 인재 양성 필요	○ 대학과 기업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음(~'26.12월)
Ⅲ-2-②	○ 사업 유형별 핵심성과지표를 재정 의하고, 실적 기반 지표 및 중장기 성과 연계 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핵심성과지표가 실적에 기반하도록 개선하고, 중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검토하겠음(~'26.12월)
	○ 자문단·평가위원을 활용한 상시적 피드백 수렴 등을 통한 정책 추진 전·중·후 단계별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의견 반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환류 체계 보완이 필요함	○ 정책추진 관련 의견수렴 및 의견을 관리·공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음(~'26.12월)
Ⅲ-2-③	○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차별	○ AI, XR 등 시장 환경 변화 및 중장기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목

	목표·과제 간 연계 논리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처·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실증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정책 확산 및 파급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겠음(~'26.12월) ○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자체·공공기관 참여 및 협업을 확대하고, 질병·생활·안전 분야 등 실증 사례 발굴 지원을 강화하겠음(~'26.12월)
Ⅲ-3-①	○ 제조 AX 활성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 제조 AX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I에 들어갈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는 제조 AX 활성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수급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함	○ 제조AX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는 AI전략위 민간 위원과 함께 제조 데이터 확보·공유 방안 등을 포함한 제조 AI 전략 수립 예정('26.上)
	○ 현장 의견수렴의 정책 반영률 제고 ☞ 기업 의견을 단순 수렴에서 나아가, 정책조정·지원사업 설계에 자동 연계되는 Issue-to-Policy 체계 도입	○ 산업 현장의 의견이 피지컬 AI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예정('26.上)
	○ 신규 지표의 측정 타당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표 고도화 ☞ 신규 지표(만족도·지원 건수·ICT 수출액)에 대해, 지표 안정성 검증, 측정 산식 개선, 장기 추세관리 체계 도입 필요	○ 신규 지표의 적정성, 안정성 및 측정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표 고도화('26.上)
Ⅲ-3-②	○ 정책과제 간 목표·성과 연계도를 제시하고, 과제 사이에 시너지 창출 구조를 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간 목표·성과 연계도 및 과제 사이 시너지 창출 구조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음('26.하반기)
	○ 성과확산이 가능한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체감 중심의 정책효과 지표와 실증 사례를 확대·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R&D 성과 확산을 위해 관련 민·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연계 강화 및 실증 사례 확대('26.5월)
Ⅲ-3-③	○ 산업성장, 사업화, 고용 창출 등 정량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정성·정량 지표 간 균형있는	○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정량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26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추진('26.3월)

	성과체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음	
	○ ICT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소통 방안 확대 필요	○ 설명회·간담회·현장방문 등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의견교류·소통 확대 및 정책의견 반영 추진
Ⅲ-4-①	○ 지자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공 서비스 발굴 및 추진 필요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청회 등 추진)	○ 현재, 지방우정청별 우체국 공모 등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음
	○ 공공성, 파급성, 경제성, 고유성을 고려하여 현재 지엽적인 내용과 제한적 목표치보다는 대표적 성과지표 도출 필요(현재 도출된 공공사업 신규 발굴 8개 과제를 고려하여 설정)	○ '26년부터 지역 우체국 공모 시, 지자체 등 해당 지역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겠음
	○ 발굴 건 수 중심의 성과지표 대신 '25년 발굴한 8개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겠음	
Ⅲ-4-②	○ 등기우편 배달 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투입 자원 대비 산출되는 정량적 편익 (인건비·유류비 절감액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집배원 업무량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 관련 제도 개선 시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객관화된 증명 자료를 마련하여 타당성 확보 예정(연중)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와 같은 성공적 공익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표준화된 협력 매뉴얼을 구축하고, 수혜자 발굴 성과를 사회적 가치 기여 금액으로 환산하는 고도화된 지표 도입이 요구됨	○ 부처 협력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표준화('26년) 하고, 연구용역 수행('27년)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환산 지표 도입 검토 예정
Ⅲ-4-③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Ⅲ-4-④	○ 각 추진 과제별로 투입 예산 대비 산출되는 정량적 기대 효과(공익보험 수혜자 증가율, 민원 감소율 등)를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과제별 계획 등 수립 시 투입 예산 대비 산출되는 정량적 기대 효과 설정 검토('26. 상반기)
	○ 민간 보험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 소외계층 보험 가입 지원 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공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강화방안을 마련('26. 4월)

	공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실적을 정례적으로 보고서에 반영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입증해야 함	하고, 실손청구 간소화 추진에 따른 국민 체감 성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성과를 정례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에 반영하여 공공보험 역할을 입증(연중)
IV-1-①	○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 「Hyper AI네트워크 전략」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상정·발표 완료('25.12.18) ○ AI-RAN 핵심기술 확보 위한 한-미 공동 연구 신규사업 착수 예정('26~'30, 455억원 규모) ○ 「Pre-6G」 대규모 글로벌 시연행사 개최로 6G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추진('26.12월)
	○ 유지보수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 필요	○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26.7.18.)하기로 한 바, 지자체를 통해 관리주체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관리자 교육은 지속 추진 예정
IV-1-②	○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 이행력 확보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장애 재발 방지 체계 마련 필요 ○ 국가 위기 대응 인프라(국지망) 투자 확대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의 현실화 및 전용회선 효율화 추진 필요	○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업자의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여부 검토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음(연중) ○ 적정 예산 확보 노력 및 데이터 회선 확대 등을 통한 전용회선 효율화를 추진하겠음(연중)
IV-1-③	○ 실효성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보안 대책 재정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고 빈발 분야(통신, 금융, 공공)에 대한 강도 높은 이행 점검과 공급망 보안 가이드 라인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함	○ 실효성 있는 ISMS 인증체계 마련 ※ 통신 데이터센터 등 중요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 마련, 사고기업 재발 방지를 위한 심사 인력 확대 및 사후관리 마야행 기업 인증취소 등 실시 ○ 사고 발생 기업 중 재발방지대책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26.하) ○ SW 공급망 보안 강화 로드맵 발표('26.1분기) 및 세부 추진과제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공급망 보안 강화 추진

		※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개선하여 사례 중심 실무 가이드라인 2.0 개발·보급('26~)
	○ 민간 성과의 단순 편승 지양 및 실질적 지원 강화: 민간의 자생적 성과를 부처의 실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함	○ 커리큘럼 재정비, 최신인프라 구축 등 교육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화이트해커 양성체계 개선 추진('26.6월)
	○ 양적 성과를 넘어선 질적 대응 역량 강화: 화이트해커 양성 대회 우승 등 홍보성 성과보다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의 배치와 처우 개선 등 실질적 보호 역량 확충에 집중해야 함	○ 기업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화이트해커 양성체계 마련을 통해 실무형 정보보호 인력을 배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26.6월)
IV-1-④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보안관리 체계 법제화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점검, 점검결과 공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안 발의 완료('25.12.16) 및 후속 시행령 마련 예정('26)
	○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 성과 추적 관리	○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을 통해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동향 수집 및 현지 비즈니스 미팅을 지속 지원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수출 성과 제고 추진 中 * 중동·아프리카(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코스타리카), 동남아(인도네시아)
IV-1-⑤	○보여주기식 점검 대신 평시에 예고 없이 수행하는 '불시 실전 모의침투' 체계화 필요	○ 통신사 등 대상 불시* 블라인드 침투 테스트 보안점검 완료('25.12) 및 향후 버그바운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26.12) * 모의침투 대상, 범위 등을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 ※ (참고) 현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권한이 없는 비인가 모의침투 등 불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사고 시 부처간 중복 자료요구를 통폐합하고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	○ 안보실 주도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한 조사 과정의 체계화 협조('26년)

IV-2-①	○ (필요시) Full MVNO 등 알뜰폰을 포함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 (필요시) Full MVNO 등 알뜰폰을 포함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음(~'26)
IV-2-②	○ 알뜰폰 정책의 효과가 5G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정책 필요	○ 5G 시장에서도 소비자 편익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도매대가 규제체계 전환(사전→사후) 이후 첫 도매대가 협상 지원(~'26.3월)
	○ K-FAST를 통한 K-OTT 플랫폼 확보 및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이 제시될 필요	○ 차세대 OTT로 급성장하고 있는 FAST를 AI 더빙 등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26.11월) ○ AI 기반 슷품 자동 제작, AI 기반 커머스 연계(AI PPL, 상품 구매 정보 링크 등) 등 K-OTT 플랫폼 대상 신서비스 실증 지원 신규사업 계획 수립('26.6월)
IV-2-③	○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 수립 필요	○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을 통한 대응 추진('26.12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대책 추진	○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가성비가 좋은 단말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26.12월)
IV-2-④	○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동망 2.0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필요	○ 통신사업자별 운영중인 공동망 지역별 임무 배분, S/W개발, 장비구축·연동 일정 등 계획 수립('25.10월) * ('26.3) 경부·호남 핵심구간→('26.12) 경부·호남 전구간→('27.12) 고속철도 전구간 ○ 일정지연 없이 적기 완성될 수 있도록, 진도 점검회의*를 통해 진척사항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추진 중 * 통신3사, 제조사, 인허가기관(철도공사/공단) 등 참여 - 각 구간별 개선정도는 품질평가를 통해 확인 및 발표 예정
	○ 이동통신사업에서 번호 자원 부족의 문제점을 단순히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더욱 획기적인 정책수립을 고민할 필요	○ 회수 번호(016~019) 및 020 신규 식별번호 등 번호자원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클린번호 부여를 위한 번호자원 확보 추진('26년)
IV-3-①	○ 작년대비 전파산업 성장 및 중소기업	○ 전파산업 분야의 관련 신규사업 및 주요

	지원등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성과목표에서 제시한 전파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정책 등을 기획·발굴하여 성과목표에 구체적인 방안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IV-3-②	○ 국정과제인 AI 관련 산업 개발 관련하여 방송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방송장비 산업에 AI 관련 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표를 개발하겠음
IV-3-③	○ 성과지표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주파수의 발굴 및 공급 건수, 신규 산업에 제공하는 주파수 할당 건수를 포함하도록 수정 필요	○ 현 제도 개선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에 신규 주파수 발굴 및 공급 건수, 신규 산업에 제공하는 주파수 할당 건수 등을 추가 반영하겠음('26년~)
IV-3-④	○ 제도 개선 건수 이외에 해당 개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제시된 성과지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됨.	○ 중소기업 전자파 애로 기술지원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추가하여 성과목표의 정성적 평가 추진('26년 중)
V-1-①	○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R&D 중심에서 전주기 혁신정책으로 확장	○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등 과학기술 전반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칭)국민주권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26) 하고, - KDI, 산기협 등 기술기반 싱크탱크 기관과 협업하는 「^(가칭)혁신정책 발굴 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이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V-1-②	○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R&D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와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개편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총괄조정 외에도 협력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 * 협의회 위원장(現 혁신본부장)을 과기정통부 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 위원은 17개 시·도 단체장,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V-1-③	○ 소통을 넘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의 정책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기 위한 실효성	○ 연구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정착과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총괄관리자(IPL)에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사회문제해결 R&D가 현장소통에서 나아가 실제 국가사회적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제도 차원의 제안과 추진 필요	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 예정 ('26.상) ○ 사회문제해결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범국가적인 정책·제도개선 의견수렴을 통한 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26.12월)
V-1-④	○ 부처 및 분야별 유사 중복성을 점검하고 전략의 효율성 강화 필요	○ 부처·법령별 운영 중인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간 협업 소통을 강화하여 전략기술개발을 강화하겠음(~'26년)
V-2-①	○ R&D 예산 증가와 대형 R&D 사업 확대 시 사업기획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대형 R&D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배분 조정 시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대형 연구형R&D사업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관련 규정 제정('26.2월) 및 기술분야별 전문위 중심의 사업기획점검 실시(~'26.4월) * 예타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기법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배분조정시 사업기획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시 과감한 예산 미반영 등 조치('26.6월)
V-2-②	○ 수출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국방분야의 디지털, AI 신기술 도입 보다 가속화 필요 - 지능형 영상분석 및 데이터 기반 국방 무기체계 고도화와 같은 선택과 집중형 R&D 사업발굴이 요망	○ 국방분야 중장기 투자방향 수립(~'26.3월) - 국방 AI 대전환을 위하여 AI, 유·무인 복합 분야에 R&D 집중 - 특히, AI 등 민간 혁신기술 국방접목 강화를 위한 다부처사업 방향 포함 ○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도입 과제 발굴(~'26.8월) - AI, 네트워크, 양자 등 국방에 활용가능한 신규과제 수요조사('25.11~12월) 및 컨설팅·예산심의('25.2~8월) ※ 국방부, 방사청, 과기부, 해수부, 문체부, 행안부, 기후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수요제출
V-2-③	○ 계획의 단순 수립이나 예산 확대 등의 성과에 더하여 실질적인 '예산 조정'의 내용이나 근거 등의 제시가 필요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산 조정에 따른 효율성 측정 계획 제시 필요	○ 투자방향 수립 및 신규사업 컨설팅 등 '예산 조정'의 내용이나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완하겠음(~'26.6월) ○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산 배분·조정에 따른 공공·에너지 분야 예산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겠음(~'26.6월)
V-2-④	○ 해당 분야 투자 전략성 강화의	○ 정책수립 과정 나열방식의 현 성과지표

	구체적 내용이 부족	를 성과(결과) 중심의 성과지표(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등)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 추진('26.3월)
	○ 비효율적 사업의 정리 등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 제시 필요	○ '26년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시 사업 효율화 등의 구체적 사례 발굴. 제시('26.下)
V-2-⑤	○ <성과지표 1>은 전략 마련이 성과지표로 투자분석보고서와 투자전략 건수의 복합산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결과지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	○ 투자분석보고서, 투자전략은 예산 심의에 앞서 수립하는 정책으로 투입이 아닌 결과물에 해당하며, <성과지표 3> 에서 예산 배분·조정안의 전략성을 측정하고 있음.
	○ <성과지표 3>은 전략성 강화이지만 이를 신규사업 수 비율로만 계산하고 있어 금액 등을 고려한 지표 개선이 필요	○ 2026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전략 분야 예산 반영 비율 등 전략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산식으로 수정하여 성과지표에 반영 예정('26.3월)
V-3-①	○ 범부처 전문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실제 일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이 가진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의 증가로 모두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2022년 기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는 1,397개로 이 중 983개를 17개 주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음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시급	○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애로사항을 분석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간 담회, 실태조사 개선 등 통해 의견수렴 추진('26.6월 예정) - AI활용 연구관리 행정부담 완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착수 예정('26년)
V-3-②	○ 평가의 특성상 계획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계획에 없던 성과도 인정해 주는 정성적 평가 지표 발굴 필요 ☞ 잦은 평가지표 및 제도의 변화로 현장의 혼란 야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평가지표 확보로 연구의 수월성 및 도전성을 유도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시스템	○ 사업유형별 R&D성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26) ○ 현재 AI 장비검색시스템 개발 등 연구자 편

	고도화로 장비구입 및 활용의 신속 진행 필요 ☞ AI 활용으로 장비 카다로그,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알아서 장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시스템 구축 필요	의 증진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 중(ZEUS 3.0, ~'29) ※ 단, 장비 자동 등록은 시스템을 통한 기관별 연구 장비 관리 미흡 우려가 있어 고도화 요소에서 제외
V-3-③	○ 타부처 사업에도 제도개선이 안착되도록 부처간 소통 필요 ○ 만족도 조사 대상의 다양성 확보 필요 ○ 현장의 제도 이행률을 높이는 인센티브 강화 지속 추진 필요	○ 타부처 사업에도 제도개선이 안착될 수 있도록 부처간 소통을 지속·확대할 예정(상시) ○ 응답자의 통계적 분포 고려 및 설문 기간 등의 조정으로 다양성·대표성이 확보된 조사 계획 수립(9~10월 예정) ○ '제도개선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기존에 개선된 과제 대상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한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유공표창(연1회)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
V-3-④	○ 부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나, 제재처분을 포함한 연구현장에서의 제도·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 개선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전문성·적극성에 기반한 연구자권익과 연구윤리(보안) 문화의 안착 노력 필요 ☞ 향후 연구자율성 확대에 따른 연구관리 리스크 및 불확실성, 규정해석 모호성 증대 수반 가능성 있어 제도·정책 입안자와 수혜자의 충분한 양방향 소통과 검토 필요	○ 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하여 연구자권익보호와 연구윤리(보안) 문화의 안착에 노력하겠음
V-3-⑤	○ 축적된 data의 AI 분석 기능 도입으로 활용성 증대 요망 ☞ AI-Agent 개념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R&D 행정업무의 효율화, 통계 데이터에 의한 R&D 과제 기획,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IRIS 內 범부처 통합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 및 연구행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26.12월)하여 R&D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AI 학습을 위해 IRIS 보유 25만개 연구개발 과제, 112만명의 연구자 실적 및 성과 원문 정보(논문, 특허, 연구개발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전처리·정제 병행

V-3-⑥	○ R&D 예타 폐지에 관한 입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 TF를 구성하여 정책 홍보 노력 강화 필요 ☞ 국가 R&D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포함하여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혁신’을 통한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	○ R&D 예타 폐지 관련 개정안은 '25.11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쟁점이 없으므로, 국회 본회의 개최시 통과 가능 ○ R&D 예타 폐지 후속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연구자·부처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지속 추진(~'26.상반기)
VI-1-①	○ 외부 요청 대응 업무(주요회의체 대응, 회의개최) 관련 지표를 도전적 성과지표로 보완 필요 ○ 상반기 신속 집행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바, 성과지표 적절성을 재검토 필요	○ '26년 성과계획 수립 시, 외부 요청 대응 업무 관련 지표를 도전성을 결합한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부 예산을 통한 내수부진 및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독려 중이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을 추진하겠음
VI-1-②	○ 정부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 성과의 질적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6년 성과계획 수립 시, 정부혁신 성과를 양적·질적 도전성을 결합한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VI-1-③	○ 성과지표명(“민원행정 추진율”)은 과정지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지표명 변경 필요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와 같은 노력이 미흡함. - 민원담당자나 산하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추가적 노력 필요	○ 기존 지표명 ‘민원행정 추진율’이 과정지표로 오해되지 않도록 ‘민원행정 제도개선율’으로 지표명 수정 예정 ○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산하공공기관 대상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6년 점검계획에 민원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및 지도·점검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예) ‘찾아가는 민원처리 교육’, ‘기관 민원처리 부서 간담회’ 등
VI-1-④	○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AI활성화를 견인하는 능동적인 추진과제 발굴, 성공사례 만들 것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 AI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지표를 부내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실적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지표 자료출처를 보완하고 소속기관 적극적으로 독려 ('26년 내) ○ 현재 부내(소속, 산하포함) 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과 성과공유회 등

	전파된 사례 발굴 할 것	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실무 적용이 검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우수사례를 AI·데이터 기반 업무 모델로 재구성하여 기관에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공과 내부 교육·AI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확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26년 내)
VI-1-⑤	○ AI를 활용한 또는 AI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이버 공격 등 정보보안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보다 선제적이고 트렌드 지향적인 정보보호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이 기대됨	○ 사이버 안전센터 內 신종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 관제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적극 노력하겠음(~'26.12)
VI-2-①	○ 현안대응과 기획홍보의 균형 전략 마련 필요 ○ 소속기관 등과 홍보 협업 강화	○ 수시 현안대응 및 홍보패키지(사전-당일-사후)를 활용한 기획홍보 적기 추진 ○ 유관기관 홍보협업체 등을 통해 부처-기관 소통체계 마련 및 협력홍보 추진
VI-2-②	○ 온라인 홍보 확대에 따른 전문 적절한 인력·예산 확보 필요 ○ 소속기관과 연계한 홍보 등 SNS 홍보 효율화 제고	○ 전년 대비 45% 증액된 충분한 '26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홍보 전문 인력(5급 1명) 채용(~4월)으로 SNS 홍보 확대 추진 ○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인플루언서 등과 콘텐츠 기획·제작을 통해 홍보 시너지 제고 * 인플루언서(4회 이상), 소속 출연기관 연구자 출연 등 콘텐츠 협업 추진
VI-2-③	○ 과제특성상 새로운 정책이나 아젠다 추진이 아닌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에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고려한 쉐신 노력으로 관성을 극복해갈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의 적극성과 도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아젠다를 중심	○ AI활용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구성원(직원)의 수요 발굴 등을 통한 성과목표*의 질적 개선 도모('26.6월)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만족도) - AI 관련 교육 강화, 노사협의회 개최, 정책관련 직원 선호도 조사 등 추진 ○ 구성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정책 기획·관리과정 운영(연중 3회), 실국별

	으로 '구성원 전문성 강화'라는 최종 목표를 상기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브라운백 미팅 추진(상시)
VI-2-④	○ 혁신적인 연구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처 업무, 관련자(특히, 연구자) 특성을 감안한 감사 방향, 원칙, 기법 개발 필요	○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 규정 내의 면책 제도를 적극 운영하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익추구 등의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감사 방향 설정('26.1월)
VI-2-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유의 업무에 적절한 중대재해, 보안테러 등에 대한 대비계획 및 관련 업무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자체 중대재해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 ^{1차} , 현장점검 ^{2차} 체계를 마련하여, 소속기관(우체국, 전파관리소 등)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점검 기관을 60여개로 확대 추진('26.2월~) ○ 과기정통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수준진단(~'26.11월) 및 「과기정통부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등 추진(~'27년)
VI-3-①	○ '과학기술외교 활동 성과' 지표명은 의미상 혼동될 수 있어 명칭을 바꿀 필요	○ 추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표명을 '과학기술외교 역량 기반 강화 활동'으로 변경 예정('26.上)
VI-3-②	○ 현장의견 수렴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	○ 차년도 결과보고서에 미주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성과 중에 현장의견이 반영된 사례에 대해 설명하여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간 연계성 강화('26.12월)
VI-3-③	○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네트워킹 포럼 개최를 확대하여 EU와의 협력 강화 필요	○ 한-EU 연구혁신의 날, 호라이즌 유럽 내 클러스터(분야)별 연구자 교류 행사 등 개최를 통한 양국 간 협력 기반 마련(연중)
	○ ODA 관련 협력 형태 다변화 및 성과지표 수정·보완 검토 필요	○ 시행기관 협의회 통해 ODA 관련 성과지표 및 사업 개선 방향 논의('26.上)
VI-3-④	○ 국제기구 활동 참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새로운 플랫폼의 발굴 및 분석 등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앞으로는 지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글로벌 의제 동향 분석을 통해 핵심 의제를 선별하고 국제기구 활동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연중)
	○ 성과지표 산출 시 각종 협력 활동 또는 대응 건수를 일률적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 국제기구별 전략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성과지표 가중치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26.上)

	다자 활동의 전략성 제고를 위해 각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대응 건수에 대한 무게를 다르게 책정하는 등의 검토와 같은 지표 산출 방식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